ISSN 1739-5593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05년 제5호

국제협력동향

KOICA
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동향

2005년 제5호

한국국제협력단

목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Ⅰ. 논단

1. 아프리카와 개발 : Development and Africa ····· 11
김채형 _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2. 아동과 모성 보건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지원 ····· 28
한희정 _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원

Ⅱ. 개발협력동향

1. OECD/DAC 및 국제기구 원조 동향
- 개발원조위원회 회의결과 ····· 47
- Non-DAC 공여국과의 ODA 정책대화 결과 ····· 50
- 제60차 유엔총회 제2위원회 일반토의 ····· 52
- 2005년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 59
-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신파트너십(NEPAD) ····· 63
- DDA 무역원활화협상(EC기술지원사업) ····· 65

2. 공여국 원조 동향
1) 선진국 개발원조 개관
- 호주 대외원조개관 ····· 66
- 일본 대외원조개관 ····· 78

2) 공여국 원조 동향
- KOICA-GTZ 전략적 파트너십 심포지움 결과 ····· 92
- JICA 모로코사무소의 삼각협력 현황 ····· 96
- 스리랑카-일본간 기술협력 협정체결 ····· 98
- 아체 · 니아스 지원을 위한 조정회의 개최 ····· 100
- 인도네시아 원조공여국(CGI) 중간점검회의 개최 보고 ····· 103
- 태국 최초 ODA 공여관련 보고서 발표 ····· 108

3. 수원국 원조동향
- 대 스리랑카, 몰디브 8월 원조동향 ····· 109
- 스리랑카 9월 원조동향 ····· 113

Ⅲ. 기타

1. 지역연구 ····· 121
- 에티오피아 개발 파트너십
이동구 _ 주에티오피아 KOICA사무소장

2. 개발협력 관련 국제기구 소개 ····· 144
- 국제백신연구소(IVI)
손미향 _ IVI 홍보개발부장

3. 개발NGO 소개 ····· 156
- 지구촌나눔운동
한재광 _ 지구촌나눔운동 사업부장

I. 논단

아프리카와 개발: Development and Africa

(What should progressives do following the New York Summit?)

김 채 형 /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I. 아프리카의 현황과 문제점

1. 아프리카의 경제 및 빈곤현황

1) 경제현황

□독립 이전의 아프리카 경제는 유럽인들의 착취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의 경제발전은 내부발전이나 독립을 위한 기술 또는 산업기반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서구열강 제국주의국가들의 한 경제단위에 불과하였음.

□현재도 아프리카의 국내시장은 충분히 발달해있지 못하며, 인적 · 사회적 자본이나 산업화와 발전을 위한 제도적 하부구조도 충분치 않음.

- 사회간접자본의 경우에는 식민지시대의 유산이 아직도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아프리카의 도로와 통신망은 열대과일과 광물의 수출, 식품과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입을 위하여 존재하며, 아프리카 내 성장과 무역을 위한 도로와 통신망은 미비한 실정임.
- 철도와 도로망에서도 남부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각국의 국내연결망과 국가간 연결망이 미비함.
- 항만을 통한 운송망은 아프리카내의 해상무역 운송망보다 아프리카 밖의 국가들과 더 잘 구축되어 있음.

□경제적으로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질병, 인적자원개발 및 조직화 미흡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저개발 상태에 있음.

- 철, 금 등 광물자원과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매장량은 세계적 수준이나, 접근이 쉽고 개발 이익이 큰 지역은 대부분 서방국가들의 이권 각축장화되어 있음.

□아프리카경제를 소득수준 지표로 살펴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는데, 53개국 중 34개국이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7개국이 저소득국(Low-Income Countries), 7개국이 중저소득국(Lower Middle-Income Countries), 4개

국이 중고소득국(Upper Middle-Income Countries), 1개국(리비아)이 선진개도국(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에 해당함.[1]

□총 GDP 규모(국가별 2002년 또는 2001년 기준)를 보아도 100억불을 넘는 국가는 8개국에 불과하며, 100억불 이하 45개국 중 14개국은 10억불에도 미치지 못함(10억불~50억불 23개국, 50억불~100억불 8개국).[2]

□그러나 2000년 이후 아프리카 경제는 조금씩 성장세를 보여, 2004년도 경제성장율은 지난 8년내 최고치인 5.1%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GDP도 3% 가량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3]

- 총 GDP 성장률은 1996~2002년간 3.8%, 2003년도 4.4%, 2004년도 5.1%였으며, 2005년도 4.7%, 2006년도 5.2%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1980~90년간 평균 1.5% 증가하는데 그쳤던 경상수출액은 1997~98년간 평균 3.4%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무역수지 흑자는 총 GDP의 5.7%에 달하였음.[4]

- 무역수지 흑자는 원유 가격의 상승에 크게 기인하는데, 총 GDP 대비 무역수지 비율은 1996~2002년간 1.6%, 2003년도 2.8%, 2004년도 5.7%였으며, 2005년도에는 7.1%, 2006년도에는 6.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을 주도하는 것은 1차산품인데, 전반적으로 단지 2~3개 상품의 수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몇몇 국가들에서는 단지 1개의 상품의 수출에 의존함.

- 주요 원유수출국인 SSA(Sub-Saharan Africa: SSA) 5개국(나이지리아, 가봉, 콩고, 카메룬, 앙골라)의 원유수출량 중 나이지리아의 수출량이 70%를 차지하고 있음. 원유수출국의 인구는 전체 SSA인구의 1/3에 불과, SSA 인구의 2/3가 거주하는 원유비생산국가의 거시경제는 석유가격이 상승할 경우 교란될 수 있으며 특히 빈곤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아프리카에 대한 해외투자는 확대되어 왔는데, 대SSA(남아공 제외) 해외직접투자는 1985년~1998년간 3배가 늘어났음.

- 이러한 투자의 상당부분은 나이지리아, 가봉, 앙골라의 자원개발(광물 및 원유추출)에 대해 이루어졌음.

2) 빈곤현황

□2001년 현재 세계 인구의 빈곤율(1일 1달러 미만 생활)은 20.7%인데, SSA 지역의 빈곤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46.4%임.[5]

1) OECD/DAC List of Aid Recipient(2003.1.1일자) 기준임.
2) 외교통상부, 『아프리카 편람(2003)』 pp.15~18
3) AfDB/OECD, 『African Economy Outlook(2004/5)』, pp.23~24
4) Ibid., pp.29
5)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5』 pp.34

□1981년~2001년간 세계의 빈곤율은 40.4%에서 20.7%로 줄어들었으나, SSA 지역은 41.6%에서 46.4%로 오히려 증가하였음.[6]

- 동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빈곤율은 57%에서 14%로, 남아시아는 52%에서 32%로 감소

□세계 인구 중 소득 하위 계층 20% 인구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남아시아의 비중은 1980년 1/2에서 2000년 1/3로 감소한 반면 SSA의 비중은 15%에서 36%로 증가하였음.[7]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은 대다수가 최빈국 및 저소득국가로서, 특히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이후, 내전, 민족 · 부족간의 갈등, 국가간 분쟁, 테러, 대규모 난민 등의 문제 발생과 더불어, 농업분야의 미약한 성장, 산업생산량의 감소, 교육, 공중보건, 주택, 상수도 등 사회지표의 악화, 폭발적인 인구성장률로 인한 식량부족, 환경파괴, 에이즈발생 등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빈곤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전세계 분쟁 발생 건수에서 아프리카(대륙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30%(1946~89)에서 38%(1990~2003)으로 증가[8]

2. 분야별 현황 및 문제점

1) 인구

□2003년 7월 현재 아프리카 인구는 약 8억 3700만명으로, 이중 약 7억명이 SSA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9]

-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1억 3,000만 명이며,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이 약 4천 500만 명의 인구를, 동부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가 약 6천7백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적 인구대국임.

- 반면 인구소국도 많아 총 53개국 중 인구 천만 이상 국가는 23개국에 불과함(인구 100만 이하 6개국, 100만~500만 13개국, 500만~천만 11개국).

□인구성장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는 경제성장이 연 5% 이상 되어야 현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있지만 생산과 소비, 그리고 저축을 할 수 있는 인구 구성의 허약성 때문에 이 같은 성장목표를 달성하기에 많은 제약을 받음.

- 아프리카의 인구비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최상의 노동생산 연령층인 청년층은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으로 인해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2)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10]

□2003년 SSA에서의 HDI는 0.515로 전세계 평균인 0.741에는 물론, 개도국 평균인 0.694에도 미치지 못함.

6) Ibid., pp.34
7) Ibid., pp.36
8) Ibid., pp.154
9) 외교통상부, 『아프리카 편람(2003)』 pp.10~13
10)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5』 pp.220~222

□HDI 하위 32개국(0.5 이하) 중 예멘과 하이티를 제외한 40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임.

※ 생활수준에 관한 지표인 HDI(Human Development Index)는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조사해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로 비물질적인 요소까지 평가한다는 데서 국민소득지수와 다름.

3) HIV/AIDS 와 말라리아 등 질병의 만연[11]

□2004년 말 현재 SSA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약 13%에 불과하나, 전세계 HIV/AIDS 감염자 추정 인구의 약 64%(약 2,500만 명)가 SSA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2004년 한 해 동안 약 230만 명이 AIDS로 사망하였으며, 15~49세 인구의 약 7.5%가 AIDS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

□동부와 중앙아프리카에서 HIV/AIDS가 최초로 확산되었지만 현재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은 남부 아프리카 지역으로 15세~49세 성인의 감염률이 최소 10%인 것으로 파악(약 1,140만 명)

- 보츠와나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서 성인의 37%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질병의 확산이 용이한 이유는 케냐와 잠비아의 경우 도시화의 진행, 보츠와나와 레소토와 같은 국가들은 노동력의 지역간 이동 때문인 것으로 보임.

□또한 말라리아 문제도 심각해, 전세계 말라리아 사망자(매년 천만명 추산)의 90% 이상, 1일 약 3천명이 SSA에서 사망하고 있음.

- 사망자의 대부분은 아동인 것으로 파악

□HIV/AIDS 감염은 SSA 국가들의 사회 · 경제 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농업 및 공업 노동력과 공공서비스의 생산성 감소

4) 기타 보건 관련 지표[12]

□아프리카에 만연한 질병은 결과적으로 평균수명 단축을 가져와 SSA 지역의 평균 기대수명은 2003년 기준 46.1세로, 세계 평균 67.1세는 물론 LDC 평균 64.9세에도 미치지 못함.

□SSA의 인구 천 명당 유아사망률은 105명, 5세 이하 유아사망율은 179명임(개도국 평균은 각각 60명과 88명임).

5) 교육

□개도국들의 초등학교 진학률은 지난 30년 동안 많이 개선되었지만, SSA지역의 진학률은 아직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음.

- 2003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등록률이 50% 이하인 나라는 7개국으로, 모두 SSA지역 국가임(수단(46%), 지부티(36%), 에리트리아(45%), 기니비소(45%), 말리(45%), 부르키나파소(36%), 니제르(38%)).

6) 원조와 외채

□2003년도 기준 전세계 ODA 총액 697.8억불 중 약 32%인 226.9억불이 SSA 국가에 지원되었음.[13]

- 이는 총 GDP의 약 18.6%로 1990년 12.0%보다 크게 증가하였음(개도국 평균은 1990년 2.7%, 2003년 3.0%임).

□대아프리카 원조는 GNI 대비 규모로 살펴볼 때 1990년 0.13%에서 1999년 0.06%까지 꾸준히 하락하였음.

- 이는 냉전종식 및 세계경제 침체와 함께 전체 ODA/GNI 비율이 감소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함.
- 다만 2000년 천년개발목표의 설정, 대아프리카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함께 2000년 이후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 2003년 현재는 0.09%를 기록하고 있음.

□아프리카의 외채문제도 매우 심각해 2005년 9월 현재 38개 고채무빈국(HIPC) 중 32개국이 SSA 국가임(나머지 중 4개국은 중남미, 2개국은 아시아).

- 아프리카국가들의 과중한 외채부담은 사회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지역국가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이며,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빈곤의 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외채문제는 해외민간투자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중채무로 외국투자자들은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기피, 빈곤의 악순환 구조를 형성함.
- 과중한 외채는 아프리카국가들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은 물론이고, 기아, 문맹, 그리고 아프리카대륙 전역에 퍼져있는 AIDS에 대한 대처 등 기본적 생존권 유지를 위한 분야에의 지출까지 억제함.

7) 산업과 무역 구조

□아프리카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1차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발달은 미비한 실정임.

□1960년부터 1990년대까지 SSA의 대부분 국가들이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추구하였지만 비효율적인 산업의 잔재만을 남겨놓았음. 충분한 역내 시장의 부족은 낮은 산업가동률과 해외시장 개척 동기 상실로 이어져 심각한 외환부족을 낳았음

□낮은 기술집약도와 교육 · 훈련의 부족으로 SSA 국가들은 해외직접투자의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었음.

- 많은 아프리카기업 들은 해외시장에 대한 경험, 조직적 마케팅 기술이 부족함.

11) http://www.unaids.org/en/geographical+area/by+region/sub-saharan+africa.asp
12) Ibid., pp.252~253
13) Ibid., pp.280~283
14) AfDB/OECD, 『African Economy Outlook(2004/5)』, pp.19
15) HIPC(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 고채무빈곤국) : IMF나 세계은행에서 매우 양허적인 조건으로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빈곤국으로, 전통적인 외채경감조치 이후에도 외채원리금상환부담이 지속가능한 적정수준을 넘는 고채무빈곤국을 말한다. 이들 HIPC 국가가 IMF 및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및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이행할 경우 확대 HIPC 이니셔티브에 의한 외채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산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데 비해 달리 제조물품의 수출 비중이 낮은데, 이는 아프리카국가들의 제조물품에 대한 경쟁력 부재와 높은 운송비에 그 원인이 있음.

□SSA의 주요 수출은 원유를 제외하면 크게 네 범주로 구성됨.

- 첫 번째는 수단의 면화, 나이지리아의 고무와 야자기름, 서부아프리카국가들의 원목과 같은 농업원료제품임.
- 두 번째는 케냐, 우간다의 차와 커피, 코트디부아르 가나와 나이지리아의 코코아와 같은 식음료제품임.
- 세 번째의 주요 수출제품은 잠비아의 구리, 시에라리온 콩고민주공화국, 남아공의 다이아몬드, 가나와 남아공의 금과 같은 광물임.
- 네 번째는 밀과 옥수수와 같은 식품류임.

□SSA국가들은 1975년에 체결된 로메협정 이후 EU국가들과 비상호주의적 특혜무역관계를 통해 많은 이득을 보았지만, 2000년에 로메협정이 종료되고 Cotonou협정이 발효되어 2005년부터는 최빈국들만이 유럽연합의 시장에 대한 상품수출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었음.

- 원조와 로메협정을 통한 비상호주의적 특혜무역이 SSA국가들의 무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SSA의 전통적 생산구조와 무역패턴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비판도 있음.
- WTO협정이 발효된 이후 EU의 무역자유화가 가속되면서 SSA국가들이 누려왔던 비상호주의적 특혜무역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은 어떻게 수출을 다각화시키고 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음.

Ⅱ. 아프리카 개발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1. Commission for Africa(아프리카위원회) 보고서(2005년 3월)[16]

1) 아프리카위원회의 설립

□아프리카위원회는 Blair 영국총리가 2004년 2월 아프리카 개발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아프리카와 국제사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권고하기 위해 창설한 위원회로서 17명의 개인자격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Blair 영국총리임.

<위원 구성>

주요국대표 : 블레어 영국총리, 영국 재무장관, 영국 국제개발장관, 영국 아프리카지원단체장, 낸시 베이커 미국 전 상원의원, 프랑스의 아프리카담당 대통령 특보, 캐나다 재무장관, 중국 전인대 상임위원,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 위원장

아프리카대표 : 탄자니아 대통령, 에티오피아 수상, 남아프리카공화국 재무장관, 우간다 개발청장, 나이지리아 은행장, 보츠와나 은행장, 탄자니아 경제개발위원, 코트디브와르 전 개발장관

□아프리카위원회는 2005년 3월 아프리카개발관련 보고서(제목: Our Common Interest)를 발표하였음.

2) 보고서의 주요 요지

□아프리카와의 " 새로운 파트너십(a new kind of partnership) "을 역설하며, 아프리카국가들에 대한 개발원조 증가, 선진국들의 대아프리카 무역장벽 제거, 아프리카국가들의 통치능력(governance) 강화, 아프리카 최빈국에 대한 부채탕감 등을 주장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과 같음.

□아프리카국가들에 대한 개발원조 증가

-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현재의 두 배 이상 늘려, 2006~2010년(5년간)까지 매년 250억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발전정도를 검토하여 제2차 기간인 2011~2015년간 지원 연장
- 아프리카국가들의 취약한 인프라가 그동안 아프리카 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한 바, 향후 5년간 매년 지원액 중 100억불 이상을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며(제2단계에서는 매년 200억불 소요), 나머지 지원액은 보건과 교육분야에 투자

□선진국들의 대아프리카 무역장벽 제거

- 아프리카국가들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선진국들의 부당한 무역장벽 제거가 시급함. 특히 대아프리카 원조액의 16배에 해당하는 EU, 미국, 일본 등에 의해 지급되는 연간 3,500억불의 농업보조금의 철폐를 요청
- 아프리카 생산품에 대하여 관세장벽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도 낮추어야 함.
- 선진국들은 무역장벽 제거에 대한 대가로 아프리카국가들에 대하여 어떠한 양허도 요청하여서는 안되며,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나 무역조건에서 무역자유화를 아프리카국가에게 강요할 수 없음.

□아프리카국가들의 통치능력 강화(Governance and Capacity - Building)

- 지난 50년 동안 아프리카의 불행은 국가역량 및 투명성 부족에 기인하였음.
- 아프리카 정치지도자들은 이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부패를 척결하고 적절한 경제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선진국들도 뇌물공여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아프리카 최빈국에 대한 부채 탕감

- 아프리카 최빈국들(나이지리아 등)에 대한 폭넓은 부채탕감이 필요하며, 선진국들은 국제기구들(세계은행 및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협력하여 부채탕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평 가

□상기 보고서는 아프리카의 저개발의 원인으로서, 아프리카국가들의 자체 책임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책임(기업들의 뇌물공여, 부정자금, 무역장벽 설치 등)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

16) www.commissionforafrica.org 참고

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음.

□Malloch Brown UNDP 총재는 상기의 보고서 발표를 환영하고 동 보고서가 유엔사무총장의 밀레니엄선언 이행보고서 작성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영국 언론은 상기 보고서가 아프리카의 분쟁종식과 지원 확대, 부채의 경감 등을 목적으로 한 대아프리카의“ 마샬플랜 ”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이라크전으로 실추된 영국 블레어 총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외 홍보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음.

2. 2005년 G-8 정상회의(7월, 영국)

1) G-8 정상회의와 아프리카 개발문제와의 관계

□G-8 정상회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관련 중요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2001년 Genoa 정상회의에서는 NEPAD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였음.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2001년 10월 아프리카 국가지도자들은 아프리카국가들의 빈곤완화, 지속성장 및 개발에 대한 비젼 속에 동 국가들의 평화, 안정, 민주주의, 건전한 경제관리 및 인간중심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선언인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를 발표하였으며, 동 선언에 있는 목표를 달성키 위해 15개국의 국가수반을 위원으로 하는 추진위원회 조직을 창설함.

■NEPAD 사무국은 남아공 Pretoria에 있으며, 현재 5개국(알제리, 이집트,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공)이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음.

■NEPAD의 주요내용

- Good Governance에 대한 약속:
  - 아프리카정부들의 ownership과 responsability를 강조
  - 이를 위해 UNECA(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주축이 되어 아프리카국가들이 스스로의 Peer Review 방법을 개발
- 분야별 우선순위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
  - 우선순위 분야로는 digital divide, 에너지, 교통, 상수도 및 보건, 인적자원개발, 농업, 환경, 문화, 과학 및 기술을 들 수 있음.
  - 공공 인프라 및 교통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2002년 Kananaskis 정상회의에서는 G-8과 아프리카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시작하는 Africa Action Plan을 주창하였음.

□2003년 Evian 정상회의에서는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아프리카의 능력을 고양시킬 G8/Africa Plan을 발표하였음.

2) 2005년 G-8 정상회의 결과문서

□2005년 7월 8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Gleneagles에서 G-8 정상회의는“ Gleneagles Communique ”를 채택함.

- 상기의 코뮤니케에서 아프리카의 개발 지원을 위한 포괄적 계획에 합의하고 별도 선언을 발표함.

□아프리카와 개발과 관련, 7가지 주요 의제에 대하여 합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아프리카에서의 추가적 발전

- 아프리카의 추가적 발전은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그 국민들에 달려 있음을 확인하며, 아프리카대륙을 발전시키고 올바른 통치를 촉진하며,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을 취하겠다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약속을 환영함.
- 아시아에서의 성공적인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는 것과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의 중요성을 인정함.

□평화와 안정

- 평화가 성공적인 개발의 첫 번째 조건임을 강조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아프리카를 건설하기 위한 아프리카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약속함.

□올바른 통치의 촉진

-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NEPAD의 강력한 선언을 포함하여 효율적 통치를 촉진할 아프리카기구들의 약속을 환영함.
- 아프리카측의 약속에 대하여 G-8의 정상들은 아프리카기구(AU)와 NEPAD를 지원할 것을 약속함.

□사람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People)

-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과거 20년 동안 수명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건, 교육과 식량안전 증진을 위한 아프리카의 전략을 지원할 것을 약속함.
- 교육 및 보건과 관련해서는 UN천년선언에 표명되어 있는 대로 2015년까지 모든 아동이 의무적인 초등교육을 받게 하고 AIDS나 말라리아 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기본적인 보건시설을 활용하게 하려는 아프리카측의 방침을 지원하기로 약속함.

□성장의 촉진(Promoting Growth)

- 사기업이 성장과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올바른 통치와 법의 지배를 통해 외국의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강력한 투자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을 지원할 것임을 약속함.
- 농업은 대다수 아프리카인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분야로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 아프리카정부들은 농업에 자국 정부 예산의 10%를 투입하기로 약속하였으며, G8은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개발을 위한 금융

- 성공적인 개발은 모든 분야 즉, 평화와 안정, 올바른 통치, 보건 및 교육, 경제성장, 시장접근, 무역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하였으며, ODA의 증액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2002년 몬테레이개발재원회의에서의 합의, UN 천년개발목표 등)를 위하여 요구된다고 지적함.
- G-8 국가들은 2010년까지 대아프리카 원조를 배증(2004년 기준)하여 2010년까지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매년 500억불(이중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연간 250억불) 증가시키고 2005년 6월 G-8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아

프리카에 대한 부채를 탕감하기로 합의함. 또한 파리클럽의 170억불 규모 나이지리아 부채탕감을 환영하였음.

※ G-8 국가들의 원조증액 약속은 다음과 같음
- 독일 : ODA/GNI 비율 0.51%(2010년), 0.7%(2015년) 달성
- 프랑스 : ODA/GNI 비율 0.5%(2007년), 0.7%(2012년) 달성, 이중 2/3은 아프리카에 지원
- 영국 : ODA/GNI 비율 0.7% 달성(2013년), 2007/8년까지 아프리카 원조2배증(2003/4 기준)
- 미국 : 2010년까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2배증(2004년 기준)
  연간 50억불의 Millennium Challenge Account를 출범
  AIDS치료를 위한 긴급계획에 150억불, 2005년에 아프리카의 인도주의적 원조에 20억불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12억불을 제공할 예정임.
- 일본 : 향후 3년간 대아프리카 원조 2배증, 향후 5년간 50억불 규모의 Health and Development Initiative를 개시, " Enhanced Private Sector Assistance for Africa "기금에 5년간 10억불 제공
- 러시아 : 아프리카국가들의 113억불의 채무를 탕감
- 캐나다 : 2008/9년까지 대아프리카 원조 2배증(2003/4년 기준)

3) G-8 재무장관회담 논의 결과

□7월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된 G8 재무장관회의(2005년 6월 11일, 런던)에서 G-8재무장관들은 최빈국가의 대국제기구 부채 전액 탕감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 18개 최빈국(대부분 아프리카국가)이 IMF,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에 진 부채 전액(총 400억불)을 탕감하는데 합의
- 한편, 일본 및 독일의 우려를 반영하여 재무장관들은 IMF와 세계은행이 부채탕감에 따른 부작용(부패증가 및 무분별한 추가차용 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

□그 외 아프리카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원조제공 문제 등 논의

3. 천년선언이행검토를 위한 유엔고위급본회의 (New York Summit)

1) New York Summit(05.9.14~16, 뉴욕)의 의의

□ 2000년 유엔 천년정상회의는 평화와 안보, 개발, 유엔개혁 등 각 분야의 비전을 담은 Millenium Declaration(천년정상선언)을 채택

□2001년 제56차 유엔총회는 상기 선언의 개발분야 이행을 위한 천년개발목표(MDGs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채택

- MDGs의 8개 목표는 빈곤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양성평등, 아동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HIV/AIDS 등 질병퇴치,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개발을 위한 전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임.

□2005년 9.14~16일간 개최된 UN 정상급회의(New York Summit)에서는 MDGs를 포함한 천년선언의 이행현황을 검토하고 결과문서를 채택함.

2) New York Summit 결과 문서 요지(개발 분야)

□뉴욕 정상회의 결과문서의 " 개발(Development) " 파트는 아래 내용으로 구성

-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개발을 위한 금융, 부채, 무역, 교육, 농촌 및 농업개발, 환경보호, HIV/AIDS와 보건, 양성평등과 여성, 개발을 위한 과학과 기술, 최빈개도국, 아프리카의 특별욕구 충족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 천년선언과 몬테레이 컨센서스에 포함된 국제적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함. 각 국가는 자국 경제 · 사회 개발의 일차적 책임을 지며 각국의 노력은 글로벌 프로그램과 정책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인정함.

□부채

- 개도국의 부채문제에 대한 긴급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최빈국의 국제금융기구 부채 100% 탕감을 위한 G-8 국가들의 결정을 환영함.

□무역

- 무역이 경제성장과 고용 및 개발을 촉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함. 최빈개도국의 모든 수출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을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함.

□HIV/AIDS와 보건문제

- HIV/AIDS, 말라리아 등의 질병이 개발목표 달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며 이러한 질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함을 확인함. 2010년까지 개도국의 국가보건체제를 강화할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족시키기로 약속함.

□양성간 평등문제와 여성문제

- 북경선언의 효과적 이행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에 도달하는데 중요함을 확인함.
- 2015년까지 초 · 중등교육에서 양성간 불평등을 제거하고, 노동시장과 고용에서 여성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3) New York Summit 결과 문서 요지 (아프리카 개발 관련)

□특히 개발재원 동원과 아프리카 개발과 관련, 아래 내용에 합의

□개발을 위한 금융

- 개발을 위한 재정적 자원을 동원하고 수원국에서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함.
- 선진국이 2015년 까지 GNP의 0.7%, 2009년까지 적어도 0.5%를 ODA로 제공하는 시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환영하고, 최빈국에 대하여는 GNP의 0.15% 내지 0.2%를 ODA로 제공하려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촉구함.
- 원조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환영하며, 원조의 효율성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려는 행동을 취하기로 확인함.
- 국가의 개발전략에 충당되는 국내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빈곤층에게는 소액신용제도(microcredit)을 통한 재정적 서비스의 접근 필요성을 확인함.

- 개발을 위한 금융에서 민간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함.
- 개도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외국의 직접투자를 촉진함.
-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국가 및 최빈국과 소규모 도서국가에 안정적인 국제자본흐름을 촉진함.

□아프리카의 특별 욕구 충족

-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NEPAD와의 협력을 강화함.
- 2015년까지 모든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게 하려는 아프리카측의 약속을 지지함.
- 아프리카연합(AU), NEPAD, World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을 포함하는 국제적 컨소시움의 구축을 지원함.
- 아프리카 최빈국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100% 부채탕감을 통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외부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촉진함.
-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무역체제에 충분히 통합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2005년 시작된 African Green Revolution으로서 아프리카국가들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지원함.
- 분쟁을 방지하려는 아프리카의 지역기구의 노력을 지원함.
- HIV/AIDS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말라리아와 기타 질병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원함.

4. 아프리카 개발방향

1) 아프리카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논의 결과

□2005년 3월 Commission for Africa(아프리카 위원회)의 보고서, 2005년 7월 G-8 정상회의의 결과문서, 2005년 9월 뉴욕정상회의 결과문서 등을 종합해 보면, 아프리카의 개발을 위하여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아프리카에 대한 ODA 지원규모를 현재의 두 배로 늘리고, 특히 최빈국에 대한 원조를 증가시킴.
- 아프리카의 최빈국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100% 부채탕감을 통해 아프리카국가들의 과중한 대외부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진함.
- 아프리카국가들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선진국들의 무역장벽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
- 아프리카국가들에 대한 외국의 직접투자를 촉진하여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을 추진함.
- 아프리카의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의 평화유지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아프리카국가들의 통치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선진국들도 뇌물공여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선진국은 아프리카의 보건 및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질병퇴치활동을 전개해야 함.

2) 우리의 입장

□아프리카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정치와 거시경제의 안정 및 구조개혁노력을 강화하는 아프리카국가들의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와 더불어 선진원조공여국과 국제기구뿐 아니라 선발개도국들도 아프리카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7월 개최된 G8 정상회의의 결과문서에서 언급하였듯이 아프리카에서의 추가적 발전을 위해서 아시아에서의 성공적인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남협력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 선진국의 원조보다는 유사한 개발단계를 거친 선발개도국의 지원이 경우에 따라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바, 우리나라와 같은 선발개도국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아프리카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낮은 소득과 저성장으로 인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아프리카의 개발재원 동원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ODA지원이 중요하며, 또한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자본의 유치가 활성화되어야 함.

- 아프리카국가는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행정의 투명성 확보, 법제정비 등 투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여국도 아프리카국가의 투자유치전략의 수립을 지원하고 공여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함.
- 아프리카국가는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하여 제조상품의 생산을 위한 공장을 건설하고 필요한 노동자의 고용확대 등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하층계급의 경제적 자립을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국제사회는 아프리카국가의 과도한 외채원리금 상환이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아프리카의 외채문제해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함.

□국제무역은 아프리카국가들에게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을 완화하는 한편, 아프리카국가들이 세계경제로 통합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며, 특히 수출소득증가는 아프리카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필수적임.

- 따라서 국제사회는 아프리카국가들이 다자무역체제에 참여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무역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들의 인적 자원개발을 위해 지원해야함.
- 우리나라는 최빈국의 수출품에 대해 시장접근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최빈국의 89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음.

□아프리카국가들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의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국제사회는 아프리카국가들의 인적자원개발노력에 대해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 특히 오늘날 정보지식시대에 있어 인적능력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인데, 아프리카국가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는 아프리카 국민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

III.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지원방향

1.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지원현황

1) 개 관

□한국은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창설하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대외원조활동을 시작하였음.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전체 원조의 약 10% 정도가 아프리카 지역에 지원되었음.

- 무상원조의 경우 90년대 전반에는 지원 비중이 20%에 달하였으나 90년대 후반에는 5%까지 감소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동구 · CIS 국가에 대한 신규 원조 수요의 발생과 아시아 · 중남미 지역에 대한 무상원조 확대에 기인함.

2) 무상원조

□KOICA의 대아프리카 무상원조 사업은 물자지원, 연수생초청, 의료단 파견 등을 중심으로 실시 중이며, 일부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아프리카가 아직까지 1차산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 연수생 초청은 농촌개발지원 분야와 경제성장을 위한 능력배양 분야에서 주로 진행되었음.

□전문가파견사업 또한 농림수산업 분야와 행정관리 분야에 주로 파견되었음. 특히 아프리카의 취약한 의료보건 현실을 감안, 다수의 의료단을 파견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의 의료보건분야 협력을 실시하였음.

□물자지원사업은 정부행정능력강화를 위한 사무기기 지원 및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기자재와 기초교육분야 강화를 위한 교육기자재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대아프리카 협력규모가 크지 않아 프로젝트 사업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케냐의 ' 나이로비공대 현대화 지원사업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 국립직업 기능검정센터 지원사업 ', 리비아의 ' 알타파 과학대 전산화사업 ', 모로코의 ' 자동차 정비직업훈련지원 ' 등 직업훈련원을 중심으로 한 능력배양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음.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은 정치적 중요성이 높은 이집트,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케냐, 가나, 세네갈, 탄자니아, 한국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 등임.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ODA 지원 실적(1990 ~ 2004)>

(단위 : US$ 백만)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계
무상원조	금액	0.13	5.33	6.29	6.14	7.81	8.49	8.05	7.10	5.88	3.35	5.11	4.27	8.14	8.96	14.15	99.20
	%(1)	3.99	21.29	20.30	18.79	20.31	16.94	15.07	12.96	15.80	8.60	10.69	8.06	12.20	6.16	7.33	11.39
유상원조	금액	8.99	0.00	5.82	17.42	6.12	6.71	6.85	5.18	-0.66	6.84	19.16	0.11	-2.51	10.02	14.41	104.46
	%(2)	100.0	0.00	40.90	63.48	28.31	31.43	9.80	9.16	-0.75	7.40	22.97	0.09	-1.79	10.05	12.14	10.80
합계(금액)		9.12	5.33	12.11	23.56	13.93	15.20	14.90	12.28	5.22	10.19	24.27	4.38	5.63	18.98	28.56	203.66

※자료 : OECD, The DAC Aid Statistics
비율(1) : 대아프리카 무상원조 / 전체 양자간 무상원조
비율(2) : 대아프리카 유상원조 / 전체 양자간 유상원조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무상원조 수원국 순위>

(단위 : US$ 백만)

순위	수원국	지원액
1	Egypt	9.71
2	Ethiopia	7.04
3	Sudan	5.06
4	Tanzania	4.85
5	Cameroon	3.87
6	Tunisia	3.53
7	South Africa	3.24
8	Kenya	3.08
9	Ghana	3.07
10	Cote d'Ivoire	2.84
11	Uganda	2.81
12	Morocco	2.67
13	Senegal	2.28
14	Niger	2.08
15	Algeria	1.85

3) 유상원조

□1987년 이후 총 7개 국가에 EDCF 자원이 제공되었는데, 주요 지원 분야는 송유관 건설 등 자원개발 분야, 철도현대화, 전화망 확충 등 교통 · 통신 인프라 건설, 직업훈련센터 건립 등 교육훈련 분야 등임.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EDCF 지원 현황(약속액 기준)>

(단위 : US$ 천)

국가		사업명(지원 약속 시기)	지원요청액	지출완료일
1	앙골라	어선건조사업(98.12월)	9,500	지출 완료
2	앙골라	농업 현대화 사업(05.9월)	31,440	정부간 협정 체결중
3	가나	정유제품저장소 건립사업(90.3월)	13,000	지출 완료
4	가나	LPG용기 제조공장 건립사업(94.11월)	8,000	지출 완료
5	가나	송유관건설사업(00.10월)	38,200	자금지출중
6	케냐	기술훈련소 설립사업(92.4월)	19,727	지출 완료
7	케냐	도로보수용 장비 개체사업(04.7월)	25,000	자금지출중
8	나이지리아	철도차량 현대화사업(87.12월)	10,000	지출 완료
9	나이지리아	기관차현대화사업(91.11월)	30,000	지출 완료
10	튀니지	올림픽스타디움 건설사업(97.7월)	30,000	지출 완료
11	탄자니아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04.12월)	18,000	정부간 협정 체결중
12	우간다	지방전화망 확충사업	7,500	지출 완료
합계			240,367	

2. 향후 지원방향 및 계획

1) 기본원칙

□남남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선발개도국으로써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아프리카국가들의 자조적 노력을 지원, 아프리카의 빈곤을 완화하는데 목표를 둠.

□아프리카국가의 인적자원개발분야와 교육 및 보건분야와 같은 기본욕구충족(BHN) 분야에 지원의 우선순위를 둠.

□아프리카국가와의 협력시 우리의 비교우위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아프리카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고용창출 증대를 지원함.

□아프리카의 개발을 위해서는 아프리카 자신의 자립노력이 가장 중요하며,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파트너십을 강조함.

□또한 UN등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인사의 진출확대 및 국제무대에서의 다자간 외교를 위하여 50여국으로 구성된 아프리카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원하여 주도록 ODA 제공을 우리의 외교적 목적과 연계하고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 ODA제공은 원래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 순수한 정신이나, 실제 대다수 선진국이 원조제공시 정치적 목적과 외교적 목적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음.

2) 지원방향

□대아프리카 ODA의 확대

-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원조액은 28.56백만불로 전체규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2005년 7월 G-8국가들이 201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규모를 2010년까지 배증한다는 약속에 동참하여 우리도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2010년까지 배증하여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원조규모 확대에 비추어 보아 무리는 없을 것 같으며,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MDGs를 고려한 ODA시행

- MDGs의 주요한 8개 목표인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아동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에이즈 및 말라리아 등 질병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정신과 유사하게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에 원조를 제공하였음.
- 실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지원한 원조사업은 농촌개발지원을 위한 연수생초청사업과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위한 능력배양 지원을 위해 연수생초청사업을 실시하였고,
- 식량생산, 어로기술 및 수산양식 같은 분야에 전문가를 파견하였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의 의료보건분야의 협력을 위하여 다수의 의료단 파견, 의료기자재 및 앰뷸랜스 등 물자지원을 하였음.
- 또한 아프리카 청년층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전략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해 다수의 직업훈련원 건립같은 프로젝트형 무상원조사업(grants)과 교통 통신 인프라 건설, 직업훈련센터 건립을 위하여 EDCF를 통한 유상원조를 실시하였음.

□향후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우리나라의 원조규모가 적은 것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원조형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프리카국가들과 유럽선진국의 전통적 경제관계, 미국과 일본 등의 최대 공여국들과의 원조경쟁을 피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원조방식으로는 아래와 같은 분야가 있다고 판단됨.

- 아프리카국가들 대다수는 저개발국에서 선발개도국으로 급성장한 한국의 경제개발 성공모델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노우하우를 전수할“ 한국의 경제개발 연수과정 ”을 대폭 확대하여 거시적 경제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하여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을 입안하고 실시하였던 퇴직한 고위경제관료를 아프리카에 전문가로 파견하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아프리카국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량의 실업자로 인하여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농산물 가공공장 건설같은 공업화를 통하여 다량의 고용창출 및 고용확대를 통하여 grassroot(하층계급)의 빈곤문제 및 자녀의 교육기회제공의 문제해결이 아프리카의 개발을 위한 핵심이라고 판단됨.

-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아프리카에 직접투자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러한 한국기업들이 아프리카 현지에서 필요한 기술인력들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ODA자금으로 한국기업이 운영하는 기술훈련센터를 지원하여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아프리카 근로자의 기술능력을 향상시켜 자립의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음.
- 또한 한국건설업체가 아프리카국가들이 발주한 건설프로젝트를 수주하였을 경우 많은 건설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건설인력의 공급을 위한 기술분야의 직업훈련센터를 ODA자금으로 지원하면 한국업체의 경쟁력도 제고되며, 아프리카 주민들의 고용확대와 소득증대에 따라 하층계급의 경제적 자립을 기대할 수 있음.

□아프리카 농촌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정신 고양을 위하여 우리의 새마을 운동을 전파

- 이를 위하여 기술분야의 한국해외봉사단의 확대파견을 고려할 수 있으며, 아프리카의 현지사정에 밝은 국내의 NGO와의 협력을 통하여 봉사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아프리카연안국에 대한 수산 해양분야의 협력 강화

- 아프리카연안은 풍부한 어족자원이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아프리카국가들의 경제개발에 있어서 중요한데,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원양어업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음.
- 우리나라가 세계 제2위의 수산대국 및 원양어업국임을 고려하여 아프리카 연안국에 대한 수산 및 어업관계기술의 전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원양어업회사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함이 필요
- KOICA는 우리나라와 아프리카국가들간의 수산 해양협력의 강화를 위하여 2005년 5월 중서아프리카해양기구(Maritime Organization for West and Central Africa : MOWCA)의 25개국 35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음.

□또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대개도국 공무원 대상 연수지원방안이 있음.

- 실제 우리나라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2003년 KOICA의 ODA자금을 15만불을 지원하여 개도국의 공무원이 동 재판소에서 단기연수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과거에는 선진국의 국민들이 주로 자비로 연수를 받았음) 동 재판소의 소장 및 재판관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아프리카출신의 재판관들로부터 극찬을 받음.

아동과 모성 보건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지원

한 희 정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원

1. 서론

빈곤완화와 아동 및 모성 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새삼 새로운 일은 아니다.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하여 전세계 정상들이 모여 전지구적 문제들에 대한 비젼을 공표한 새천년선언문(Millennium Declaration)[1]에 의거해 2015년까지 빈곤퇴치를 위하여 전세계가 공동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2] 8개 중 2개가 아동과 모성보건 목표이다. 2005년 올해는 지난 5년간을 평가하고 향후의 전략을 재수립하기 위한 전략으로 UN이 발표한 새천년계획(Millennium Project)[3]에서도 역시 아동과 모성보건은 우선적인 과제이며 목표로 지적되고 있다.

아동의 건강과 여성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많은 자료와 통계수치들을 통하여 그 시급함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런 실태에 대하여 세계은행 (World Bank)은 " 망연자실함 ", USAID는 " 절박함 ",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 인류의 재앙 ",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 (African Union)은 " 보건의 응급상황 "이라고 그 심각성을 표현하였다.

심각성과 더불어 아동과 여성건강이 국제적인 관심을 고조시키는 이유는 그 해법이 이미 개발되고 실제 적용도 되고 있으나 빈곤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다. 아동과 여성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향상시킬 기술적 중재프로그램 (intervention)들은 이미 파악되고 존재하며 효과도 증명되었음을 전문가들은 모두 인정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잘 알려져 있고 수용성도 있으며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비용 - 효과적이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의 수천만, 수억명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지역은 보건의료체계가 위기상황이므로 심지어는 그 체계가 붕괴되어 기능을 못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의 개발 프로그램들은 재평가되고 재검토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세계적인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범지구적 목표들, 대표적으로 MDGs의 목표나 모니터링 지표는 단순한 기술적 수치로 표현되어지나 그 이면에는 근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의미가 함의되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즉, 근본적으로 형평과 인권에 기초한 체계적 접근과 지원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아동과 모성보건의 동향을 MDGs이후의 성과를 통하여 살펴보고 빈곤과 불건강의 고리를 끊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이 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지 이들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한국의 향후 접근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실태

1) 현황

가. 아동보건실태

□ 매년 1천80만의 5세미만 아동이 사망하였다. 이들 중 생후 일개월 동안에 사망하는 아동이 4백만명이며 같은 수 만큼이 사산이었다. 5세 미만 아동사망의 99%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며 이중 40%는 신생아 사망이다.[4] 모든 아동사망의 2/3는 현존하는, 저기술, 저비용의 도구와 중재프로그램으로 예방 가능하며[5]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저소득국가에서는 신생아 한명당 $3정도의 비용만이 필요하다.[6]

□ 전세계적으로, 국가간이건 국내적으로건 빈부간의 아동사망율 차이는 20배이다.[7]

1) Millennium Declaration : 2000년 9월 뉴욕의 UN Millennium Summit에서 189개국 정상이 전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 선언문이다. ① 빈곤감소와 개발 ② 인권과 민주주의 ③ 환경보호 그리고 ④ 평화와 안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18 September 2000).

2)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 새천년 선언문 채택이후 1년간 전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빈곤퇴치를 위하여 전지구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8가지 목표를 수립하였다. 8개 목표의 분야는 ① 빈곤과 기아근절 ② 초등교육 ③ 양성평등 ④ 아동보건 ⑤ 모성보건 ⑥ HIV/AIDS, 말라리아 등 전염병 ⑦ 지속가능한 환경 ⑧ 국제적 파트너십으로 각 목표별로 목표치(총 18개)와 모니터링 지표(총 48개)를 설정하여 국제적으로 진행상황을 파악하며 공동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1).

3) Millennium Project : UN 사무총장의 위임으로 Jeffrey Sachs 교수가 주관하여 MDGs 달성을 위한 전략을 UN에 제안하기 위한 독립적인 자문 프로젝임. 전세계 학계, 공공/민간부문, 시민사회, UN기관의 개발관련 전문가 265명이 10개 분야에 걸친 향후의 MDGs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UN을 통하여 전세계에 제시함. " Investing in development ; A practical plan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란 보고서에는 다음의 10개 과제에 대한 실행전략이 담겨있다. ① 빈곤과 경제개발 ② 기아 ③ 교육과 양성평등 ④ 아동보건과 모성보건 ⑤ HIV/AIDS, 말라리아, 결핵, 기타 주요 질병과 필수의약품에의 접근 ⑥ 환경적 지속가능성 ⑦ 물과 위생 ⑧ 빈민거주자의 생활 향상 ⑨ 무역 ⑩ 과학, 기술과 발전. 이 보고서에서는 ' Quick Wins '라 하여 즉시 시행하여 3년내에 달성할 수 있는 개발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UN Millennium Project, Investing in development: a practical plan to achieve the MDGs, 2005).

4)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World Health Report 2005: Make Every Mother and Child Count(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5) Save the Children, " U.S. Leadership Needed to Finish the Child Survival Agenda ", Issue Brief No. 1, January 2004

6) A. Tinker, " Saving the Babies, " Countdown 2015 :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for All(New York: Family Care International, 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 and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2004)

7) UN Millennium Project Task Force on Child Health and Maternal Health, Who Got the Power? Transforming Health Systems for Women and Children (New York; UN Millennium Project, 2005)

□매년 3천만 아동이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8]

□적어도 6천만의 여아들이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 여성유아살해 또는 무시로 인하여 각종 인구집단에서“ 손실(missing) ”되고 있다.[9]

나. 모성보건실태

□매년 529,000명이상의 여성이 임신과 출산 중 사망하며 이들 사망중 99%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다. 2002년, 이들 사망의 절반이 아프리카였으며 48%는 아시아였고 4%는 라틴아메리카이고 선진국은 1% 미만이었다.[10]

□매년 적어도 68,000명의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인공임신중절의 합병증으로 사망하며 이 또한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다.[11]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은 전세계적으로 15-19세 청소년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12]

□모성 및 신생아를 위한 기초 보건서비스를 개발도상국에서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매년 1인당 $3이다. 어머니와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데는 일인당 약 $230가 필요하다.[13]

2) 특징

신생아 사망과 모성사망은 모두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면서 영양결핍의 영향을 받으며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아동보건 프로그램이면서 동시에 모성보건 프로그램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 대부분의 아동과 모성사망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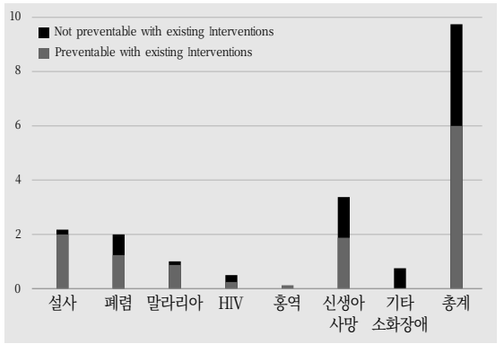
아동사망의 63%는 예방과 치료 가능하며 이중 50%는 영양결핍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신생아기(생후 한달까지)이후부터 5세 미만 아동의 주 사망원인인 설사, 폐렴, 말라리아 그리고 홍역은 모두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아동사망의 절반은 이런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영양결핍으로 인한 것이다.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 자료가 된 Bellagio 연구에 의하면 전체 아동사망의 63% 는 예방될 수 있는 것으로 현존하는 보건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만 된다면 피할 수 있는 원인들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그림 1> 참조).

양질의 모자보건 서비스가 보장된다면 대부분의 모성사망 역시 예방가능하다. 예를 들어, 산전 산후 관리서비스와 전문인력에 의한 분만 그리고 응급의

8) Save the Children, 2004
9) UNFPA, State of World Population 2000 : Lives Together, Worlds Apart(New York : UNFPA, 2000)
10) World Health Organization, UNICEF and UNFPA, Maternal mortality in 2000 : Estimates Developed by WHO, UNICEF and UNFPA (Geneva: WHO, 2003)
11)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and Regional Estimates of the Incidence of Unsafe Abortion and Associated Mortality in 2000 *Geneva: WHO, 2004)
12) UNICEF, Innocent Digest : Early Marriage 7(New York: UNICEF, March 2001)
13) World Health Organization, Mother-Baby Package Costing Spreadsheet(Geneva: WHO,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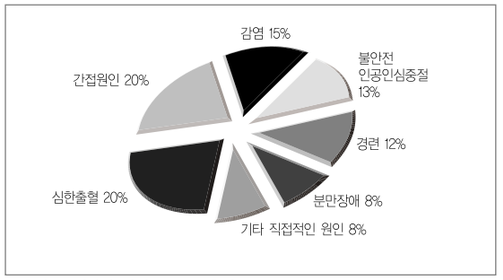
<그림1. 아동사망원인별 현존 보건 프로그램의 완전한 활용시 감소가능성>

(사망 백만건, 2000)



※출처: Adapted from Jones and others 2003; 신생아사망, Save the Children 2001

<그림2. 모성사망 원인, 2000>



※출처: 모성사망 원인, 2000 (출처: AbouZahr 2003)

분만장애 등을 의미한다. 원치않는 임신과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제공된다면 안전하지 못한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사망이나 상해는 감소될 수 있다(<그림2> 참조).

나.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아동사망율의 국가별 차이는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와 더불어, 빈곤수준, 영양결핍, 안전한 식수공급, 그리고 교육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비롯된 차이라고 보여진다(<표1> 참조). 이는 선진국과 최빈국간의 차이에서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격차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그림 3> 참조).

<표1. 5세이하 사망률,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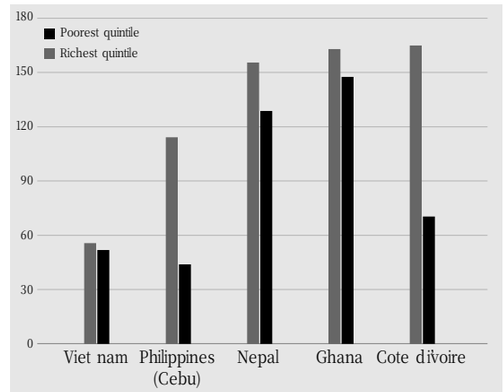
(1,000명당/1년)

소득수준	5세이하 사망율
선진국	7
개발도상국	88
최빈국	120

※출처: 모성사망 원인, 2000 (출처: AbouZahr 2003)

<그림3. 1978~96,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5세이하사망률>

(1,000출생아수에 비율)



※출처: Wagstaff and others 2003

<표2. 전세계 모성사망율, 2000>

UN region	모성사망비 (100,000명당)	모성사망수	평생동안의 모성사망위험율
전세계	400	529,000	1/74
선진지역	20	2,500	1/2,800
개발도상지역	440	527,000	1/61
아프리카	830	251,000	1/20
아시아*	330	253,000	1/94
라틴아메리카/카리브연안	190	22,000	1/160
오세아니아*	240	530	1/83

* 호주, 일본, 뉴질랜드는 지역 평균과 총계에서 제외됨.
※출처: WHO, UNICEF, UNFPA 2004

또한 임신과 출산시의 위험은 여성의 교육수준 경제적 자원에의 접근성 그리고 영양수준과 임신중의 과중한 육체적 노동과 관련이 있다. 여성의 일생에서 모성과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인, 이른바 전생애 동안의 모성 사망 위험율(lifetime risk of maternal death)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에서는 1/16이고 선진국은 1/2,800이다(<표2> 참조).

3) 어머니의 건강과 아동의 건강상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동의 건강은 어머니의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 사망은 대부분 낮은 교육수준, 부적절한 영양상태, 그리고 엄마의 불건강 상태와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신생아 사망을 감소시키는 것에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은 또한 모성 사망 예방과 여성건강 향상에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산전관리; 출산시 전문적 보건의료 서비스; 엄마와 아동의 산후관리; 영양보조식품을 포함한 적절한 영양관리; 예방접종약, 항생제, 항말라리아약품과 필수의약품등).

<MDGs의 진행상황>

세부목표	평가지표	진행상황[14]	
		1990년	2003년
아동사망감소 1990~2015년간 5세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2/3 줄이기	13. 5세이하 사망률 (1,000명당)	105명	88명
	14. 영아사망율		
	15. 1세 이하 아동의 홍역예방접종율	71%	75%
모성보건향상 1990~2015년간 모성 사망률을 3/4줄이기	16. 모성사망율		
	14. 전문의료인에 의한 출산율	41%	57%

예를 들어, 교육받은 엄마는 자녀를 위하여 가정내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으며 아동이 심각한 질환이 있어서 보건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얻기 위한 교육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면 모성과 아동 사망 모두 감소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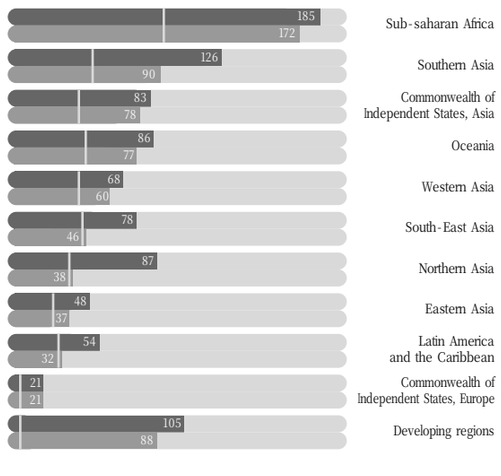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105에서 88로 아동 사망률은 둔화되었다. 그러나 이런 추세라면 MDGs의 목표달성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변화 안에는 '형평성 과' 지역간 격차 '가 더욱 심화된 특성이 내재되어 또다른 국제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 국가 안에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사회정의와 인권차원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지역간에는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이 개발도상국의 평균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술을 갖춘 보건의료인력에 의한 분만은 증가하여 1990년대 41%에서 2003년 57%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역간 차이가 심화되어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캐리비안 연안국 그리고 남-동아시아에서는 증가한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같은 기간 미미한 변화만 있었다(10명중 6명의 여성은 여전히 비전문 보건의료 인력에게 분만함). 또한 남아시아도 미미한 변화(분만 3건중 1건은 전문적 기술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음)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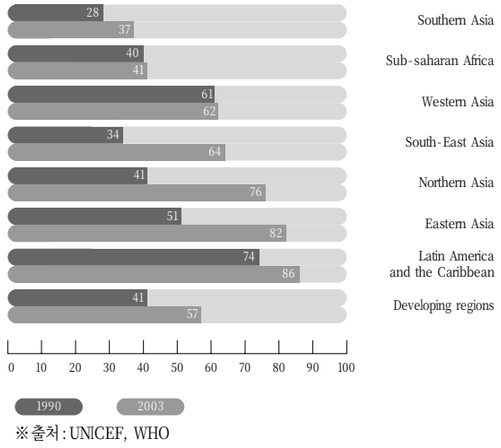
14) 개발도상국 전체 평균 수치이며 지역적으로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WHO, Health and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5)

<그림4. 1990~2003, 1000출생아당 5세이하 사망율>



※출처 : UNICEF, WHO

<그림5. 전문의료인에 의한 분만 : 지역별 추이 (%)>



※출처 : UNICEF, WHO

3. 기본원칙

1) 건강은 성장의 동력 : 건강 혹은 보건에 투자함은 개발에 투자하는 것.

한 국가의 빈곤수준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앞의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개발 수준이 원인인지 건강수준이 개발을 지연시키는 원인인지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MDGs에 대한 평가와 전략수립의 총괄을 담당했던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Dr. Jeffrey Sachs는 2001년 WHO와 함께 기존의 건강수준과 빈곤과의 관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거시경제과 건강수준이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수준이 열악하면 한 국가의 빈곤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건강과 빈곤의 원인관계를 구명하였다. 이미 개인의 건강수준이 열악하면 가정 경제 혹은 개인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상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를 거시적인 수준에서도 다시 한번 증명함으로써 건강을 개발의 주류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즉, 좋은 건강 수준은 인간의 권리이며 인간 웰빙의 척도이다. 동시에 성장의 동력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건강 혹은 보건에 투자하는 것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로 돌려받을 수가 있다.[15] 1965~1990년, 보건과 인구학적 요인들은 아프리카와 다른 국가들간의 성장률의 차이에 절반이상 원인을 제공하였다.[16]

15) Commission on Macroeconomics and Health. Macroeconomics and health : investing in health for economic developmen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16) Bloom DE, Sachs JD, Geography, demography and economic growth in Africa. Brooking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98, 2: 207-295

건강한 인구집단과 질병의 박멸은 민간의 투자와 관광산업의 신장에도 도움이 되어 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보인다.[16]

그러므로, 세계은행과 WHO는 보건에 대한 투자나 공여국의 지원이 보건부문의 발전으로 한정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빈곤전략 혹은 국가 발전전략에 포함되어서 실행되었을때 전체 국가 성장과 개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 형평성과 인권적 접근

가. 80대 20의 법칙

불형평과 빈부간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는 1995년 코펜하겐의 사회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와 UN의 새천년 선언문에서 이미 언급이 되었다. 전세계의 GDP의 80%를 선진국에 살고 있는 10억명의 인구가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50억명의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17]

지역적으로도 빈곤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절대빈곤 인구가 1981년 40%에서 2001년 21%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서남아프리카 지역과 남아시아 지역은 오히려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세계 인구의 40%에 육박하는 중국과 인도 두 나라의 빈곤수준 향상으로 전체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이들을 제외하면 오히려 지역간 격차가 더욱 심화된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제적 빈곤 퇴치를 위한 개발사업을 펼쳐온 세계은행도 2006년 개발 보고서를 ' 형평성과 개발 '이란 주제로 선정하였다.[18] 이 보고서는 첫 머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 타운에서 태어난 백인여자아이와 케이프 타운에서 700Km떨어진 농촌에서 태어난 흑인 남자아이를 비교하고 있다. 이 흑인 남자아이는 1년동안에 죽을 확률이 7%이고, 1년미만의 교육을 받을 확률이 크고, 백인 여자아이는 생후 1년 동안에 죽을 확률이 3%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흑인여자아이는 50세 미만에 죽을 확률이 크지만 백인여자아이는 60대 중반 이상까지 살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보건 및 사망률의 격차도 증폭되었으며 어머니와 아동의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의 접근성에서도 불형평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예방접종에의 접근성은 주요한 문제이며 최근의 전세계적인 보급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의 교육수준이나 거주지역과 같은 요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은 건강할 권리(right to health),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right to health care), 보건의료 과정에서의 권리(right in health care) 등을 함의한다.[19] 이중 건강할 권리가 가장 광범위한 권리이다. 건강할 권리는 소극적으로는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적극적으로 국가 또는 사회로부터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20]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는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의 형평을 의미한다. 접근성의 형평이란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인종, 지리적 위치 등에 의해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이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건강이나 보건의료의 권리에 대한 입장은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몇가지 사항의 권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건강을 요구할 권리(health claims)[21]로 더욱 포괄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모든 국민, 즉 빈곤층이나 소외된 인구집단까지도 포괄하여 건강권을 주장하며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써 국가가 책임지는 보건의료체계는 사회개발과 경제성장에 충분한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는 부유한 국가에도 해당된다.

3) 보건의료체계적 접근

건강권과 형평성에 기초한 보건의료 시스템적 접근은 보건 서비스를 팔거나 사는 재화로 인식하는 시장 중심적 전략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빈곤완화 전략에서 구조적인 불형평의 발생은 시스템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장중심적 경제에서는 건강한 인구집단이 곧 소비자이며 인구집단의 건강이 목표가 아니다. 또한 시장경제에서 최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간의 완벽한 분리된 시스템은 존재할 수 없다. 서비스가 공공이건 민간이건 요금이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양질의 서비스에서 구조적으로 열외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자들은 보건의료체계내

<새천년 개발 계획이 권장하는 보건의료체계>

항목	전통적 접근	새로운 접근
분석의 기본 단위	개개인의 위험 요인에 초점을 맞춘 특정 질병 또는 건강상태,	핵심적 사회제도로서의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이념	민간부문을 통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업화와 시장창출	체계전반에 걸친 재분배와 교차보조금을 통한 포괄적이고 형평적인 접근
환자/사용자	취향을 가진 소비자	자격과 권리를 가진 시민
국가의 역할	시장실패에 대한 격차의 여과	납세자는 재분배 받을 권리가 있음
형평성 전략	pro-poor strategy	포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

17) World Bank, Inequality Predicament, 2004
18)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06 : Equity and Development, 2005
19) 문창진, 보건의료사회학(개정증보판), pp.274~277, 신광출판사, 1997
20) Marmor TR, The right to health care: reflections on its history and politics. In Bole III TJ, Bondeson WB(ed). Rights to Health Care. pp.23~49.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21) 건강을 요구할 권리 (health claims) : 건강의 유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와 조건들을 향유할 권리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Mackintosh M. 은 민주적 사회에서 시민의 자산이라고 함(Mackintosh M. Do health care systems contribute to inequalities, In: Leon Da, Walt G, eds. Poverty, inequality and health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에서 재분배해야 하며, 합법적으로 소외되는 분화와 시장중심의 유인책보다는 보건서비스의 손실을 다른 사업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접근 방향에 따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WHO가 권장하고 있는 국가수준의 보건의료 체계의 틀과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보건의료체계는 다음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 하부구조(health system infrastructure)들의 종합적인 활동을 통하여 예방, 치료, 재활에 걸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각 분야는 보건의료자원의 개발(development of health resouces), 자원의 조직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어지는 3개의 중심축이 되는 분야와 이 분야들을 지원하는 재정지원과 정책 및 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진다.

이런 국가적 보건의료체계하에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2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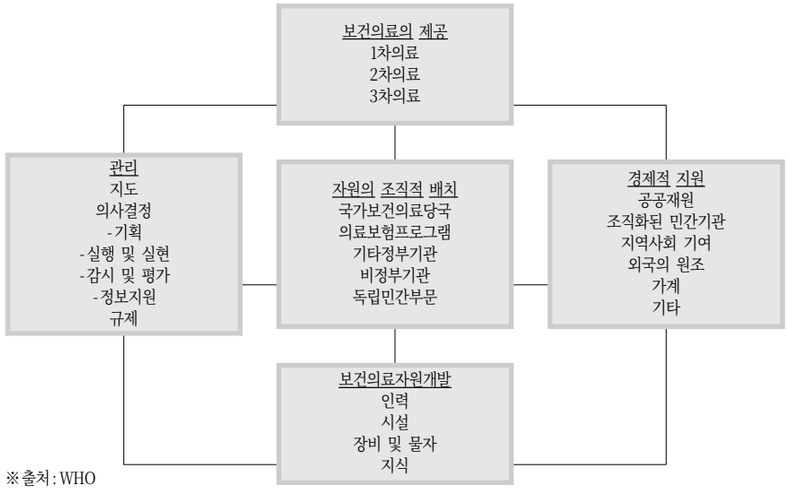
① 접근성 (Accessibility) : 각 개개인이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인력이 다른 보건의료 인력, 시설, 장비, 약품, 보건의 료서비스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은 형평성(equity)과 적절성(adequacy)과도 연관이 된다. 형평성은 어떤 이유로도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고 적절성은 필요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와 연결되어 있다.

② 질 (Quality) :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신 의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보건의료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최선의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전문적 능력, 개인적 수용성, 질적 적절성과 같은 요소를 지녀야 한다. 이는 흔히 생각하듯 최첨단의 의과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지속성 (Continuity) : 각 개인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는 시간, 사람, 공간적으로 상관성을 갖고 적절히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④ 효율성 (Efficiency) : 보건의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최소화하거나 일정한 자원의 투입으로 최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보건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보건의료 요구에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림6. 국가보건의료체계 하부구조의 주요 구성요소들>



※출처 : WHO

22) Myers BA. A Guide to Medical Care Administration, Concepts and Principles.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1969.
23) 변재관, 석재은, 김창엽 등,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4)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통합적 일차보건의료적 접근

가. 90대 10의 법칙 :

일반적으로 전세계 보건의료의 90%의 자원이 인구 10%의 보건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세계 90%의 인구가 자신들의 보건문제 해결을 위하여 단지 10%의 보건의료 서비스 혹은 자원을 제공받고 있다. 이런 실태를 잘 반영하고 있는 사례로 가나의 보건의료서비스 딜레마를 소개해 보겠다. 가나는 1970년대 후반 보건부문의 자원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에도 지난 10년간 영아사망율과 모성사망율 그리고 전염병 감염율에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분석해보니 <그림7>과 같은 모형이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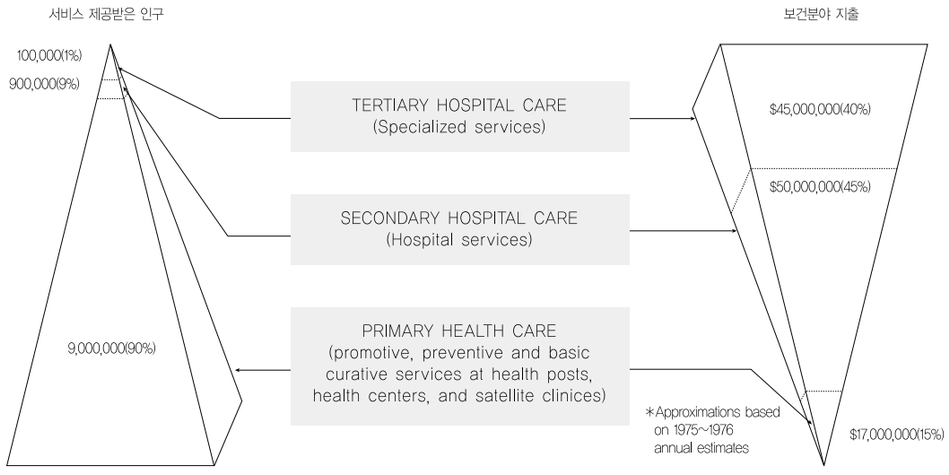
즉, 일차보건에 대한 투자와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과 인력이 2차, 3차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로 투입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90%의 일차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단지 15%정도의 자원과 인력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났다.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와 더불어 보건의료서비스 기관 이용시 90%이상의 보건문제가 경미한 처치를 요구하는 건강문제이므로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하여 1978년 세계보건기구는 "전 인류에게 건강을" 이란 목표를 가지고 알마아타 선언을 통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일차보건의료의 개변과 전략을 공표하였다.

이후 보완과정을 거쳐 특히 지역보건의료 체계를 강조한 일차보건의료(District Health System based on Primary Health Care)로서 지역보건의료 체계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기본적인 보건향상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개인과 가족이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그림7. 가나 보건의료체계의 딜레마>



※Adnan Ali Hyder & Richard H. Morrow, 2001

- 필수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함.
  ①주요건강문제 및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대한 교육
  ②적정한 음식공급 및 영양
  ③안전한 식수의 공급과 기본 위생
  ④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
  ⑤주요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
  ⑥풍토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
  ⑦흔한 질병과 손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
  ⑧필수 약품의 공급
- 보건분야 이외에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참여시킬 것
- 지역사회 주민 참여를 극대화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통합적이고 기능적이며 상호 지지적인 의뢰 체계를 구축할 것
- 전통의료 종사 인력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개발

이상과 같은 일차보건의료의 접근법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24]

- 필요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모든 인구집단에 제공하는 것 (형평)
-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의 모든 영역을 포함
- 효과적이고, 문화적으로 수용가능하며, 부담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는 서비스
- 자립적인 보건의료를 위한 지역사회 주민 참여
- 사회 다른 분야와의 연계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인 일차보건의료 체계는 아동과 모성보건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시 고려되고 계획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특정질병에 초점을 맞춘 중재 프로그램은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모성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응급산부인과적 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시스템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런 노력이 효율적이고 가치 있다면 단순히 어머니와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아동보건의 측면에서는 시설을 이동하거나 좀더 지역사회에 가깝게 가는 것만으로도 시설에 근거한 보건시스템과의 연계를 보장할 수 있다. 차별이나 불균형을 찾아내고 감시하는 노력 또한 이런 통합적 보건의료체계에서 강화되어야 할 사항이다.

5) 성/생식보건 서비스와 권리

아동과 모성보건 모두 성/생식보건 서비스와 권리가 성취된다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출산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혹은 단순히 원하는 경우에만 임신을 할 수 있게만 되어도 모성 사망이 20~35%정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추계된다.[25]

더불어, 출산의 터울도 역시 아동 사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경우에 따라서는 20%정도 아동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예상한다.[26] 성/생식 보건 서비스의 완전한 실행만으로도, 현재 성인기에 접어드는 10억명의 청소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한 건강에 대한 효과(HIV 예방을 포함한), 웰빙, 그리고 빈곤 완화는 현재 존재하고 그 효과가 입증된 보건 프로그램들을 선택하여 그 적용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향상된다. 그러므로, MDGs 전략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 강조되고 있는 원칙이다.[27]

6) 프로그램에 기초한 접근 :
Sector Wide Approach(SWAp)

열악한 보건 수준은 광범위한 사회, 경제, 환경적 조건과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보건부문 이외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다른 MDGs 목표들과 상호 연계되며 보건부문이 타부문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타부문이 보건 부문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Sector-wide approach가 권장된다.

만약 보건이 정부의 개발정책의 우선적 과제라면 보건부처안에서 모든 기획과 실행을 하는 경향이 있

24) WHO. From Alma-Ata to the Year 2000 : Reflections at the Midpoint, 1988.

25) Maine D. Safe Motherhood programs : options and issues. New York : Center for Population and Family Health, 1991.
26) Jones G, Steketee R, Black R, Bhutta Z, Morris S. and the Bellagio Child Survival Study Group. How many child deaths can we prevent this year? Lancet 2003; 362:65-71
27) Lynn PF, et al, Transforming health systems to improve the lives of women and children, Lancet 2005; 365; 997-1000

다. 그러나 정부와 공여기관은 프로그램에 기초한 또는 부문간 협력적 접근(Sector wide approach)을 통한 계획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Sector-wide approach가 개발되고 소개된 것은 이미 십수년 전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의미나 실제사례는 드물다. 이는 공여기관들이 부분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관례와 실제 사업 수행시 부처간 예산간의 연합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 본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아동사망율 하나에도 단순한 보건수준의 접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비롯한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으며 이들이 모두 중재프로그램으로서 시도되었을때 하나의 건강지표에 변화가 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 관리 감독 체계에서의 부문간 연합된 기전과 체계를 갖추는 시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7) 원조시 고려할 사항

위의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였다 하여도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안된다. 이를 위하여 원조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MDGs 5년을 평가하며 지적하고 있는 원조자금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몇가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가. 파트너들이 국가차원의 수요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개별국가에서 요구되는 개발 지원금의 형태 또는 금액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호하다.

예를 들어 거버넌스 측면에서 같은 점수를 받은 두개의 정부가 있다 하여도 거버넌스의 작동기전이 다르다면 다른 규모와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거버넌스의 작동기전이 개발의 핵심요소임에도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곳이 사실은 분쟁중이거나 완전히 붕괴된 곳인 경우가 많다.

나.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

개발은 장기간의 과정임에도 국제적 파트너십의 경우 단기간의 계획과 지원인 경우가 많다. 저소득국가의 가장 중요한, 빈곤 감소 전략을 보면 대부분 3년의 실행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비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원조자금도 10년정도의 장기 계획내에서 3~5년의 계획을 가지고 실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쟁중인 곳은 장기계획내에서 1년단위의 지원계획을 가지고 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다. 국가단위의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저소득국가들이 국제기구들로부터의 기술지원을 요구한다. 그러나 기구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부분의 세분화된 적은 규모의 시범사업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UN전문기구들은 속성이 국가프로그램규모의 국가 사업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빈곤완화를 위한 개발 계획은 국가 프로그램이어야 효과가 있으므로 원조는 국가단위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라. 개발자금의 질을 높여야 한다.

흔히 양자간 원조자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질이 낮다고 평가되나 이를 보완한다면 효과를 더욱 발휘할 수 있다.

- 예측이 너무 어렵고
- 투자, 장기적 역량강화나 제도적 지원보다는 기술지원과 응급시의 구호적 지원인 경우가 많음.
- 공여국에서부터 타이드 원조인 경우가 많음.
- 국가수준의 지원을 조정하기 보다는 별도의 공여목적에 영향받음.
- 지정학적 이유로 거버넌스가 취약한 국가에도 과도하게 지원됨.
- 결과 평가가 안되거나 체계적인 자료제공이 안됨.

이런 현상은 원조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심각한 편견을 갖게 하고 개발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공공지원을 위협한다. 그러나 원조 이외의 목적으로 공여되지 않는다면 원조는 효과가 있고 분명히 글로벌 선으로써 역할을 한다.

4. 국제적 권고 전략

1) 새천년 개발 계획의 권고 전략

사실상의 새로운 투자 없이는 실질적인 아동 보건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심도있고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국가간의 권력과 자원의 분배, 가정내, 지역사회, 보건시스템내에서의 자원의 배분이 문제의 핵심이다. 자금의 문제이나 이는 우리가 생존하는 지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명확하고 강력한 도덕적이고 정책적인 의지는 모든 형태의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MDGs를 평가하고 향후의 계획으로 수립된 새천년 개발계획의 대표적 권고 전략을 소개해 보겠다.

① 보건의료 체계 : 보건의료체계, 특히 지역사회수준에서는 아동보건과 모성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강화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

② 재정 : 국가책임의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양자간 국제적 재원기관의 추가 원조 있어야 함. 보건분야에 국가재원의 배분을 늘리고 기초보건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없애야 함).

③ 인적자원 : 보건의료체계의 목표에 따라 인력이 훈련되고, 이들 인력에 대한 권리와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성과 생식보건 및 권리 : 성/생식보건은 MDGs의 목표달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더욱 강조되고 포함되어야 한다(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⑤ 아동과 모성 사망 : 아동 및 모성보건 중재 프로그램은 100%의 보장되어야 한다.

⑥ 국제적 기전 : 빈곤퇴치 전략의 과정과 재원확보 기전은 양질의 보건서비스에 접근하는 형평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정보체계 : 정보체계는 형평적 보건의료체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⑧ 국제지원기구 : 국제적 기구는 중요한 파트너이다. 국제지원기구는 다음의 4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장기적 투자, 경상비용(인건비, 기타 행정비용) 지원, 국가의 보건의료 프로그램과 공조, 보건부문 이해관계자들이 재원확보 계획 개발에 함께 참여

2) 아동 모성 보건분야의 Quick win 전략[28)]

위의 전략은 2015년까지의 전략이므로 당장 3년 내에 시행하여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략도 구분을 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촌에서의 기본적인 전문성과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 농업, 그리고 하부조직에 종사하는 지역사회 단위의 인력들에 대한 대규모의 훈련과 1년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다.

② 말라리아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말라리아 전파 지역의 모든 어린이에게 지속적으로 방충망을 무료로 제공한다.

③ 모든 개발도상국의 기본적인 보건서비스 이용료를 없애고 보건에 대한 국가와 공여국들의 지원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원을 충당한다.

④ 성/생식보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한다. 가족계획과 피임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기존의 프로그램별 재정적 격차를 줄여나감으로써 원조한다.

5. 한국의 원조전략

앞에서 언급한 기본 원칙인 인권과 형평성 차원의 보건의료체계적 접근을 해야한다는 대전제하에 한국의 아동 및 모성사망 감소를 위한 대외원조전략을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 이미 이전부터 전체 한국의 ODA에 대한 권고사항들로 논의되어지는 원조에 대하여 또한 보건분야 원조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거나 전문적 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을 개발을 하여야 한다거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분간의 다부문간 협력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개발과제 전반에 걸친 전략들도 모두 필수적인 전략이나 이미 국제기관들의 권고사항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재론하지는 않겠다. 여기서는 특히 한국의 원조 중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를 목적으로 해볼만한 전략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1) 아동 사망감소를 위한 국제적 펀드 및 프로그램 기획 : Global Initiative/Fund

한국의 ODA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과 모성 사망감소는 이미 기존의 중재 프로그램들만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된 분야이므로 거대 기금(Grand Fund)을 기획해볼 필요가 있다. 즉, KOICA가 주축이 되어 한국의 민간재원 및 정부자금등과 협력하여 거대 기금을 조성하고 아동과 모성사망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형태의 자금과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현재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과 NGO사업들이 수원국의 요구와 기관의 요구 뿐 아니라 국제적 공동 목표를 우선시하여 하나의 거대 프로그램의 하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면 우선,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장기적인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과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개발지원 사업의 영향이나 효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대규모 펀드를 동반한 선도적 프로그램의 경우 비교적 효과적이라고 논의되어지고 있다. 양자간 기구의 글로벌 펀드로 2000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GII의 경우 전세계 에이즈 예방에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대내외적인 평가를 받아 그 범위를 말라리아 및 전염병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한 재원 마련 사례로 빌게이츠 재단과 UN등 다자간 협력기구의 Global Fund for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2) 전세계적 국가별 형평성과 격차를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

최빈국과 하위소득국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 보건부문예산의 40%는 최빈국 3개국의 아동사망율 해결을 위해 사용한다 "와 같은 우선순위설정[29)]과 이에 따른 원칙을 정해야 한다. 물론 이런 원칙에는 우선 명확한 원조정책 및 가이드라인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기본원칙에 지역적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Sector-Wide Approach(SWAp)

SWAp는 이미 세계은행과 WHO, DFID 및 여러 공여기관들이 권장하고 있는 기법이다. 아동사망의 경우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부문간 협력적 접근이 특히 필요한 분야라 하겠다. 이 개념은 각국의 보건의료체계가 다르므로 각 나라의 적용실례에 있어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성공적이었단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적 원조 모형의 한 사례로써 보건부문과 타부문간의 협력적 접근모형을 개발하여 표준화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하겠다.

예를 들어, 모자보건의 SWAp로서 어머니에 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아동의 영양상태와 보건환경수준을 높이기 위한 위생시설 및 안전한 식수 공급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의 다부문의 협력적 모형을 개발하여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

4) 원조사업 계획과 평가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 축적

이미 MDGs, WHO 등에서는 아동사망율에 대한 평가 지표들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표들은 전세계적 보건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들로써 한국적 원조 상황에서 적절한 지표를 찾아내고 해석해보고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원조사업에 대한 나름의 지식과 경험 DB가 축적되고 이후의 사업발전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8) UN Millennium Project. Investing in development : a practical plan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New York : January, 2005

29) 김창엽, 한국의 보건분야 해외원조사업의 현황과 평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003

Ⅱ. 개발협력동향

개발원조위원회 회의결과

Ⅰ. 핵심요지

□ 개발원조위원회 정기회의가 9.20~21간 개최되어 향후 원조규모 확대계획에 수반되는 이슈인 원조의 배분 및 원조의 효과성 제고방안, 원조의 언타이드화, 개도국의 능력개발 문제 등을 논의한 바, 향후 개발원조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도 금년 유엔정상회의시 2009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1%로 확대한다는 비젼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우리의 ODA 확대계획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DAC 가입계획, 예측가능한 원조 제공 차원에서 연도별 ODA 확대계획, 국가별 원조배분 중기계획, 원조의 효과성 제고 방안(원조의 언타이드화 포함) 및 독립적인 평가시스템 등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Ⅱ. 세부 논의결과

1. 원조규모 확대 및 배분문제

□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9월 정기회의 계기에 DAC 회원국(지역개발은행 포함) 장관급회의를 9.26(월) 워싱턴에서 개최하여 향후 원조규모 확대 구체방안 및 확대되는 원조의 배분, 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함.

- 지금까지 공여국들이 천명한 원조확대계획 관련 구체적인 내용, 년도별 원조규모, 구체적인 배분(allocation)에 관한 방법론 등에 대하여 논의 예정
- 동 회의는 WB와 DAC가 공동주최하며, Manning DAC 의장 및 Leipziger 세계은행 부총재가 공동의장으로 주재 예정

□ 금년 DAC SLM 회의(12. 6-7)에서도 향후 원조규모 확대에 따른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로 합의함.

- 앞으로 개도국별로 원조자문그룹회의 개최시

개도국들은 향후 자국이 받게 될 원조규모 및 원조채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파리선언문에서 합의한 예측가능한 원조 제공 차원에서 공여국은 대략적인 사항을 알려줄 책임이 따르게 됨.

- 이와 관련, 대다수 국가들은 원조규모 확대를 공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3년(또는 1년) 이상의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2. 금년도 DAC SLM 의제

□ 실질의제로는 ODA 확대 관련사항으로서 ODA 배분, 원조효과 모니터링, 개도국의 능력개발, 경제성장과 빈곤감축, 원조의 untying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며,

□ 오찬의제로는 쓰나미 1주년을 계기로 공여국의 원조공약 및 실제 지출 분석, 성과 및 여론 동향을 논의하며,

□ Housekeeping 이슈로는 2007~8년도 작업우선순위, 자발적 기여금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함.

3. DAC 수원국 리스트 개정

□ 기존의 DAC 수원국 리스트는 Part I 및 Part II 국가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수원국 리스트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함. 또한 G8 회원국 및 EU 회원국은 수원국 리스트에서 제외시키고(불가리아, 루마니아는 2007년 EU 가입시 졸업), 매3년마다 재검토한다는데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으나, 기존에 Part II 국가인 벨라루스, 리비아, 우크라이나를 단일 수원국 리스트에 추가하는 문제, 사우디아라비아(1인당 소득 10,430불)가 고소득국으로 분류되어 당장 졸업시키는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추후 재검토키로 함.

- 2006년부터 발효(2005년도 ODA 통계부터 적용)를 위해 금년도 SLM 회의시 타결을 목표로 하여 이견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별도로 소규모그룹회의를 소집키로 합의

4. 원조의 언타이드화 노력

□ 파리선언문에서 합의한 원조효과 증진 차원에서 언타이드 원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01년 DAC 권고문을 재검토한 바,

- 2001년 언타이드 원조 권고문을 적용할 국가를 현재 최빈국그룹에서 저소득국그룹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경우 언타이드 원조 규모가 15억불 증가 예상)을 우선 검토하고(원조의존율에 따른 적용대상 확대문제는 차선의 대안으로 검토),
- 독립적 기술협력(FTC)에 대해서도 2001년 권고문을 적용하는 문제는 원조통계작업반의 논의 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하며, 타이드 원조 여부에 관한 정의를 개정하지 않으면서 회원국의 노력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현지구매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짐.

□ 그러나 2005년 12월 SLM에 상정할 조기타결 방안으로서 권고문 적용 여부와 관련이 있는 액수기준(70만 SDR)을 철폐하는 방안(이 경우 언타이드 원조 규모 10억불 증가) 및 조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기술협력에 대하여 untying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이견으로 추가 논의키로 함(2001년도 권고문에 의하면, 독립적 기술협력은 언타이드 대상에서 제외).

□ 식량원조 및 긴급원조는 미국 등 일부 국가의 강력한 반대, 신속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 untying을 추진하지 않는다는데 대체로 합의함.

5. 개도국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에 관한 DAC 특별회의

□ 금년 12월 WTO 홍콩각료회의 측면지원 및 동 회의 개최 이후까지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오는 10. 27 개도국 무역을 위한 원조에 관한 DAC 특별회의를 개최한다는데 합의함.

□ 논의 의제는 개도국의 무역을 위한 원조의 효과 증진 방안, 무역을 위한 기존의 원조 제공 메카니즘의 효과성을 개선하는 방안, 무역을 위한 원조작업과 빈곤감축 과제간의 시너지 제공방안 등을 중점 의제로 함.

6. 능력개발 모범사례 paper

□ DAC 산하 거버넌스네트워크(GOVNET)가 준비중인 능력개발 모범사례 paper를 검토한 바, 동 paper가 개도국의 능력개발에 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올바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금년내에 문서를 완성하여 채택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함.

- 대다수 빈곤국들은 현 상태로는 공여국으로부터 경제원조가 확대되더라도 지속가능한 능력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 실패하게 되어 있음.
- 능력개발은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의 능력 개발, 그리고 제도 및 관리체제(rules of the game)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종합적인 접근이 요망됨.
- 국제사회는 최근까지도 능력개발을 지식이나 조직모델을 전수하는 기술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국가적 특수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음.
- 2005년 파리선언에서 개도국의 능력개발은 개도국이 1차적 책임을 지고 개도국 내부에서 발생해야 하고, 공여국은 보조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의함.

□ 그러나, 개도국이 능력개발에 관한 ownership이 미약한 경우 그리고 개도국의 능력개발에 관한 요청을 공여국의 전문가적 시각에서 수용이 곤란한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개도국의 brain drain 현상은 개도국의 능력개발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됨.

7. DAC 동료심사에 대한 옵서버 참여 문제

□ 옵서버의 범위에 대하여 OECD Non-DAC 회원국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 및 여타 신흥공여국 및 개도국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됨.

□ 또한 peer review 전과정중 field mission 참가 허용 여부 및 동 경비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추가 검토키로 함.

[자료 : 주오이시디 대표부]

Non-DAC 공여국과의 ODA 정책대화 결과

Non-DAC 공여국과의 ODA 정책대화가 OECD 개발협력국(DCD) 주관으로 9.28~9.30 개최되어 26개국 정부대표와 UNDP 관계자가 참여하여 개발원조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는 바,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Ⅰ. 주요 논의 결과

1. 개발원조 공여국의 증가

□ DAC 회원국이 제공하는 개발원조 이외에도 한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 신흥개발원조공여국이 제공하는 원조가 증가 추세에 있는 바, 원조 공여국간에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개발원조 제공을 위한 협력이 긴요함.

2. 바람직한 개발원조의 방향

□ 공여국이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수원국의 경제발전 및 인권향상 등 수원국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개발원조는 점진적으로 축소되어야 함.

- 2005년 3월 파리선언에서 합의된 untied 원조의 확대, 최빈국에 대한 지원 확대,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확보 등 12개 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

3. 개발원조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부처간 협력

□ 개발원조는 국가간 관계의 하부 개념임에 비추어 DAC 회원국은 물론 신흥 공여국에서도 외교부가 개발원조 업무수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특히, 개발원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와 개발원조 관련 여러 부처 간 협력이 긴요함.

4. 개발원조관련 공여국 대사의 역할

□ 수원국에 주재하는 공여국 대사는 수원국의 현지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바, 수원국 실정에 적합한 개발원조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5. 개발원조와 통계

□ 한국은 신흥공여국으로서 ODA통계 관리경험을 통계보고체계, ODA 통계 집계의 필요성, 통계의 활용현황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이 발표함. 아울러 통계는 개발원조 정책수립,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원조효과 분석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함.

Ⅱ. 관찰 및 평가

□ DAC 회원국 대표들은 MDGs 달성 등 개발원조 분야에서 우리정부가 신흥공여국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이 감지되었는 바, DAC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의 개발원조 정책을 선진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금번회의에서 DAC측은 공여국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 tied 원조를 가급적 줄여나가야 함을 강조한 바, 우리 정부의 개발원조에서 tied 원조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가 참여한 2005년 3월 파리선언 12개 지표 중 8번째 지표에서 각국은 tied 원조를 지속적으로 감소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음.

□ 금번 회의에서 폴란드, 헝가리 등 신흥 원조 공여국들은 DAC 가입에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신규 EU 가입국들은 DAC 가입을 추진할 계획을 시사한 바, 우리정부도 DAC 가입을 위한 착실한 준비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우리정부는 양자차원의 공여뿐만 아니라 3각 협력 등 DAC 및 DAC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정부의 개발원조 업무 수행시 외교정책의 틀 안에서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발원조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무상원조 관련부처간 협의를 강화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또한 궁극적으로 무상원조기본법 제정을 통해 개발원조 정책의 선진화를 기할 법적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 : 주오이시디 대표부]

제60차 유엔총회 제2위원회 일반토의

Ⅰ. 제 2위원회 일반토의(1)

10.3(월) 개회된 유엔총회 제2위원회에서는 Ocampo 사무차장의 보고에 이어 9월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이행방안 등에 대한 일반토론이 진행되어 G-77, EU 등 회원국 대표의 기조연설을 청취한 바, 10.3(월)~4(화)간의 주요 발언내용 아래와 같음.

1. 핵심사항

□ 대부분의 국가는 지난 9월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는 정상 합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것임을 강조함.

- 고채무최빈개도국(HIPC)에 대한 부채탕감, ODA 증가 약속 등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 또한 MDGs와 관련, 일부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국가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특히 금년의 경제성장률이 전년도보다 낮을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의 고유가와 자연재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등으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국가가 많았음.

□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 대부분의 국가는 9월 정상회의가 향후 환경이슈 논의에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JPOI의 이행,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즉각적 대처 등을 주장함.

□ G-77을 비롯한 개도국은 도하라운드 및 WTO 등 국제무역 정책 및 규범과 관련하여 개도국에 대한 특별 고려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LDCs, LLDCs 및 SIDS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특별한 지원과기 합의 프로그램(브뤼셀행동계획, 알마티행동계획 및 모리셔스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함.

- 또한 중간소득국가의 외채에 대한 탕감도 중요함을 강조함.

□ EU는 금년 정상회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 특히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분야의 중요성 및 시급성 인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2위원회가 의제 및 일반토론 축소를 통해 특정의제에 대한 집중 논의, 상호 토의 활성화 등을 통해 성과를 제고함을 주장함.

2. 주요 발언 요지

가. Ocampo사무차장

□ 금번 정상회의는 개도국들이 자신들의 포괄적인 국가개발전략 마련에 합의하고, 선진국은 ODA를 2010년까지 1300억불로 증액하고, 최근 브레튼우즈 기구가 HIPC에 대한 부채 탕감에 합의하는 등 개발에 관한 ownership, 원조, 부채탕감이라는 3가지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공약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협상, 여타 빈국 및 중소득 국가들의 부채, 국제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개도국의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함.

□ 2005 및 2006년도 세계 경제성장이 3%대에 머물 것으로 기대되는 등 세계 경제의 하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원유 가격 상승은 원유 수입 개도국들의 경제발전에 또 다른 우려를 초래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제무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은 일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많은 개도국들의 무역수지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 많은 개도국들의 최근 경제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국내 및 세계 경제 상황하에서 실질적인 성장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음.

- 세계경제 하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향후 장기적 개발아젠다 달성을 위한 주요한 부분으로 보임.

□ 빈곤 근절을 위한 10년간 유엔계획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빈곤근절을 위한 중심적 요소로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내년도 총회는 빈곤 근절을 중심적 목표중 하나로 하고 있는 브뤼셀 행동계획의 5년간 성과 검토를 위한 특별회기를 개최할 예정임.

□ 세계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국제이민에서 고학력자와 숙련된 노동자의 해외 이민은 소위 "brain drain"과 이로 인한 이민국의 경제적 잠재력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이민은 이민국과 피이민국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바, 한 해 국제 송금은 1,300억불에 달하며 이중 60%는 개도국으로 들어가고 있음.

- 금주 국제이민위원회의 보고서가 사무총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며, 총회는 내년도 국제이민과 개발에 관한 고위급 대화를 개최할 예정임.

나. G-77(자메이카)

□ 금번 정상회의를 통해 많은 MDGs 달성이 합의된 시간내에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이를 계기로 몇몇 선진국들이 2015년 0.7% ODA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 계획 제시, 18개 HIPC국가에 대한 부채 탕감 및 여타 빈국 및 중간소득 개도국의 부채 해소 의지 표명, 새로운 개발 재원에 관한 pilot project 개시 등 MDGs 달성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 이러한 긍정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무역, 재정, 기술 및 세계경제 거버넌스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진전은 미미함.

- 금번 정상회의는 WTO 홍콩 각료회의에 대해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못하였으며, 브레튼우즈 기구와 WTO는 재정, 무역, 국제금융체제 개혁 등 국제 정책의 토의 및 협조에 관한 공식적인 협의체를 만드는 것에 계속 반대해 오고 있음.
- 선진국의 무역보조금 폐지, 개도국 재화 및 서비스의 선진국 진입 용이화, 기술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제정 등은 개도국이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는 사항임.

□ 개발에 관한 주요 책임이 해당국에 있는 것과 함께 개도국이 자신의 개발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 공간(policy space)을 가져야 함.

□ " 개발재원 국제회의 "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를 위해 카타르의 2007년 회의 유치 제안을 지지하며 금년 총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기를 촉구함.

□ 해외송금 비용 감소 등 이민관련 사항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 페루가 제안한 2006년 4월의 " 이민에 관한 국제회의 "에 기대가 많음.

□ 77그룹은 JPOI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와 관련 지난 13차 CSD에서 합의한 사항의 충실한 이행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며, 14차 CSD의 주제인 " 에너지, 산업발전, 오염 및 기후변화 "는 국제사회의 진전된 협력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분야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음.

다. EU(영국)

□ 금년은 9월 정상회의 등을 통해 MDGs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의미있는 한 해가 되고 있으며, 관건은 이러한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임.

- 개도국은 빈곤퇴치, 지속가능발전 등 MDGs 달성을 위한 국가개발전략을 채택해야 하며, 선진국 및 UN은 개도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원조 확대, 부채탕감 및 무역구조 개혁 등을 추진해야 함.

□ EU는 2015년까지 GNI 대비 0.7%의 ODA 달성 시간표를 작성하였으며, 무역문제와 관련 홍콩 각료회의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음.

□ 금년에 중요한 합의가 이뤄진 분야는 지속가능 발전 및 환경분야인 바, 특히 9월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노력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관하여 결론을 내렸음.

- 이와 관련 금년 몬트리올 당사국 총회시 장기적 기후변화 대응 조치(long-term measures)를 위한 협상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함.

□ 2위 운영방안과 관련 일반 토론을 줄이는 대신 상호토의 확대, 각 그룹간 회의 활성화, 의제수 감축 및 특정 의제 집중논의 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음.

라. 남아프리카개발연합(나미비아)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SADC)는 AIDS로 인한 사망자가 동 지역에서만 백만명 이상이며, 인구의 38%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등 MDGs 달성이 어려운 바, 국제사회의 지원, 특히 외채탕감이 시급함.

- SADC의 외채는 총 781억불에 달하며 연간 68억불을 외채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MDGs 달성에 사용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임.
- 최근 HIPC에 대한 선진국의 외채탕감을 환영하나, 비 HIPC 국가도 외채상환 능력의 한계를 넘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 HIPC 국가의 외채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국제사회가 강구하기를 희망함.

□ SADC는 공적개발원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홍콩 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도하개발라운드를 완성할 수 있기를 희망함.

마. 아세안(인도네시아)

□ 아세안국가는 지속적 발전을 통해서만 MDGs가 달성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세안 연합(ASEAN Community)의 실현 및 금명간의 아세안 헌정(ASEAN Charter)의 제정은 역내 국가의 발전, 안정 및 평화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희망함.

□ 아세안국가는 국제파트너십 형성만이 지속발전을 담보하며, 이를 위해 개발재원의 확보, 특히 개발재원 국제회의 후속회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함.

□ 또한 ODA 증가 시간표 작성 및 원조의 질과 효과성 제고, 중간소득국가의 부채 탕감, WTO 및 브레튼우즈체제에 대한 개도국 참여 및 입장 반영확대, 자연재해(쓰나미) 조기 경보체제 구축 및 피해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이 중요함.

바. 기타

□ 일본은 최근의 고유가가 재원동원에 장애가 됨을 지적하면서 동 문제에 대해 2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희망하고, 또한 최근의 조류독감 및 SARS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함.

□ 몽고, 짐바브웨, 스리랑카, 파라과이, 타지키스탄 등은 내륙최빈개도국(LLDC)에 대한 특별한 고려 및 알마티행동계획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WTO 도하라운드 협상시 개도국의 입장 반영, HIPC 뿐만 아니라 모든 개도국의 부채탕감 등을 주장함.

□ SIDS를 대표한 모리셔스는 최근의 고유가가 개도국에 특히 심대한 영향을 미침을 주장하면서 대체연료(사탕수수 등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 해열을 이용한 발전)의 사용 확대, 기술이전, 기후변화로 인한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 증가 및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함.

□ 파라과이, 스리랑카 등은 이민 및 국제송금 비용 인하를 주장하면서, 교육 등의 투자를 위한 개발원조 증액을 촉구함.

3. 쿠바 경제제재에 대한 쿠바, 미국간 논쟁

□ 일반토론중 쿠바는 현재 자국의 어려움은 여러 외적인 요소에 기인하는데 특히 40여년전 미국 정부에 의해 부여된 불합리하며, 비합법적인 경제 및 통상, 재무 제재조치가 주요 요인이라고 언급함.

- 또한 미국은 경제 사회 분야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쿠바의 노력을 무시하고 있으며, UN총회는 선진국에 의한 개도국 제재(blockade)를 없애려고 노력해야 함을 주장함.

□ 이에 대해 미국은 반박권을 신청하여 쿠바에 대한 무역제재는 쌍방간에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로서 미국은 현재 쿠바에 가장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이며, 쿠바의 불안정한 경제 및 정치상황은 독재정부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함.

Ⅱ. 제2위원회 일반토의(2)

10. 5(수) 개최된 2위원회 일반토의에서 신각수 차석대사는 2009년까지 우리의 ODA 배증 계획, APCICT 설립, 유엔 거버넌스 센터 설립 예정, IVI 사업 지원 등에 대해 아래 요지로 발언함.

1. 우리나라 발언요지

□ 금번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포함되어 있듯이 세계 정상들이 MDGs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아젠다에 대한 공약을 새로이 한 것에 유의함.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때인 바, 2위원회가 정상들의 공약을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함.

□ 개도국들이 개발에 관한 ownership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함.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방면에 걸친 국가개발전략과 개혁은 가용한 개발재원을 증대시키고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케 하는 바, 개도국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희망함.

- 아울러, 많은 선진국들이 2015년까지 GNI의 0.7% ODA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표를 제시하고 여타 선진국들도 ODA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로 한 것은 고무적임.

□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2000~04년간 ODA를 배증하였으며, 2009년까지 이를 다시 배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한국은 ICT에 관한 우리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ESCAP과의 협력하에 최초 설립비용으로 1천만불을 투자, APCICT를 한국에 설립할 예정임.

□ 장기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ODA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바,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으로서 무역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홍콩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계획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함.

□ 한국은 개발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선정과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는 조만간 반부패 협약을 비준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 아직 동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은 이를 서명, 비준, 이행하기를 바람. 아울러 우리는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의 후속조치로서 유엔 거버넌스 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기 위해 유엔 사무국과 협력하고 있음.

□ 보건 분야 관련, 한국은 AIDS, 말라리아 및 결핵 퇴치 기금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제백신연구소 활동 지원 및 조류 독감 및 광역전염병에 관한 국제 파트너십을 출범시키는 데 참여해 오고 있음.

□ 한국은 NEPAD, 브뤼셀 행동 계획, 알마티 행동 계획, 바베이도스 행동 계획 및 모리셔스 전략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아울러 국제사회가 세계 빈국의 2/3와 최빈국 인구의 40%가 있는 아태 지역에 대한 지원에 주의를 계속 기울이기를 바람.

□ 금번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상들의 의지가 재확인되었는 바, 이를 계기로 구체적인 결과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우리는 차기 CSD가 에너지, 기후, 공해 및 산업에 관한 더욱 통합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차기 UNFCCC 당사국 회의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함.

2. 북한 발언요지

□ MDGs 달성을 위해서는 빈곤 퇴치 및 개발에 호의적인 조건 및 상황을 만드는 것이 긴요함. 그러나 불공정한 국제경제 질서가 있는 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 선 · 후진국간 격차를 줄일 수 없음.

- 현존하는 국제경제질서하에서는 개발에 관한 개도국의 권리는 무시되고 개도국의 의사와 요구는 개발정책 수립 과정에서 존중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는 개도국의 주권과 개발권을 위협하는 비합리적인 전제조건과 군사적 공격, 경제제재 및 봉쇄와 같은 고압적인 조치들이 인도주의, 인권 옹호 및 반테러리즘이라는 미명하게 묵인되고 정당화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선진국은 전제 조건없는 직접 투자는 물론 ODA를 증가시키고 외채 해결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임.

□ 다자 무역 및 국제금융체제는 개도국의 동등하고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고, 개도국에 대한 특혜 조치 및 개발자금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임.

- 국제개발정책은 개도국의 경제 자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도국의 국가개발정책을 지원하여야 할 것임. 국가마다 다른 경제개발능력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특정화된 경제 모델은 있을 수 없음.

□ 무제한적인 시장자유경쟁, 경제제재 및 봉쇄, 개도국에 대한 고압적인 조치는 개도국의 주권을 침해하며 개도국의 경제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침. 북한은 유엔 헌장에 반하는 일방적이고 치외법권적이며 고압적인 경제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촉구함.

□ 북한은 외부세력에 의해 초래된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인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재생에 중점을 두어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완전하게 해 옴. 아울러 지속가능개발을 위해 대규모 농지 재정리 및 수로 건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 · 소규모 수력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국가경제의 자립적 기초를 강화하는 조치 등 새로운 경제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 북한은 향후 MDGs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더욱 발전 · 향상시켜 나갈 것임.

[자료 : 주국제연합 대표부]

2005년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1. 10.10(월) Ocampo 유엔 경제사회 담당 사무차장은 개발재원에 관한 2005년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보고서를 발표한 바, 동 보고서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에 담겨 있는 개발재원의 주요 구성요소(국내재원 동원, 무역, 민간 자본, 공적개발재원, 외채, 국제금융시스템)에 관한 진전 상황 등을 수록하고 있음. 동 보고서 중 우리의 개도국 개발지원 관련 주목할 만한 ODA 및 외채 문제에 관한 주요 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음.
(동 보고서 전문은 http://www.un.org/esa/policy/wess/wess2005files/wess2005web.pdf에 게재되어 있음).

가. 공적개발재원

□ ODA는 1960년대 선진국 GNI의 0.5%에 달하며 최고조를 이루다가 밀레니엄 선언 당시 0.21%까지 하락하였으나, 몬테레이 컨센서스를 통해 0.7% ODA 목표 설정후 2003년과 2004년 0.25%로 상승함.

- 그럼에도 불구, 2006-10년 ODA 예상치는 2015년까지 MDGs 달성을 위한 필요 재원 마련을 위해 여전히 미달

□ 아난 사무총장은 모든 선진국이 2015년까지 GNI의 0.7%, 2009년까지 0.5%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현재까지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만 0.7%를 충족시키기거나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EU 15개 회원국은 2015년까지 0.7%, 2010년까지 0.51% 목표 달성을 정한 바 있음.

- 2002년 이후 EU에 가입한 국가들은 2010년까지 GNI의 0.17%, 2015년까지 0.33%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데 합의

□ 1990년대 최빈국에 대한 ODA 지원은 당초 최빈국(LDC)을 위한 브뤼셀 행동계획에서 목표한 0.15-0.2% 지원 목표의 절반 밖에 되지 못하였으나, 몬테레이 컨센서스 이후 이러한 경향은 역전되어 최빈국에 대한 ODA가 급증하였으며, 2002-03년간 8개 선진국은 동 목표를 달성함.

□ 그러나, 최근의 ODA 지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ODA는 개도국의 예산직접지원(budgetary support)으로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ODA 지원이 MDGs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수혜국의 예산 재원에 반영되도록 지원되는 것이 필요함.

□ 몬테레이 컨센서스 후속조치로서 ODA를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브라질, 프랑스, 칠레 등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참가국들의 채권 발행을 통해 개발 재원을 우선 지원하는 국제개발재원기구(IFF) 설립 방안이 영국에 의해 제안되었음.

- 이외의 새로운 개발 재원 마련 방안으로서 환경, 국제금융거래, 항공티켓 등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개발 목적을 위한 특별인출권(SDR) 할당 등의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이중 국제금융거래와 환경 분야에 부과되는 국제 조세가 장기적으로 가장 많은 추가 개발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 회원국들간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내기는 어려울 것인 바, 우선 지역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와 관련 유럽 재무장관들은 HIV/AIDS 대처 자금 마련을 위해 항공권에 자발적 세금을 부과하는 pilot project 제안을 고려하고 있음.

- 이러한 새로운 개발 재원 마련 방안들은 엄격히 ODA 목표 달성 공약에 추가적이고 보충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강조되고 있음.

나. 외채

□ 몬테레이 컨센서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외채 경감은 개발을 위한 국내재원 동원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임.

□ 1996년 최빈국들의 외채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된 고채무빈국(HIPC) 이니셔티브에 의해 현재까지 27개 고채무빈국들이 외채경감을 받았음(2005년 G-8 정상 합의에 따라 18개국이 국제금융기구의 외채탕감 혜택의 수혜함).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몇 최빈국들의 부채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 바, 이는 GDP 증가, 수출, 물가 등에 관한 당초의 가정들이 너무 낙관적이었던 것에 기인함.

□ 고채무빈국 외채 경감 프로세스가 MDGs 달성에 결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나 이는 여전히 필요한 만큼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05년 사무총장 보고서는 외채의 지속 가능성(debt sustainability)으로 한 국가가 외채 비율을 늘리지 않고 2015년까지 MDGs를 달성할 수 있는 외채 수준을 제안하고 있음.

-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채무빈국의 경우에는 무상원조에 기반한 개발자금 지원과 100% 외채탕감이 필요함.

□ non-HIPC 국가나 중소득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제안된 것보다 더 많은 상당한 부채경감이 이루어져야 함. 이제까지 이들 국가의 외채경감과

관련하여 별다른 논의가 없었으나, 파리 클럽의 "Evian Approach"와 같이 이들 국가들에 대한 외채적용 범위에 더 많은 여지를 주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제안되어 있음.

□ 외채 완전 탕감 이후 외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은 해당국의 수출과 경제성장 전망에 달려 있음. 그러므로 외채 문제는 무역, 금융 등과 함께 하나의 틀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개도국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과 개도국의 외채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 1990년대 이후 민간분야에 있는 파산법에 기초한 국제적인 외채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온 바, 자발적인 규약, 국제 주선 및 중재 등을 포함한 외채 해결 메커니즘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이와 관련 최근 다수의 외채국들이 집단행동조항(CACs)을 채택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임.

2. 한편 제2위원회는 10.7(금) 하버드 Kennedy School의 Dani Rodrik 교수를 초청하여 "In Search of Prosperity : a view on national growth strategies"에 대한 토의를 가진 바, Rodrik 교수의 발언 요지 및 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Rodrik 교수 발언 요지

□ 1970~80년대에는 소위 Washington Consensus (이하 WC)가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더 이상 WC를 주장하는 개발학자는 없어졌음.

- WC는 중남미 경제에 대한 권고를 하는 과정에서 관세 및 금융시장 자유화,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사유화를 강조하였으며, 이후 기업지배구조, 노동시장의 유연성, 금융시장의 prudential regulation 및 변동환율제 채택을 권고하는 내용임.
- 그러나 90년대 들어와 동 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중남미 국가의 경제시장은 더욱 나빠지고, 전통적 방식을 따르지 않은 중국, 인도, 베트남이 부상함(평균관세 : 중국 31%, 베트남 30~50%, 인도 50%).

□ 이러한 결과에 따라 경제학자들은 (1)자신들이 제안하는 개발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2)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화된 개발정책보다는 각국의 국내상황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해 나가되, (3)창의성을 가지고 선구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함.

□ 향후 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1)개별국가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찾아내어(growth diagnostics), (2)거기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policy design), (3)이를 제도화해 나가야 함. (institutionalization)

나. 토의 주요 내용

□ 이러한 주제 발표에 대해 개도국 대표(자메이카 등)들은 IMF의 conditionality가 개별 개도국의 경제실정을 도외시한 채 일반화된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정을 요구함.

- Rodrik 교수는 베트남의 예를 들면서 미국의 80~90년대초 경제제재 및 현재까지 WTO 미가입 등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및 무역을 통한 경제개발에 성공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개별 개도국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EU대표(영국)은 현재 개발문제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아니라 "몬테레이 컨센서스"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ODA 증가 및 빈국 친화정책과 개도국의 good governance, 투명성 및 책임제고가 심도있게 논의중임을 지적함.

[자료 : 주국제연합 대표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신 파트너십 (NEPAD)

10.13(목) 및 14(금) 60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NEPAD의 이행상황평가 및 말라리아문제를 중심으로 일반토론을 진행하여 60차 총회의장, 아프리카그룹, EU 등의 기조연설이 있었는 바, 주요 논의동향 아래와 같음.

Ⅰ. 핵심사항

□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NEPAD가 MDGs의 달성에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NEPAD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함.

- 빈곤층 확산 등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 AIDS · 말라리아 등으로 인한 기대수명 단축, 식수부족 등 환경문제, 인프라 부족 등 아프리카 현 상황에 대해 동정을 표하면서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 강조

□ 2001년 NEPAD 확정이후 그간 성공적으로 동 사업이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

- 아프리카내 무력분쟁 감소, AU의 거버넌스 약속 및 투자환경 조성, 빈곤퇴치를 위한 경제개발 노력 등을 평가

□ 특히 EU 등 선진국의 ODA 증대, 고채무빈곤국가(HIPC)에 대한 부채탕감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으며, 앞으로도 아프리카국가를 위한 역량배양, 호혜적 무역조건 조성 등의 필요성 강조 및 지원 약속

□ 말라리아, HIV/AIDS, 결핵 등의 전염병 대처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약속

Ⅱ. 주요 발언내용

가. 60차 총회 의장

□ 말라리아와 관련 2001년이래 WHO 등의 지원으로 53개국에서 효과적으로 말라리아 약이 사용되고 있는 등 진척이 있었으나, 매 30초마다 아프리카국가 어린이들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5개국에서는 말라리아가 가장 큰 사망원인이 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 NEPAD와 관련, 그간 실질적 진전이 있었음.

- 지난 글렌이글에서 G-8정상이 합의한 ODA 증액 및 부채탕감과 1998년 14개국이 무력분쟁중이었으나 현재는 3개국으로 줄어들고 23개 아프리카국가들이 "African Peer Review Mechanism"에 합의하는 하였으며 가버넌스 강화와 외국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아프리카국가들의 노력에 힘입는 바 큼.

□ 그러나 앞으로도 NEPAD와 관련하여 금년에 합의한 약속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DDA 협상 관련 홍콩회의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어야 하고, 현재의 NEPAD에 대한 지원약속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함.

나. 자메이카(G-77)

□ 사무총장보고서처럼 NEPAD에 대해 그간 진전이 있었으나 재원조달, AIDS · 말라리아 등에 대한 의약품 공급 등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함.

- 사회 · 경제적 인프라를 설치하기 위한 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
- AIDS · 말라리아 및 결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저렴하고 접근가능한 의약품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
- 최근 EU의 ODA 증액약속 등 NEPAD를 위한 ODA 증액움직임을 환영하나 앞으로도 이러한 ODA의 질과 유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FDI)가 2003년 150억불이 비해 2004년 200억불로 늘어났으나, 이러한 수치도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3%에 불과한 바 앞으로도 아프리카에 대한 FDI가 지속 증가되어야 함.
- WTO 홍콩 각료회의시 아프리카 국가의 장기발전을 위한 무역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의되어야 함.

□ NEPAD의 이행과 관련 앞으로도 AU와 유엔이 긴밀히 협력하고 조정해야 하며, NEPAD의 이행시 아프리카 국가의 주인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다. 영국(EU)

□ EU는 아프리카 국가의 MDG 달성을 지원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난 9월 정상회의시 합의한 것처럼 평화 및 안전, 개발 및 인권이 상호 연계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아프리카 국가의 개발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임.

□ 무역과 관련 홍콩각료회의시 도하라운드가 개도국을 포함한 무역파트너에 이득이 되도록 합의되기를 기대하며, 개도국에 호혜적인 시장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EU는 2001년 이래 개도국의 수출품에 무관세 및 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전세계 개도국 상품의 약 20%가 EU국가에 수출되고 있음), 개

도국의 무역관련 능력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이 분야에 매년 1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 공적원조와 관련 EU는 2015년까지 GNI 0.7%의 목표를 달성할 시간표를 제시하였으며 이중 절반 정도는 아프리카국가에 지원될 것임.

□ AU의 능력형성 제도 구축을 위하여 " African Peer Review Mechanism "를 지지하며, 아프리카 국가의 민주적 선거를 위한 감시단을 파견하고, AU의 가버넌스 강화 및 지역통합과 빈곤퇴치 노력을 지원할 것임.

- EU는 가버넌스가 강화된 국가에 보다 많은 원조를 제공할 것임.

□ EU는 AIDS, 말라리아 및 결핵퇴치를 위해 " EU Program for Action "을 금년초 발표하였으며, " AIDS ·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 지구기금 "의 창업 멤버로서 현재까지 약속된 45억불중 절반정도를 EU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 EU는 AU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국가의 분쟁예방, 분쟁후 복구 및 평화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며, 이러한 수단중의 하나는 " Africa Peace Facility "로서 EU는 2.5억유로를 지원하고 있음.

라. 나미비아(아프리카 그룹)

□ 아프리카 국가는 내전상황이 해외원조와 국내개발 노력을 해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전종식을 위해 노력할 계획인 바, EU가 지원한 " Africa Peace Facility "를 통해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 사무총장 보고서에서처럼 아프리카국가는 능력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능력형성 프로그램 및 인프라 건설에 국제사회의 보다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함.

□ 보건시스템 구축, 교육(e-school), 종합적 농업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공적원조 증액, 외채탕감 등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함.

마. 기타

□ 카리브해 연합을 대표한 가이아나는 금년 3월 AU와 카리브해 연합간 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도 연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발표하고, 말레이시아는 아세안도 AU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러시아는 " AIDS ·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 지구기금 "에 자국이 3백만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발표함.

□ 레소토는 AIDS, 말라리아, 결핵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중국 · 인도는 개도국간 협력(남남협력)을 강조하였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 African Peer Review Mechanism "을 강조하였음.

□ 기타 많은 국가는 NEPAD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지원할 것임을 강조함.

[자료 : 주국제연합 대표부]

DDA 무역원활화협상 (EC기술지원사업)

2005년 10월 7일 오전 EC는 WTO에서 자국의 무역관련 개도국 지원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바,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요지

□ 무역관련지원사업(TRA)은 도하라운드 출범이후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년간 10억 유로 이상 규모로 증가시킬 계획으로 있음.

- TRA규모가 2002년 7억 유로에서 2004년 9.4억 유로로 증가하고 특히 2004년에 137건의 신규사업이 수행됨.
- TRA중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사업을 별도 구분하여 산정하기 어려우나 EC/수혜국 모두 무역원활화사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 지원 사업이 보다 높게 증가될 것으로 봄(big prospect).
  • EC 자체 내부 협의시에도 무역원활화 관련사업이 강조되고 있음.

□ 국가별 지원사업(NIP)은 수혜국의 자체 개발계획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주인의식이 매우 중요하며, 수혜국들이 무역원활화사업에 적극적 관심과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무역원활화 지원사업은 개별국가만이 아니라 인접 지역(국가)을 함께 추진할 때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개도국들의 EU수출을 돕기 위해 관련 통관절차, 관세, 규제사항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online " Helpdesk "(http://export-help.cec.eu.int)의 활용을 권장함.

[자료 : 주제네바 대표부]

호주 대외원조 개관[1)]

Ⅰ. 호주 개발원조의 전략적 기초와 새로운 방향

1. 개발협력정책의 기조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지원을 통한 호주의 국익증진

2002년 9월 원조에 관한 새로운 정책 보고서 "Australian Aid: Investing in Growth, Stability and Prosperity"를 통해 호주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 지원을 통한 호주의 국익증진"이라고 원조목적을 명시함.

- 원조는 자국의 외교정책과 국익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아태지역의 발전, 평화, 안정을 추구하고 자국의 지속적인 번영에 직결된 이슈들을 해결하기위해 필요한 것임을 강조
-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호주의 국익과 원조효과가 일치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원국의 장기적 개발효과에 초점을 두어 원조를 실시해야 함.
- 특히 호주의 ODA 주요 담당기관인 호주국제개발청(AusAID)은 전체 정부 아젠다 안에서 호주의 국익이 수원국의 이익에 우선하지 않도록 주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개발원조의 인도주의 원칙은 다른 정책 아젠다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여야 함.

□빈곤감소를 위한 성장과 안정성, 번영에의 투자

2001년 발표된 "The Central Integrating Factor of Australia's Aid Program"은 빈곤감소는 호주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이며 다음의 4가지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명시함.

- 빈곤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성장 기반 형성 지원
- 빈곤계층이 금융, 시장, 소유권, 기술, 건강 및 교육 시스템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들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
- 정부와 원조조직체(institutions), 후원자들(donors)의 빈곤계층에 대한 책임성 강화
- 빈곤계층의 취약성 완화

□거버넌스 강조

- 경제성장은 개발과 빈곤감소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굿거버넌스 이슈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밝힘. 따라서 호주는 수원국의 정책, 기관, 정부시스템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수행함.

□빈곤완화와 MDGs의 연계강화

- 거버넌스, 안보, 정부전체적 접근(the whole of government approach)과 빈곤완화전략사이의 관계가 더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 접근방식을 통해 빈곤국가와 국가내 가장 빈곤한 커뮤니티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밝혀야 함.
- 호주는 개도국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중요시 함. 따라서 개도국의 빈곤감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별 상황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기초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함. 이러한 측면에서 MDGs는 세계의 개발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나 실질적인 원조 프로그램의 benchmarks로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 호주는 ODA 자체만으로는 MDGs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실질적인 발전은 무역의 자유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국내저축의 증대 등 사적인 부문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여김. 따라서 굿거버넌스와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건전한 정책과 제도적 틀 확립에 원조프로그램의 초점을 둠.

□취약국가지원

- 취약국가지원은 각 국가 상황별 포괄적 접근을 시도해야 하고, 또한 빈곤층에 대한 자체 지원시스템의 부족을 보충하며 동시에 개도국 정부의 개혁을 유도해야 함. 호주는 세계은행 등과 함께 the Low Income Countries Under Stress(LICUS) 접근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정부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지원효과가 빈곤층에게 미치지 않을 시, 정부의 하위레벨을 통하거나 지역사회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취함.

2.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

□해외원조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

- 호주의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2001년 85%였음.
- 이러한 긍정적 동향은 NGOs 기부금 증가와도 일치하고 있음. NGOs 기부금 증가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1%이며 2001년 통계에서 호주인의

1) 본 내용은 DAC Peer Review(2004)를 요약 · 정리한 것임

절반이 해외원조 기부금을 냈거나 시간을 투자했다고 밝힘.

- 긴급구호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민감하며 해외봉사에 관심 또한 높음. 호주는 향후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유지해야 할 것임.

□개발교육

- 대다수의 국민들이 장기적 개발이 단기적 긴급구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 지지도는 1998년보다 3% 하락했음. 즉 개발에 대한 지지도와 개발이슈에 대한 인지도간의 상관관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남.
- AusAID는 NGOs의 개발교육분야에 투자하지 않으며 다만 11개 개발교육그룹(NGO 2, 대학과 교사 협회)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Ⅱ. ODA 지원현황

1. ODA 지원현황

□2003년도 ODA 규모 : US$ 1,219백만 (ODA/GNI 0.25%)

- 2003년 ODA 총액기준으로 DAC 22개 회원국 중 15위이며, ODA/GNI 비율 기준으로는 13위임.
- 호주는 1999~2003년 동안 경제성장이 두드러지고 ODA의 규모도 9% 증가하였으나 ODA/GNI 비율면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음 (1975년 0.65%).
- GNI/ODA 0.7% 달성에는 동의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목표달성계획(Timeframe)을 제시하지 않음.

2. ODA 세부내역

1) ODA 규모 : US$ 1,219백만 (2003)

□양자간 ODA : US$ 975백만

□다자간 ODA : US$ 244백만

- 호주의 다자간 ODA는 개별적인 국제기구에 전략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들 국제기구들은 아태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되, 난민보호나 HIV/AIDS등 특정분야에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함.

※ 농업발전을 위한 국제펀드(IFAD)에 ODA 제공을 중단하면서 호주는 동 기구의 역할이 아태지역 국가들의 개발 우선순위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이를 결정하였다고 밝힘.

<호주 연도별 ODA 및 세부내역 추이>

(단위:US$백만)

	87~88	92~93	99	00	01	02	03
ODA	864	984	982	987	873	989	1,219
- 양자	579	727	730	758	660	774	975
- 다자	286	257	252	229	212	215	244
ODA/GNI	0.41	0.36	0.26	0.27	0.25	0.26	0.25

2) 지역별 지원현황 (양자간 ODA 기준)

- 호주의 원조는 중간수준이나 극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수원국별 호주 ODA 의존율이 높음.
- 각 수원국별 개발원조 총액 중 호주 ODA의 점유율

<2002~2003년도 상위 10대 수원국 지원 규모 및 점유율>

(단위:US$백만)

순위	국명	지원규모 (2002~03년 평균)	총 ODA 대비 점유율 (2002~03 평균)
1	파푸아뉴기니	195	29%
2	인도네시아	79	12%
3	솔로몬군도	44	7%
4	베트남	38	6%
5	동티모르	33	5%
6	필리핀	32	5%
7	중국	29	4%
8	캄보디아	21	3%
9	이라크	21	3%
10	방글라데시	17	3%
합계		509	77%
ODA 총규모		874	

<지역별 지원현황(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지역	1999	2001	2003
사하라이북 아프리카	5	4	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	1	1
서남아 및 중앙아시아	5	9	7
극동아시아	46	44	36
북중미	0	0	0
남미	0	0	0
중동	0	0	6
오세아니아	35	42	46
유럽	8	0	0
합 계	100	100	100

- 파푸아뉴기니 - 89%
- 솔로몬군도 - 75%
- 그 밖의 오세아니아 국가들 - 38%

- 호주는 지원국가 및 지원분야 선별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솔로몬군도, 베트남, 티모르가 전체 호주 양자간 ODA의 58%, 상위 15대 수원국이 85%를 차지함.

3) 소득 그룹별 지원현황(양자간 ODA 기준)

<소득그룹별 지원현황(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지 역	1982-83	1992-93	2002-03
최빈개도국(LDCs)	19.7	16.4	28.3
기타저소득국(Other LICs)	63.2	55.7	49.3
중저소득국(LMICs)	13.8	22.4	19.9
고중소득국(UMICs)	2.8	4.7	2.5
고소득국(HICs)	-	-	-
MADCT[1]	0.5	0.8	-
합 계	100	100	100

주1) MADCT: 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 (동 국가에 대한 지원은 OA(Official Aid)로 분류.

※ 자료 : OECD, The DAC Journal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Table 32

<상위 10대 수원국 추이 및 총 ODA 대비 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순위	국명 (1982-83)	%	국명 (1992-93)	%	국명(2002-03)	%
1	파푸아뉴기니	36	파푸아뉴기니	37	파푸아뉴기니	29
2	인도네시아	13	인도네시아	12	인도네시아	12
3	중국	7	필리핀	7	솔로몬군도	7
4	필리핀	5	베트남	6	베트남	6
5	태국	4	중국	5	동티모르	5
6	말레이시아	4	캄보디아	4	필리핀	5
7	피지	3	방글라데시	2	중국	4
8	인도	2	이집트	2	캄보디아	3
9	베트남	2	태국	2	이라크	3
10	나잠비크	2	인도	2	방글라데시	3
		78		79		77

4) 분야별 지원현황

□경제정책과 거버넌스 이슈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음. 동 분야에 대한 지원은 호주 양자간 ODA의 15%(2002~03)를 차지하며 DAC의 동분야 지원 ODA가 8%임을 감안할 때 호주가 거버넌스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2004~2005년에는 동 분야가 3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2003년도 분야별 지원실적>

(단위:%)

분 야		2003년
사회 및 행정 인프라[1] (Social and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교육(기초교육)	7.7(3.3)
	보건(기초보건)[2]	8.2(4.9)
	인구	2.9
	식수 및 위생	2.4
	정부 및 시민사회	15.2
	기타 사회인프라/서비스	9.2
소 계		45.6
경제인프라 (Economic infrastructure)	교통 및 통신	4.5
	에너지	0.2
	기타	0.8
소 계		5.5
생산 (Production)	농업	6.7
	제조업, 광업 및 건축	0.1
	무역 및 관광	0.5
소 계		7.3
다부문(Multisector)		16.8
프로그램원조(Programme assistance)		3.6
부채탕감(Action relating to debt)[3]		0.7
긴급원조(Emergency aid)		14.3
행정경비(Administrative expenses)		5.7
기타(Unspecified)		0.5
합 계		100

주 1) 학생 및 연수생 포함
2) 인구 및 생식보건
3) 비ODA 부채탕감 포함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Table 19

<호주 연도별 ODA 및 세부내역 추이>

(단위:%)

지원년도	1982~83	2002~03
사회/행정 인프라	15.0	44.0
경제인프라	4.7	6.7
농업	7.3	6.6
산업/기타생산	3.5	0.7
물자/프로그램지원	59.5	4.7
긴급지원	1.3	13.6
기타	8.5	23.7

※ 자료: OECD, The DAC Jour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4, Table 18

III. 주요 사안

1. 굿거버넌스 - 통합적 접근

□굿거버넌스가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인식 하에 수원국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분야를 대상으로 올바른 통치 기반 형성에 중점 지원

□호주의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접근은 다음의 5가지로 나누어짐.

- 경제.금융 관리의 개선
- 법과 정의의 강화
- 공공분야의 효과성 증진
- 시민사회의 성장
- 민주주의 시스템 강화

□동 접근방법들은 국별 원조프로그램에 반영됨.

- 특히 법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함.
- 호주는 굿거버넌스를 위해 국별 상황을 분석하고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폭넓게 접근함. 각 분야별 연결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에 관심을 둠. 예를 들어 장학금 제도는 공무원 교육을 통한 주요 분야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와 굿거버넌스 지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부패척결을 위해 중점 지원함.

2. 잠재력 있는 원조공여국 호주

□지난 3년간 인도주의 원조분야에 대해 호주는 ODA 비율을 두배로 증가시켰음. 2003년 긴급재난구호가 호주 ODA의 11%를 차지하였음.

□2004년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함. 동 정책은 인도주의 원조의 일관성, 효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개발과 인도주의 원조간의 관련성을 강조, 빈곤이 취약성의 근본 원인임을 지적함.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 및 위험관리 능력를 고양시키는데 중점을 둠.

□동 정책은 독립성과 중립을 유지하면서 자연재해, 분쟁 시 보호, 물질적 지원, 역량강화, 예방, 사전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3.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 - 새로운 접근과 정책의 변화

□솔로몬군도, 피지, 부겐빌 섬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호주는 이의 예방과 평화구축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함. 지역안보차원에서 주변국들의 평화구축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것이 호주 개발협력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호주는 경제적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은 안보이며 분쟁은 빈곤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고 강조함.

□2002년 " 평화, 분쟁 그리고 개발 정책 "을 새롭게 수립하고 분쟁예방과 평화구축을 위해 세가지 차원의 접근을 제시함.

- 예방적 차원 : 대화의 활성화, 거버넌스의 강화, 무기밀매의 금지
- 분쟁관리와 분쟁감소 차원 : 인도주의적 지원, 특히 난민과 실향민, 여성과 아동 집중지원
- 분쟁후 관리 차원 : 평화와 화해를 직접 지원하고 재건과 경제회복 지원

□안보문제관리 정책은 국별원조 프로그램에도 반영됨.

4. 교차사안

1) 성인지적 관점

□호주는 1999년 DAC 동료평가에서 성평등적 정책과 정책집행 장치의 개발 면에서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음.

- 호주의 성인지적 개발정책을 수행하려는 노력은 호주의 주요 수원국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매우 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높게 평가될 수 있음.

□성평등은 빈곤감소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AusAID는 Full-time 젠더이슈 전문가를 고용할 뿐 아니라 여러 명의 전문가들을 추가적으로 단기 고용하였음.

2) HIV/AIDS

□HIV/AIDS는 아태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에 매우 부정적임을 인식한 호주는 동 분야에 대한 강한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음. 재원의 상당한 배

분과 포괄적 HIV/AIDS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HIV/AIDS 포럼,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음.

*Asia Pacific Leadership Forum on HIV/AIDS
Asia Pacific Regional Networks on HIV/AIDS

□2004년에 수립된 " Meeting the Challenge: Australia's international HIV/AIDS strategy" 는 호주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수립됨. 동 전략은 특정 HIV/AIDS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보다는 국별 전략의 교차사안으로 접근하여 더 강하고 체계적으로 HIV/AIDS 분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IV. 정책일관성

1. 호주 시스템과의 정책적 일관성 강화

□호주는 개발정책일관성이란 개도국의 욕구와 이해를 세계경제의 진화 속에 함께 고려하는 것이라고 여김. 즉 개도국의 경제적 성장과 빈곤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과 정부 부처간의 시스템 통합을 의미함.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개선 - 호주정부와 AusAID

- 국익이 개발아젠다 논의를 독점하고 빈곤감소보다는 안보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음. 비록 안보와 안정이 빈곤감소의 전제조건이라 할지라도 AusAID는 전체적인 정부접근안에서 개발원조정책의 초점을 빈곤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함. 대테러와 같은 중요한 이슈도 개발아젠더에 우선하지 않도록 해야 함.
- AusAID 외 정부부처와 기관이 집행하는 ODA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는 2004-05년동안 20%를 차지하였으며 원조프로그램의 전체 증가의 74%를 차지함.

2. 주요이슈

1) 무역정책

□호주는 무역자유화를 강조하고 주변 개도국들이 국제무역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여 빈곤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음. 2003년 7월부터 최빈개도국(LDCs) 상품에 대한 관세와 쿼터를 모두 철폐하였음.

□2001년 이후 무역관련 기술협력과 역량강화 부문을 강조함. 다자간 기구 및 펀드에 출자함과 동시에 양자간 협력을 통해 위생과 농산물위생에 관련한 기술원조를 AusAID와 정부 각 부처들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무역자문그룹은 동 기술원조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무역과 개발이슈에 대한 기술자문을 제공함.

□AusAID와 외무무역부의 무역협상부서와 정례고위급회담을 가지며 도하라운드 호주 협상팀에 AusAID도 참여하여 호주 무역정책에 개발이슈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2) 언타이드 원조

□2002년 최빈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의 52%가 조건부(타이드)였음. 이는 19개 DAC 회원국 중 네번째로 높은 타이드원조 비율임.

- 이후 점차적으로 타이드비율을 줄여왔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04년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 언타잉 독립 원칙(Free-Standing Technical Assistance to LDCs)을 적용하였음.
- 따라서 AusAID 의 기술지원 계약은 국적 자격요건이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음. 이로서 AusAID와 관리계약자들(Managing Contractors)은 수원국이나 국제 기술전문가를 개발원조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동 원칙은 최빈개도국 이외의 수원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또한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도 치안, 국제범죄 등과 같은 호주의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공급자로 제한될 수 있음.

3) 기후변화

□태평양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하기 위해 노력함.

- 태평양지역 섬들이 기후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 모니터링 " 프로그램(1990)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로서는 모니터링의 역할에 그치고 있으나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임.

4) 대테러정책

□대테러지원과 역량강화

- 2003~04년에 인도네시아 대테러정책에 천만 호주달러를 지원하였고 필리핀의 대테러정책에 5백만 호주달러, APEC 국가들의 대테러 역량강화를 위해 1.5백만 호주달러를 펀드에 기부하였음.

□호주 NGO들은 빈곤감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대테러정책지원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이는 비록 대테러정책이 지역의 안녕과 안정성에 기여한다 할지라도 개발재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자원이 빈곤감소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굿거버넌스에 대한 호주의 기여도는 빈곤근절과 인권보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5) 난민 정책 및 실행

□1951년 UN 협정과 1967년 조약에 부합하는 난민의 지위나 망명자를 인정하고 있음.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이민정책은 난민과 인도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13,000개(난민촌 6,000개 포함)의 장소를 제공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호주의 인도주의 프로그램은 세계 3대 정착프로그램 중 하나임.

□그러나 2001년 이민자법을 개정하여 비자가 없는 망명자들을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로 보냄. 이들은 호주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임시 센터에 지내게 됨.

□호주의 이민법과 억류(detention)정책은 인권단체와 난민권리단체에 의해 강한 비난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해 호주정부는 이들은 불법적인 무국적자들이기 때문에 억류된 것이고 이들에 대한 처우는

국제인권의무에 준해 시행하고 있다고 함.

□최근 1년간 동 임시센터의 여성과 아동의 수는 상당히 줄어들었음.

3. 능력(capacity), 조화, 감독

1) 정책 조화와 메커니즘

□위원회, 태스크포스, 서비스전달 전담기관, 일반적인 정부체계 밖의 기관 등을 통해 정부전체적인 (whole of government work) 개발원조접근방식을 취함.

- 예를 들면 솔로몬군도에 설치된 원조조정기관에 외무무역부, 국방부, 호주연방경찰청, AusAID에서 각각 Senior officer를 파견하여 정부 전체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려고 노력함.

□외무무역부는 호주의 대외관계에 전체적인 책임이 있으며 그외 정부부처는 특정이슈의 국제협상에 관여함.

2) 업무수행와 협상기술: 전략적 파트너십

□주요 정부부처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 채택

- 정부 각 부처는 지역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부처내 기관을 신설함.

□AusAID는 호주연방경찰청에 직원을 파견하여 법체계확립을 통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정부전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3) 외부전문가 활용과 내부 분석역량의 강화

□AusAID는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장기 파트너십과 외부자문위원을 통해 중요한 정책지식을 확보함.

□또한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함. 내부 분석역량 강화는 AusAID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4) 모니터링 메커니즘

□2004년 AusAID내 정책일관성과 AusAID의 다른 정부부처와의 협력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Whole-of-Governmnet Operational Support Unit"을 신설함.

□개발원조 결과의 모니터링을 중요하게 여김.

- 현재 AusAID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은 다른 정부부처에 의해 집행되는 ODA에 적용되지 않으나 향후 동 건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

Ⅴ. 개발원조 조직 및 관리

1. AusAID 연혁

□1946년 대 파푸아뉴기니 원조프로그램 실시 이래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시행해 오던 원조기능을 통합하여 1974년에 ADAA(Australian Development Assistance Agency) 설립

□1976년에 ADAA를 ADAB(Australian Development Assistance Bureau)로 개편하고 외무무역부 산하에 둠. 1987년에 ADAB를 AIDAB(Austral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Bureau)로, 1995년에는 AIDAB을 AusAID(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로 각각 개편

2. 조직구조

□청장(Director General)

- AusAID의 운영 및 활동을 총괄 지휘하고 외무장관(Minister)과 Parliamentary Secretary to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s에게 원조정책과 운영에 관하여 보고. 집행위원회(AusAID Executive)로부터 보좌를 받음.

□집행위원회(AusAID Executive)

- 청장 및 3명의 부청장(Deputy Director General)으로 구성
- 전략적 방향의 설정과 전반적인 운영관련 이슈 논의
- 집행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된 Policy Reference Group으로부터 보좌를 받음.

□원조자문위원회(Aid Advisory Council)

- 외무장관에게 원조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독립적이고도 전문적인 자문 제공
- 위원은 학계, 민간부문, NGO, 지역사회의 저명인사 중에서 선발
- 외무장관이 동 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

□개발협력위원회(Committee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AusAID 및 NGO 각각 6명으로 구성된 총 12명의 자문위원회
- 주요기능으로서 AusAID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NGO에 대한 평가, NGO관련 정책, AusAID의 NGO 협력프로그램에 관한 운영 역할 수행

□이밖에 심사위원회, 인사기획자문그룹, 정보관리자문그룹 등이 있음.

3. 정책과 전략의 관리 및 운영

□AusAID 전략계획(2001): 변화하는 환경 속의 원조효과성 제고

- AusAID 프로그램의 질 향상
- 기관의 정책과 분석역량 강화
- 인사 및 기관시스템의 발전

□동 전략계획은 지난 2년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행됨.

-"수원국가내(in-country) 활동운영 이양"지원: 분권화
- 프로그램의 전략적 방향성 강화
- 유연성있고 개혁적인 프로그래밍 및 계약 메커니즘 활용
- 업무체계 능률화
- 다른 정부부처, 다자기구, NGO들과의 협력강화

□전략계획은 원조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관리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옴.

4. 조직운영과 인사관리의 일치

□해외사무소로의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권한이양

- 우수한 외국 혹은 현지 직원을 활용할 수 있음. 이러한 경향은 국가별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확산되고 있음. 이는 AusAID의 해외사무소 역량의 강화를 요구함.

□평가중심

- 프로그램의 전략적 결과물과 성과중심운영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평가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 평가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AusAID는

평 가 부 서 (the Office of Review and Evaluation)와 청장사이의 상하관계가 아닌 명확한 책임선을 규정함.

□인사관리 전략

- 연구기관과의 장기적 파트너십과 자문위원의 임명을 통해 정책과 기술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애씀.
- 내부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 그러나 잦은 인사이동은 수원국 정부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원조전달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현재 AusAID는 이점을 인식하고 해외파견기간의 연장을 고려하고 있음.

□해외사무소로의 분권화와 함께 파견기간 연장은 현장경험을 쌓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음.

VI. DAC의 주요 권고사항

□원조정책 및 대국민 인식

- 빈곤감소, 거버넌스, 안보, 정부전체적인 접근의 관계가 향후 정책 기조에 반영되어야 하며 빈곤감소가 집행, 모니터링, 평가의 초점이 되어야 함.
- 거버넌스 프로그램이 빈곤감소, 역량강화, 주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빈곤감소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함.
- 지구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개발이슈에 대한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취약국가의 지원은 MDGs의 달성과 국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함.

□원조규모와 배분

- ODA/GNI 0.7%달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발표할 것
-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 사이의 균형이 요구됨.

□정책일관성

- 정책일관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정부부처간 위원회에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정부전체적인 접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자체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야 함.

□원조관리 및 실행

- 각 케이스별로 권한이양을 가속화시키고 본부와 해외사무소간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함.
- 전문가의 기술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내부역량과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일치하도록 해야 함.
- 평가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장실과 평가실사이의 명확한 책임구분이 있어야 함.

<AusAID 조직도>



일본 대외원조개관[1)]

Ⅰ. 일본 개발원조의 전략적 기초와 새로운 동향

1. 일본 개발협력의 동향

1) 일본 ODA 헌장 개정

□ODA 헌장의 개정

- 2003년 8월, 일본 정부는 1992년 ODA 헌장을 개정함.
- 내각 승인, 의회의 승인 없어 아직 법적인 효력은 없음.
- 원조기관, 학술기관, 시민사회, 대중들의 장기간의 협의를 통해 개정됨.
- 자유민주당, 일본경제기구연합, 비정부기구들이 ODA 전략이사회구성

□ODA 헌장 개정의 목적은 ODA의 전략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헌장에서 ODA의 목적이 ' 국제사회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고, 그 결과 일본의 안보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 '이라고 명시됨.
- 헌장에서 ' 국가적 이익 '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강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

□ODA 헌장의 내용

- 1992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 ODA 원칙: 환경보존, 비군사적 사용, 수원국 군사활동 감시, 민주주의와 인권
- 기본정책에 '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젠더문제와 빈부격차의 ' 형평성 '개념 도입
- 수원국의 요청 이전에 정책협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 기존의 수요중심주의에의 변화
- 헌장에 기술된 우선순위이슈는 빈곤감소(poverty reduction), 지구적 이슈(global issue),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 평화건설(peace building)임.
- 이외에도 정책대화, 현장임무의 강화, 시민과 대중 참여 확대, 개발전문성 증대, 개발교육 장려, 투명성 확보 등을 촉구

2) 개발원조 체계

□일본 개발협력 체계의 개혁과 구조조정

- 국내적,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ODA 헌장의 개정
- 2003.8월 일본국제협력단(JICA)의 법적인 지위 변경: 독립적인 지위 획득
- 1999년 기존의 ODA 차관관리기구인 해외경제 협력기금(OECF)과 일본수출입은행(JEXIM)이 합병되어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창설됨
- 외무성(MOFA)은 법적으로 ODA 시행 조정기관 및 JICA의 감독기관이며, ODA 차관에 대해서는 재무성과 경제통산성과 협의하여 조정함.
- DAC 회원국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분산된 원조체계를 가지고 있는 바, 원조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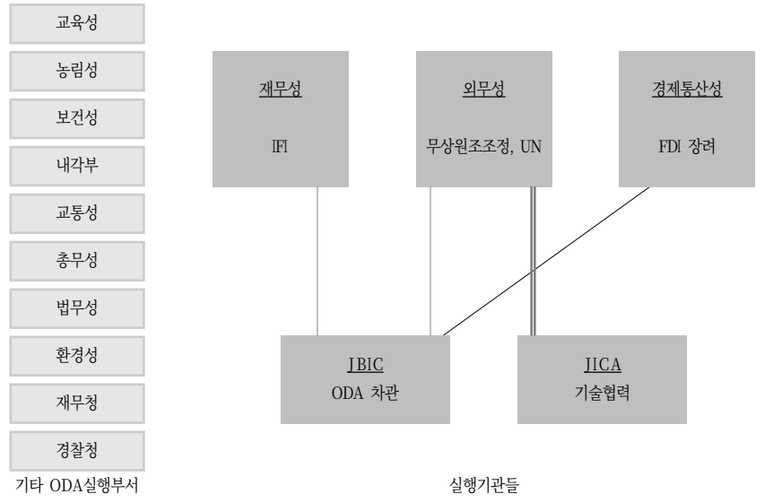
□ODA 헌장 개정의 동인

- 원조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요구
- 경제침체, 재정적자, 실업률증가에 따른 대중의 우려 반영

□의회 및 자문기관의 역할

- 의회 내 ' 외교국방위원회 '에서 ODA 관련 사안 협의

<일본의 협력 시스템>



1) 본 내용은 DAC의 Peer Review(2004)를 요약 · 정리한 것임.

- 자민당 내‘ ODA 개혁 실무반 ’존재, 개정 시 권고사항 제출
- 이외에도‘ ODA 국가원조 전략 ,’ ODA 개혁협의위원회 ,’ ODA 전략이사회 ’등 자문기관 다수
- 대중적 이해 및 투명성 재고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협의절차가 복잡하며 협의결과가 애매하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상존

2. 개발원조에 대한 대중여론과 개발인식

1) 개발협력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

□원조피로(aid fatigue) 현상

- 여론조사 결과, ODA 증액에 대한 답변 비율이 현저히 감소 (1991년 41% → 2002년 19%)
- 일본의 현 ODA 규모를 감액해야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증가 (1991년 8% → 2002년 24%)
- 현 규모를 감액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의 75%는 일본 경제상황의 악화, 44%는 재정적자였으며, 이외에도 투명성의 부족, 성과부족, 비효율성의 이유도 실질적으로 증가함.
- 일본국민이 원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망하고 점차 비판적이 되어가는 경향을 보여주나, 재난 긴급구호 및 인도주의적 원조에는 여전히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음.

□개발협력 관련 교육

-‘ 국제협력증진연합(APIC : Association for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은 외무성의 지원으로 도쿄 및 일본 전역 40개 지부에서 개발관련 정보센터를 운영중임.
- 지난 10년 동안 학부 및 석사과정에 개발협력 관련 강의가 다수 개설되었으며,‘ ODA 개혁협의회 ’의 권고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개발협력관련 내용이 포함됨.
- 여타 DAC 회원국에 비해 개발 NGO들의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음.
- 민간분야가 ODA의 강한 지지그룹이었으나, 1980년대 일본정부가 원조를 언타이드(untied) 하면서 지지가 약화됨.

Ⅱ. 일본 원조내역

1. 최근 일본 ODA 지원 현황

1) ODA 규모와 경제적 상황

□2002년 일본 ODA 총액: US$ 93억(ODA/GNI 대비 0.23%)

- ODA 총액 기준 DAC 22개 회원국 중 2위(1992년~2001동안 1위)이나, ODA/GNI 비율로는 17위임.
- 2000년에는 DAC의 ODA 총액의 25%, 2002년 기준 16%로 하락함.
- ODA/GNI 대비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84년으로 0.34%였음.
- 국민 1인당 기여도는 US$ 97

□경제적 상황과 일본 ODA 변화

- 거품경제이후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ODA 규모가 감소해옴.
- 예외적으로 1997년~2000년까지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ODA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특별차관기금의 회수로 곧 상쇄됨.
- 개도국으로부터 차관변제가 증가하는 바, 현 ODA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ODA예산증액이 필요함.
- 외무성은 2006년 ODA/GNI 비율이 0.14%~0.21%의 수준으로 감소하고, 총액기준 DAC 4~5위로 하락할 것을 예상함.

<일본 연도별 ODA 및 ODA/GNI 추이>

(단위 : US$ 백만)

	86~87	91~92	98	99	00	01	02
ODA	6,488	11,052	10,640	12,163	13,508	9,847	9,283
ODA/GNI	0.3	0.31	0.27	0.27	0.28	0.23	0.23

※ 출처 : OECD/DAC

2. 2002년 일본 ODA 세부내역

1) ODA 규모: US$ 9,283백만(2002년)

- 양자간 ODA 규모: US$ 6,692백만
- 다자간 ODA 규모: US$ 2,591백만

<상위 10대 수원국>

(단위:US$ 백만)

순위	국명	지원규모 (01~02 평균)	총 ODA 대비 점유율
1	중국	1,234	14
2	인도	862	10
3	태국	775	9
4	인도네시아	764	8
5	필리핀	683	8
6	베트남	438	5
7	방글라데시	316	3
8	파키스탄	264	3
9	스리랑카	249	3
10	브라질	175	2
합계		5,760	64

2) 유상/무상원조 규모

□일본 양자간원조 배분비율: 유상원조 55%, 기술협력 19%, 기술협력외 무상원조 27%(2002년 기준)

- 유상원조(loan)의 높은 비율이 일본 양자간원조의 특징
-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에서 집행
- 유상원조 수원국 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중이나 여전히 다수임(1989년 62개국 → 2002년 52개국).
- 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이 71%로 가장 높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단 10%(1997년 이후 아프리카 최빈국에 대한 차관중단)

□일본의 유상원조 지원의 근거

- 전후재건을 위해 세계은행 차관을 수원했던 경험에서 비롯됨.
- 수원국의 주인의식 및 자조노력(self-help)를 장려한다고 여김.
- 사회발전에 핵심적인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재정지원 가능
- 실질적으로 양허적인 반면(70%의 증여율(grant element)), 일본의 납세자 부담 경감 가능
- ODA 차관은 100% 언타이드임.

3) 부채 탕감(Debt relief)

□개도국의 대일본 ODA 채무규모 : US$ 970억 (2002년말 기준)

- 높은 유상원조의 비율의 결과
- ODA 채권국 2위인 독일(US$ 220억)의 4배 이상
- 일본 공직자은 무조건적인 부채탕감은‘ 도덕적 위험 ’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며, 자금의 출처가 대부분 ODA예산이 아닌 우정국예금이므로 부채탕감이 행정적, 회계적으로 복잡함.

□ 고채무국 이니셔티브 (HIPC initiative)를 계기로 일본은 빈곤국에 대한 부채탕감을 약속함.

- 양자간 ODA 총액 대비 부채탕감비율 : 1991~1992년 4% → 2001~2002년 13%(US$ 13억)
- 37개국 부채탕감 및 상환시기조정 공약(1999~2002년)
- 일본정부는 세계은행 HIPC 신용기금에 US$ 256백만을 출자함.
- 최빈국의 ODA 차관이외의 상업적 채무를 모두 취소함.
- 채무비율이 높아도 빠른 성장과 원조 졸업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에게 차관을 제공하며, 변제에 어려움이 발생시 Paris Club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부채탕감을 추진한다는 원칙임.

4) 지역별 지원현황(양자간 ODA 기준)

□ 일본 ODA 지원의 대부분이 아시아(74%)에 집중되어 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는 10%를 지원하고 있음.

- 지리적, 경제적, 역사적, 문화적 이유에서 아시아, 특히 극동아시아에 집중
- DAC 회원국의 총 ODA의 절반금액을 아시아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함.

5) 소득그룹별 지원현황 (양자간 원조 기준)

□ 빈곤한 국가에 대한 지원강화 추세

<일본 연도별 ODA 및 ODA/GNI 추이>

(단위 : US$ 백만)

국명	1998	1999	2000	2001	200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056(10)	982(9)	936(10)	930(10)	722(8)
북아프리카	193(2)	244(2)	285(3)	320(4)	208(2)
동남아시아	2,331(23)	1,793(26)	1,788(19)	2,061(23)	2,300(26)
극동아시아	5,212(51)	6,349(58)	4,772(50)	4,321(48)	4,352(48)
북중미	303(3)	344(3)	356(4)	383(5)	380(5)
남미	518(5)	616(6)	610(6)	588(6)	568(6)
중동	333(3)	407(4)	367(4)	248(3)	197(2)
오세아니아	153(1)	134(1)	136(1)	126(1)	120(1)
유럽	117(1)	129(1)	257(3)	99(1)	133(1)
합계	10,215	10,999	9,507	9,075	8,981

<소득그룹별 지원현황- 양자간 원조 비율>

(단위 : US$ 백만)

소득그룹	1998	1999	2000	2001	2002
최빈개도국	1,463(14)	1,269(12)	1,372(14)	1,438(16)	1,354(15)
기타 저소득국	4,996(49)	5,652(51)	4,245(45)	4,086(45)	4,228(47)
중저소득국	2,987(29)	3,373(31)	3,183(33)	3,043(34)	2,758(31)
고중소득국	669(7)	607(6)	708(7)	508(6)	641(7)
고소득국	1(0)	1(0)	1(0)	1(0)	0
MADCT[2]	99(1)	98(1)	-	-	-
합계	11,359	12,180	10,969	10,236	10,105

- 현재 양자간 원조에서 최빈국에 대한 지원비율은 DAC국가중 4위
- 2001년 DAC 고위급회담에서 일본대표가“ 저소득국가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고 발언함.

6) 2002년도 분야별 지원실적

□ 경제인프라,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우세: 각 37%, 21% (2001년)

- 동 분야에 대한 지원 중, 기초사회서비스(Basic Social Service)에 대한 지원은 단 7%로 DAC회원국 중 18위에 입지함.
- 기초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원 DAC 평균은 15%이며, 지속가능한개발세계회담(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목표치는 20%임.
- 빈곤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이 없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적인 여론임.

<2002년도 일본 분야별 지원실적>

(단위 : %)

분 야		2002년도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Social infrastructure & servcies)	교육(기초교육)	880(91)
	보건(기초보건)	303(94)
	인구	14
	식수 및 위생	501
	정부 및 시민사회	218
	기타 사회 인프라/서비스	200
소 계		2,097(21)
경제인프라 (Economic infrastructure & services)	교통	2,460
	통신	69
	에너지	1,146
	금융, 재정서비스	38
	민간분야 및 기타	21
소 계		3,734(37)
생산 (Production)	농림수산업	1,164
	공업, 광업, 건설업	194
	통상 및 무역	22
소 계		1,381(14)
다부문(Multi-sector)		553
프로그램원조(Programme aid)		43
부채탕감(Action relating to debt)		1,291
행정경비(Administrative cost)		84
NGO 지원(Core support to NGOs)		709
합 계		10,159

III. 주요 지원분야 및 분야별 우선순위

1. 일본 개발협력의 분야별 우선순위

□ 일본 ODA헌장에 분야별 우선순위, 중기정책(Medium Term Policy), 국가프로그램, 분야별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디자인의 전략적 서열이 열거됨.

- 빈곤감소(교육, 보건, 수자원 및 위생, 농업)
- 지속가능한 성장(인프라, 통상 및 투자)
- 지구적 이슈(환경, 전염병, 인구, 식량, 에너지, 자연재해, 테러리즘, 마약, 조직적 범죄)
- 평화건설(분쟁예방, 긴급구호)

□ 최근, 지구적 이슈들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다분야에 해당되는 이니셔티브들을 다수 발안함.

- ‘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고이즈미 이니셔티브 ’
- ‘ 평화와 인류안정 이니셔티브 ’
- ‘ 전염병에 대한 오키나와 이니셔티브 ’
-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보전 이니셔티브 ’
- ‘ 수자원에 대한 일본 ODA 이니셔티브 ’등
- 동 이니셔티브들은 ODA기관의 운영적 초점을 분산시키는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함.

□ 일본은 빈곤감소, 젠더, 환경, HIV/AIDS 이슈들을 모든 개발협력활동에서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할 교차사안(Cross cutting issue)으로 여기지 않고 구체적인 분야로만 고려함.

- JICA는 이러한 경향에 예외적으로, 기관에서 빈곤감소와 같은 이슈를 전반적으로 핵심적 이슈로 다루고자 하는 운영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음.

2) MADCT 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동 국가군에 대한 지원은 OA-Official Aid로 분류됨)

2. 빈곤감소 (poverty reduction)

1) 빈곤감소에 대한 일본의 접근법

□ 2001년 DAC 고위급회담에서 일본은 여타 DAC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 국가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빈곤감소를 대 개도국 개발원조의 핵심으로 할 것 을 결의함.

- 일본은 ' 21세기전략 형성(Shaping the 21st Century Strategy) '을 지지한 국가이며, MDG 달성도 결의하였음.

□ 그러나 일본 원조프로그램에서 빈곤감소가 중심 목표로 설정되지는 않음.

- MDG가 언급되기는 하지만, 프로젝트/프로그램 시행시 빈곤감소에 대한 연관지점이 거의 없음.
- 일본 외무성은 경제성장과 개발을 강조해왔으며, 아시아의 성장에 일본이 기여한 점에 대해서도 빈곤감소에 대한 기여는 거의 언급하지 않음.
- 최근 외무성 관료와 JICA/JBIC 직원들이 빈곤층을 우선시하는 성장(pro-poor policy), 성장의 질-지속성 및 분배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였는바, 개념이 명확히 정립될 필요가 있음.

2) 일본의 개발모델

□ 일본 외무성의 개발철학은 일본의 전후 경험에 근거함.

- 세계은행에서 빌린 차관으로 인프라 건설, 성실하게 차관 변제
- 따라서, 개도국에 ODA 유상원조와 외국직접투자(FDI)를 장려하고 인프라 개발을 지원함.
- 모든 개도국이 전후 일본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수요조사원칙 (request-based principle)

- 수원국이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직접 제안하여 일본이 실행
- 수원국의 주권과 주인의식을 존중하며, 자조노력을 향상시킴.
-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부재한 개도국의 경우에 이 원칙이 악용될 수 있다는 장애가 있음.
- 또한 개발프로젝트 수요를 제출하는 각 수원국 부처는 일본의 무역회사, 제조업자, 기술협력자 문관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종종 수원국의 국가적 개발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바 개발이 지속 불가능할 수 있음.
- 새로운 ODA 헌장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동 수요조사 원칙을 제고하고 있으며, 개도국이 요청하기 전에도 정책협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음.

3. 일본 개발모델의 적용가능성

1) 인프라에의 상대적 우위 - FDI 모델

□ 경제, 사회 인프라에 대한 중점지원

- 일본은 인프라 건설에 대한 일인당 국내투자율이 선진국 중 최상위권

□ 그러나 개도국에서 인프라 개발의 궁극적 성공은 하드웨어 및 공학기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재정적 측면, 사회적 환경적 기준준수 등의 영향을 받음.

- 인프라 영역 활동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야 함.

□ 규모가 큰 인프라 프로젝트는 가시성이 크므로, 문제 발생 시 비판받을 위험이 큼.

- 현재 인도네시아 코타판중(Kotapanjung) 지역 주민들이 ODA 차관으로 시행된 수력발전 프로젝트 건으로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임.
- JBIC는 최근 DAC기준보다 엄격한 환경/사회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음.

2) 순환비용, 기회비용, 부채지속성의 고려

□ 경제인프라 사업지원 시, 수원국에는 관련 비용(순환비용/관리재정/시스템관리인력 등)이 필요

- JBIC는 종종 개도국에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동 재원은 여타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체하므로, 기회비용이 높음.
- 따라서 동 인프라 개발에서 기대되는 경제, 재정, 사회적 효과가 높은 기회비용을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이어야 함.

□ 유상원조의 제공 시에는 수원국에 대한 부채를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3) 인프라개발, 경제성장, 아시아 위기에서의 교훈

□ 1960년대 이래로 인프라개발을 통한 성장유도가 DAC 회원국들의 핵심활동이었음.

- 그러나, 경제성장이 언제나 빈곤감소의 결과를 유도하지는 않음.
- 일본은 높은 차관율을 뒷받침하기 위해 JBIC를 통해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세계은행과 함께 빈곤감소에 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영향력 측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함.

□ 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신속하고 성공적이었으나, 빠른 성장에 의한 부가적인 어려움이 상존함.

- 아시아의 도시들은 거대도시화, 공해, 교통체증, 빈민가, 보건문제들을 직면하였음.
- 일본의 원조는 도시환경 프로젝트, 교통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빈곤의 근원적 이유에 대처하지는 못함.

□ 일본은 경제성장의 성공과 실패, 성장의 결정요인들, 원조의 역할, 아시아 위기원인, 경제성장과 빈곤감소의 관계 등에 대해 분석하고, 그 교훈들을 DAC 회원국과 공유하도록 촉구됨.

IV. 정책일관성

□ OECD/DAC 내에서는,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는 선진국의 모든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우세하며, 특히 도하에서의 WTO 개발의제 협상에서 통상, 농업정책에 대한 일관성문제가 대두됨.

1. 일본 개발정책 일관성 관련이슈

1) 해외직접투자(FDI)

□ 경제성장개발의 일본식 모델

- 경제성장을 개발의 원동력으로 간주, 아시아 지역에서 FDI를 장려하고 개발원조와 통상/투자정책을 연결시키려는 노력
- 지역경쟁과 기업개발에의 영향, 기술경쟁력 향상 등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함.

□ FDI 추진 주요세력은 일본 민간분야, 일본정부 또한 ODA기금 및 여타 기금을 사용하여 FDI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함.

- FDI 관련이슈는 경제통산성이 관리하고, FDI 장려에 관여하는 정부기관이 존재

2) 통상 및 투자 정책일관성

□ 동아시아의 통상에 대해 상호적 혜택의 개념

- 일본의 경제가 아시아지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외환위기시 주변 국가들에게 긴급원조패키지를 지원
- ASEAN 국가들과 포괄적인 경제파트너십 구축 노력

□ 지역경제협력과 WTO 체계와의 양립가능성

- 일본은 기본적으로 WTO 통상체계를 지지하는 입장, 다자간 비농산물 거래에 대한 관세하향조정에의 의지를 표함.
- WTO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개도국의 제도적, 기술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일본은 2002년 US$ 16백만을 지원하였음.
- 동 이슈에 대해 일본의 지원규모는 DAC 회원국 중 3위임.
- 또한 일본은 ‘ 도하개발의제 국제신탁기금 ’에 US$ 150만, ‘ 최빈국을 위한 통합프레임워크 ’에 US$ 50만을 출자하였음.

3) 농업정책에서의 일관성

□ 일본은 자국 농업생산물에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으나, 여타 DAC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국내농업시장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시정가격(administrative price), 국가수매(state purchase), 생산한계(production limit), 농촌개발, 조경보존(preserving the landscape) 등의 정책으로 일본농업쇠퇴에 대처
- ‘ 식량, 농업 및 농촌에 대한 기초법안(The Basic Law on Food, Agriculture and Rural Areas) ’에 의하면 일본은 2010년까지 국민 총 칼로리섭취량의 45%를 직접 생산하기로 하는 공식적인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음.
- 현재 일본은 칼로리 섭취량 기준 60%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1999년 기준 농 · 수산물 수입의 45%는 개도국으로부터이며, 일본은 개도국으로부터의 식량수입이 가장 많은 국가이며, 1999년 기준 수입액은 US$ 150억임.
- OECD에 의하면, 2001년 일본정부의 농업지원은 US$ 590억, 일본의 생산자가격은 세계시장의 3배임.

□ WTO체제 내의 농업협상 맥락에서 정책개발 일관성

- 일본이 관세화(tariffication)함에 따라 쌀 수입쿼터제는 폐지됨.
- 생산량을 국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일본은 쌀 수입에 대해 WTO 규정과 일치하는 선에서 최소접근량에 대해 낮은 관세를 규정함.
- 일본은 최저개발국에 대해서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이니셔티브 ’를 발안하였음.
- 2003년 4월 이후, 최저개발국 상품(쌀, 설탕 제외)에 대해서 면세(duty free)와 무쿼터대우(quota - free treatment)를 확장.
- WTO 농업관련협정에 의하면 보조총액 측정치(AMS: Aggregate Measurement Support)를 20%로 줄이도록 권고 받음.

2. 개발정책일관성관련 정책 및 원조조정 체계

1) 개발정책 일관성

□ 일본은 타 DAC 회원국과는 달리, 개발협력 정책 일관성 이슈를 다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립하지 않음.

- 개발정책에 대해 명확한 정책선언이 부재하며, 새로운 ODA 헌장의 표면에도 개발정책 일관성 문제가 논의되지 않음.
- ODA증액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국민들에게 개발정책일관성에 대해 홍보하려는 의지 부족
- 일본의 경제성장, 환경보건, 안보 이슈가 국제적 상황 및 지역개발에 의존하고 있는 바, 개발이슈의 광범위한 측면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음.

2) 개발협력 조정

□ 새로운 ODA헌장에 의하면 ‘ 부처간 ODA협의 포럼 ’을 통해 ODA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협력 강화를 도모함.

- ODA 관련 기관들의 업무 조정을 위한 포럼이나, 동시에 정책 일관성도 확보 가능
- 외무성, 경제통상산업성, 농림수산성이 ODA에 관련되어 있으며, 외무성이 주된 조정의 책임을 지지만, 경제통산성 역시 통상과 투자에 대한 정책형성을 통해 조정 역할을 수행

Ⅴ. 개발원조 조직 및 관리

1. 조직 및 관리체계 개편의 요구

□ 1988년 일본은 정부 전체에 대한 개혁안을 발의함.

- 2001년 개혁법안에 외무성의 ODA 조정임무 및 JICA의 ‘ 독립적 행정기관 ’으로의 지위개편, ODA 정책, 프로젝트의 평가요건이 명시되었고, ODA 투명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권고되었음.

□ 의회는 일본의 개발원조체계가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개별적 활동주체들의 느슨한 네트워크라는 문제의식을 제기

- ODA 활동주체들 간 조정이 향상되고, ‘ 시스템 ’ 시너지를 창출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됨.

□ ODA운영개혁에 대한 제안서(2차 ODA협의위원회 작성)

- ODA를 국익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ODA전략의 활용, 효과적인 ODA 이행시스템 구축등을 권고함.
- 외무성은 제안서를 받아들여 개혁과정에 착수하겠다는 의지 표명
- 동 개혁절차에는 감사, 평가, NGO 파트너십, 인적자원, 정보공개 등이 포함됨.

2. 일본 ODA 조직 및 관리운영체계

1) 개발원조 관련기관 네트워크

□ 주요 행위 주체 및 이해관계자

- 외무성, 재무성, 경제통산성, JICA, JBIC
- 상기 기관 중 JICA만이 개발원조 전담기관임.

<개발협력 관련기관의 업무 및 규모 현황>

기관	ODA 책임	규모
외무성(경제협력사무실:ECB)	ODA 정책지도와 범기관 조정 ; 무상원조 대부분을 집행 JICA 및 JBIC 행정감독, 다자협력 관련 운영과 조정	총 ODA의 33% (외무성 19%, JICA 10%, 다자협력 5%) 435명의 원조관련인력
일본국제협력단(JICA)	기술협력, 무상원조 JBIC 프로젝트 디자인 처리	외무성에서 분배된 ODA의 10%, 1200명의 개발원조관련인력, 90개의 해외사무소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해외경제협력운영실)	ODA 차관, 민간분야 투자재정 시행	총 ODA의 51%, (외무성에서 분배된 14%+ FILP 특별차관에서의 37%)
재무성	JBIC 로 나가는 기금 관리, 국제금융기관과 조정, 특별분석	총 ODA의 59% (IFIS로 11%, 기타 1%, JBIC 47%)
경제통산성	통상과 투자 : 아시아-일본 경제관계 ; 에너지 및 환경. 투자 촉진	총 ODA의 3%
다른 공식기관들 a. 교육성 b. 기타; 보건성, 농림성, 법무성, 공공관리성, 환경성, 토지성, 경찰청, 재정서비스, 내각 기관들	a. 해외 학생 및 대학교환 b. 기술협력	총 ODA의 5%
비공식기관 a. 비정부기구(NGO) b. 민간분야 c. 학술계	a. 정책주창(advocacy)과 토론, 프로젝트 시행 b. 정책로비, 계약 시행 c. 연구, 정책 주창	공적 ODA의 0.4%, USD 50~250,000의 예산범위내 개발 NGO의 수는 250개

2) 각 기관의 세부책임

□ 외무성: 일본 ODA의 총 책임기관

- 외무성 내 10개의 외무부서(각 국장(Director General)에 의해 운영) 중 경제협력국과 다자협력국(인도주의원조, UN관련기구업무), 경제업무국(WTO등의 기구업무), 지역국이 개발원조 담당부서임.
- 동 부서들 중 경제협력국에서 ODA 정책형성, 연간 ODA 예산절차 수립, 기관 내 원조조정의 업무수행

□ 외무성내 경제협력국

- 경제협력국으로 인해서 외무성에서 정책일관성 도모가 가능함.
- 그러나, 직원수가 적고, 외무장관의 관심을 사기 위해 다른 9개의 부서와 항상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됨.
- 외무성은 JICA와 JBIC와는 달리 원조방식(증여과, 기술협력과, 차관과, 개발협력과)로 조직되어 있어 조정의 문제가 될 수 있음.

□ 일본 국제협력단(JICA): 개발원조 집행기관

- 직원 규모에서 가장 큰 ODA기관으로 개발협력만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임.
- 기술원조업무 비율 50%, 의외에도 외무성의 무상원조, JBIC 프로젝트디자인 처리 및 지원, 훈련프로그램, 일본해외협력봉사단 등의 업무 담당.
- 2003.8월' 독립적인 행정기관' 직위 획득, 기관운영 자주적, 유연해진 동시, 기관 수행평가 및 정보공개의무를 갖게 됨.
- 외무성의 JICA 중기목표(3-5년)에 따라 운영됨.
- 기관평가는 외무성 평가위원회에서 시행

□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일본수출입은행(JEXIM)

- ODA와 FDI를 동시에 다루는 행정기관
- JBIC내에 개발원조를 담당하는 해외경제협력운영그룹(OECO)과 상업적 운영을 담당하는 국제재정협력(IFO)의 두가지 구조가 존재
- 동 사업의 비중은 1:3이며, 인력수도 1:3으로 배치되어 있음.

□ 재무성은 ODA 59%를 관장

- 타 기관을 보완하는 분석역량(분야전략, 부채이슈, 거시경제)을 보유, IMF,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에 관여함.
- 국제과(Interantional bureau)에서 개발원조를 담당하며, 67여명의 직원이 ODA관련 업무에 종사

□ 민간분야, 학술계, NGO 등 비정부 ODA 관계자

- NGO는 규모가 작지만 우산기구(umbrella organization)의 출현 이후 성장에 가속도, ODA의 1%를 담당하고 있음.

3. 운영시스템의 변화

1) 시스템 유연성

□ 무상원조, 기술협력, ODA차관의 명확한 구분

- 무상원조와 기술협력의 범주는 서로 유기적인 연관되어 있는 바, 동 구분이 운영적인 부자연스러움을 초래하거나 수원국과의 조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DAC회원국들은 수원국의 수요 및 효과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일치시킬 것을 권장, 분야별 접근법, 현장기반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음.

- 일본 역시 원조형태별의 명확한 구분을 탈피하고 유연한 분야별 접근법을 시도하는 중임

2) 권한이양 (decentralization)

□ ODA 집행의 권한이양에 대한 법적인 장애는 없지만,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와 ODA기관 간 이익관계로 인해 관료적 장애물 존재

□ ODA기관 내 권한이양의 진행상황

- JICA는 이미 권한이양 기획을 시작, JBIC는 아직 도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현장에 집행권한을 상당부분 이양하고 있는 중임.
- 외무성에서는 베트남에서 시범적으로 권한이양을 시도하는 중임.

□ 궁극적으로는 일본정부가 현장으로의 권한이양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을 설립해야 함.

3) 전략적인 운영추구

□ 일본정부는 ODA의 효율적, 전략적 배분지원의

기준으로서 수원국의 국가원조프로그램(CAP: Country Assistance Programme)을 활용하려는 계획임.

- CAP는 5년을 주기로 형성되며, 현재까지는 15개의 CAP가 승인됨.
- 2003년 이후로 수원국 정부와 일본의 ' ODA작업반 ' 이 대상 수원국의 CAP를 형성하는데 공동 참여함.

4) 평가관리

□ 일본은 원조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ODA피드백(feedback)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옴.

□ 사업에 대한 피드백은 각 집행기관에서 활동 내역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

- 외무성의 평가부서는 정책(ODA헌장, 중기정책, 국가정책, 특별정책이슈)과 프로그램(분야) 평가를 수행
- JICA, JBIC는 사업 프로젝트 차원의 평가를 수행

□ 평가결과가 조직 내에서 수직적으로 유포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수평적인 정보공유의 변화도 증가

- 외무성에서 ' ODA평가피드백 합동위원회 ' 를 창설, 부처간 의견 공유에 노력
- JICA와 JBIC는 합동평가 등의 정보 공유 노력

□ 성과중심 운영체계를 실행화하는 단계

- JICA는 성과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서 개별프로젝트에 합리적프레임워크(logical framework)제도를 도입
- JBIC 또한, 사업시행과 기관 운영 차원에서 성과중심 운영체계 도입 단계임.

VI. DAC의 권고사항

□ ODA 헌장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일본은 수원국의 개발이 ODA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으로 강조하고 국가적 이익이 동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새로운 ODA헌장에 대한 정책과 운영적인 의미, 특히 원조의 효과성에 대해 일본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권장됨.

□ 개발정보에 대한 공유활동을 평가하여 대중이 ODA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경제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ODA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동 건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획득해야 함.

□ 기초보건과 기초교육, 수도시스템 등 빈곤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회기초서비스 지원에 대해 제고해야 함.

□ 교차사안, 특히 빈곤감소 이슈는 별도의 분야로 취급하지 말고 전정부 접근법(government - wide approach)을 개발해야 할 것임.

□ 개발정책 일관성에 대한 정책선언을 하고 동 이슈에 대한 대중 교육을 장려해야 할 것임.

□ 적합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개발정책 일관성에 대한 분석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최저개발국과 관련, 통상관련능력배양을 통해서 최저개발국들이 일본의 안전기준과 품질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임.

□ 외무성은 원조방식에 기반한 협력시스템에서 국가중심 접근법으로 나아가야 함.

□ 외무성은 JICA에게 무상원조운영을 이양하고, 전략, 정책개발, 시스템조정에 집중하도록 권고받음.

□ ODA 평가 시스템을 일관성있게 구성하고, 평가결과와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매커니즘도 개발해야 함.

KOICA-GTZ 전략적 파트너십 심포지움 결과

2005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 개발원조기관인 KOICA와 독일 기술협력공사인 GTZ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움이 개최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Ⅰ. 핵심요지

□ 표제회의에서는, 공여국간의 원조조정을 장려하는 DAC의 현 개발원조 추세에 맞춰 독일과 한국의 개발원조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 지난 세기동안 한국의 개발과정에서 직업훈련, 산업인프라, 산림 등의 분야에서 아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독일의 원조기관과, 이제는 수원국의 입장에서 탈피, 신생공여국으로 등장한 한국의 원조기관 간의 대화이며, 따라서 개발원조의 효과를 증명하는 의미가 있었음.

Ⅱ. 주요 회의 내용

1. 기관 소개

1) 동 심포지움의 의의 확인

□ 1961년 12월에 독일은 경제와 기술협력에 대한 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다른 어떤 공여국들보다도 한국에 가장 먼저 자본원조를 제공한 나라가 되었으며, 한국인의 HRD 및 기술에 매우 많은 도움을 주었음.

- 특히 한국이 역동적으로 경제개발을 추구하던 60,70년대 독일이 우리나라에 제공한 공공차관과 기술협력은 한국 산업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
- 독일에서 제공받은 원조로 한국은 부산과 창원에 직업훈련센터 건립, 전신전화설비, 철도 신호체계, 상하수도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농촌개발에 투자하는 등, 경제개발의 근간을 이루었음.

□ 독일의 기술교육원조가 가장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던 곳은 단연코 한국이며, 우리는 이미 30여년 전에 한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였지만, 한국의 경우는 아직도 가장 성공적인 선례로 남아있음.

- 1960년대의 한국의 GDP는 US$ 60정도로서, 이것은 아프리카 가나와 비슷한 실정이었으나, 한국은 성공적으로 경제개발을 달성하였음. 한국은 빈곤을 타파하고 발전을 이룬 모델이며, 따라서 독일이 갖고 있지 않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이번 기회에 GTZ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험, 전략, 혹은 실수로부터의 교훈을 배우길 원함.
- 현재 우리는 지구화시대에 살고 있으며, 따라서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정해진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님. 지역적 특수성이 크다고 생각되며, 현 아시아의 상황에서는 그 지역에 30년 정도를 주둔하면서 원조를 해온 독일보다 오히려 아시아의 동료국가들이 해결책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2) GTZ 기관 소개

□ 독일의 ODA체계는 연방경제개발협력부(BMZ)에서 개발협력정책을 결정하고, 개발은행(Kfw)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상원조를, 기술협력공사(GTZ)에서 기술협력을 실시하고 있음.

- 유럽의 여타 공여국들보다 일본, 한국과 더 유사한 구조임.

□ 지난 30년 동안 GTZ 내부의 사업 중점은 많은 변화가 있었음. 이전의 기술분야,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은 법적인 제도 및 소프트웨어중심의 지원으로 변화해옴.

- 예를 들어 법 제도, 시스템 구축, 변호사 및 판사 교육, 법령 구축 등과 같은 시스템적인 지원, 능력배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때로는 체계가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GTZ는 정부 기관이 아니라' 기업 '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유연하고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현재 1,000여 명 정도의 인력이 GTZ에 고용되어 있으며, 그중 300명은 두뇌부(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나머지 700여 명은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GTZ International Services는 독일 정부 뿐 아니라 외국의 정부, 다른 기구(세계은행, UN 등)들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공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나 혹은 직접 사업기획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함.

- GTZ의 노하우와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수요에 가장 최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컨설팅 기업 및 NGO 등과 협력하여, 다른 기구 및 정부의 사업을 대리 수행하고 있음.
- 현재 아프가니스탄, 동유럽지역 등에서 세계은행과 다른 민간은행, EU, UNDP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중임.

2. 협력방안 논의

1) 공동 평가

□ GTZ는 아프가니스탄 사업에 있어서 경제재건 및

직업훈련, 수자원분야 개혁, 에너지관리향상, 법치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에 많은 기여를 했음.

□ KOICA 역시 2002년 동경에서 개최된‘ 아프간 재건지원을 위한 국제회의(Tokyo Conference on Reconstruction Assistance on Afghanistan) ’에서 국제사회의 아프간 재건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특별기금을 마련, 긴급구호 및 재건활동을 실시해왔으며, 농촌개발 사업, 병원 및 대학 건립사업과 공무원 연수사업들을 실시해왔음.

□ 그러므로 KOICA와 GTZ가 아프가니스탄에 실시한 직업훈련센터 사업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공동 실시하면, 평가능력 향상 및 비용 절약 등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됨.

□ 양 기관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동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함.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공동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의 세부적인 논의는 관련 부서와 실무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함.

2) 정례적 정책협의회 개최

□ 향후에 양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하기 위하여 KOICA와 GTZ가 중점 지원하는 공통국가의 해외사무소 직원들 간의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논의함.

□ 수원국내에서 분야별로 접근하여 서로가 협의 하에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진 사업을 실시하거나, 프로젝트의 실시와 사후관리 및 기술자문의 역할을 분담하는 형식, 혹은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등, 양 기관이 원조의 효과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양 기관은 상기 사항에 대해서 기관 내에서 해외사무소 협력방안 및 협력범위에 대해 합의를 거친 후 추후에 실무적인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동의함.

3) 기관 간 인적교류 추진

□ 양기관은 공통적으로 ODA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여러 측면에서 노력해온 바, 서로의 기관의 상대적 우위를 배우기 위하여 인적교류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함.

□ 특히 독일의 기술협력기관인 GTZ는 기술협력분야에서 노하우와 앞선 지식을 많이 유보하고 있으며, GTZ 직원들은 수원의 역사를 딛고 공여국으로 진입한 한국의 개발협력분야 사업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특히 GTZ는 기관의 전문직원과 전문가들을 교육시키는 개별 부서인 Human Resources Policy and Development를 보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적 직원 교육을 실행 중에 있음. KOICA의 관련 부서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함.

4) 기관 간 정보 교환

□ 국제세미나 개최 시 양 기관 직원들을 서로 초청하여 주제발표 등을 실시하여 지식을 교환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라 협의함.

□ 양 기관이 공동으로 학술연구사업, 지역 연구 등을 추진하는 것도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됨.

[자료 : KOICA 정책연구실]

JICA 모로코 사무소의 삼각협력 (남남협력) 현황

1. JICA 모로코 사무소의 삼각협력 추진현황

1) 사업개시

□ 모로코 정부의 요청에 따라 1998년부터 시작

2) 사업형태

□ 연수생초청사업 : 불어권 블랙아프리카 연수생을 모로코에 초청해, 모로코 정부기관에서 기술연수를 실시하며, 모로코측이 사업계획 및 추진을 담당하고, JICA에서 항공권을 비롯한 85%가량의 예산을 부담함.

□ 전문가파견사업 : 모로코 전문가를 블랙아프리카 지역에 파견하며 파견비용은 JICA가 부담함

3) 사업규모

□ 연수생초청사업 : 연 100명 내외(과정별 20명 이내)

□ 전문가파견 : 1999년부터 총 14명 파견

4) 사업분야

□ 수산업,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5) 모로코측 담당기관

□ 총괄 : 외교협력부산하 모로코국제협력단 (Morocc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수행기관 : ISTPM(수산물품질연구소), IFEER(도로건설인력연수원/JICA 프로젝트사업 수원기관), ONEP(국립식수청) 등

2. JICA의 사업추진 절차

□ 수요조사 : 모로코 사업수행기관이 사업계획서를 JICA에 제출

□ 구상서체결 :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면 상세사업계획을 포함하여 JICA, 모로코 외교협력부, 사업수행기관 간 약정을 체결함(첨부 구상서모델 참조). 삼각협력에 관한 모로코-일본 양자간 협정은 별도로 없으며, 프로젝트 형식으로 단위 사업별 구상서가 체결됨.

□ 사업수행 : 모로코 수행기관이 담당

□ 사업평가 : 총 3회에 걸쳐 JICA에서 실시(매년 사업종료시, 전체 사업종료시, 전체사업종료후 3년 경과시)

3. 기타

□ JICA 모로코 사무소 Obata 부소장은 JICA가 삼각협력보다는 남남협력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동 사업의 효과가 일본내 연수생초청 및 전문가파견사업에 비해 두드러진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모로코와 같이 남남협력에 관심을 갖는 개발도상국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힘.

□ JICA는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서 모로코 외에 이집트, 튀니지에서도 삼각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추진시 수원국인 블랙아프리카지역 JICA사무소와의 공조를 통해 사업타당성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4. 주모로코 대사관 검토의견

□ 모로코는 아프리카 역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교육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 및 모로코와 불어권 아프리카국가 대상 삼각협력사업 추진시, 의사소통 면에서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남남협력을 제반 정책적 고려 하에 우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무상원조 예산의 제약이 큰 바, 남남협력의 기대효과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조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사업전반을 모로코에 일임하는 일본의 모델보다는, KOICA 프로젝트 수원기관 및 파견전문가를 활용하여 예산뿐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 삼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협력방안인 것으로 사료됨.

- 한 예로, KOICA는 2004~05년에 걸쳐 50만불 규모의 자동차정비직업훈련 교사연수원 개선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모로코 직업훈련청은 동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블랙아프리카대상 연수사업(무상원조)을 실시중인 바, 동 사업을 삼각협력사업으로 확대하여 시범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동 수원기관에는 우리나라 전문가를 장기 파견하여 연수과정 전반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교육효과를 제고함.

[자료 : 주모로코 대사관]

스리랑카-일본간 기술협력 협정체결

1. 일본은 대스리랑카 원조사업 50주년을 맞아 양국간 협력사업의 확대를 도모하고, 스리랑카 경제/사회 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12일 양국간“ 기술협력협정 ”을 체결하였음.

□그간, 일본의 기술협력사업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각 사업별 agreement 및 note verbal 등의 교환을 통해 이뤄져 왔음.

2. 이와 관련, 일본 JICA를 통해 그간 스리랑카에 지원된 무상 기술협력 실적 및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음.

가. 일본의 대스리랑카 원조 실적 총괄

(1954년 05.3월 기준)

□연수생초청 : 6,044명

□전문가파견 : 1,172명

□봉사단파견 : 청년봉사단 632명, 시니어봉사단 27명

□지원총액 : ￥5,257백만

나. 주요 분야별 원조 실적

□기간산업 분야

- 실적총괄 : 개발조사 27건, 프로젝트 17건, 전문가파견 120명, 연수생초청 830명
- 주요사업
  - • 타당성조사 : Jaya 컨테이너 터미널, Unity 컨테이너 터미널, 콜롬보항 북부 해협 준설 등
  - • 실시설계 : Bandaranaike 국제공항, Kandy 용수공급 프로젝트, Nuwara Eliya 용수공급 프로젝트 등

□보건의료 분야

- 실적총괄 : 프로젝트 26건, 전문가파견 244명, 연수생초청 900명 이상
- 주요사업 : Sri Jayawardanepura 교육병원, 생명공학 서비스 센터 구축(Bio Medical Engineering Services), Peradeniya 대학 부설 치과대학 병원, Killinochchi 지방병원, Jayawardanepura 국립간호학교 등

□농업분야

- 실적총괄
  - • 연수생초청 1,051명 : 특히, 2003년도부터 착수한 스리랑카 특별연수과정인 종자육종 분야 연수의 경우, 매년 5~10명에 한 지속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 전문가파견 143명, 프로젝트 7건
- 주요사업 : Gampaha 지방 농업확충 및 개선사업, 국립식물검역 서비스센터 구축사업, Walawe 관개 개선 및 확충을 위한 마스터플랜 등

□통신 및 방송분야

- 주요사업
  - • 1970년대 후반부터 2대 국영 TV 방송인 Sri Lanka Rupavahin Corporation(SLRC) 및 Independent Television Network(ITN)에 대한 지원 지속
  - • 1988 1991년간 국영 라디오 방송인 Sri Lanka Broadcastin Corporation(SLBC)에 대하여 단파국, 스튜디오 및 장비 등 지원
  - • 1988년 디지털 전송 및 무선통신 시스템 지원 및 매년 방송 분야 연수 지속

[자료 : 주스리랑카 KOICA사무소]

아체 · 니아스 지원을 위한 조정회의 개최

아체 · 니아스 지원사업 관련, 인도네시아 사업수행기관 BRR은 2005.10.4(화) 자카르 타시 소재 보르부두르 호텔에서 주요 원조공여국, NGO, 국제기구 관계자 및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아체 · 니아스 지원을 위한 조정회의(CFAN:Coordination Forum for Aceh and Nias)를 개최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Ⅰ. 핵심 요지

1. 회의목적

□ BRR 설립후 6개월간의 실적 평가 및 향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참여자 의견 수렴

2. 참석국가(기관)

□ 미국, 호주, 일본, 독일 등 10여개 공여국(기관), ADB, World Bank, Unicef 등 5 개 국제기구, Save the Children, Oxfarm 등 20여개 NGO 및 민간부문 사업참여자(아체지역 진출업체 등)

3. 회의 주요내용

1) BRR 사업추진 실적보고

□ 피해사항 종합 집계, 발표

- 131,000명 사망, 이재민 570,000명 발생
- 주택 120,000채 손실 또는 파괴
- 800km 도로 유실 및 교량 2,260개 파괴 또는 통행불능
- 693개 보건기관 (병원, 보건소, 의원 등) 파괴 또는 피해
- 1,662개 학교 파괴 또는 피해

□ BRR 설립 목적 및 활동방향 제시

- 아체.니아스 피해지역 재건 · 복구사업 수행 총괄을 위해 2005.4.16 설립
- 전담직원 124명, 자문관 24명 확보, 활동
- 재건복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Donor,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수혜지역 및 주민간의 협력체제 구축 및 조정
- 재건복구사업의 지역, 분야별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

□ BRR 설립후 사업실적

① 보건,의료분야

- 총 285개 의료기관 복구계획 수립 (132개 기관 완료)
  - 9개 종합병원(6개 병원 완료), 30개 보건소(6개소 건립 완료), 80개 간이 의료소(30개소 복구), 166개 조산원 (75개 완료)
- 각종 보건 프로그램 수행
  - 105만명의 어린이 홍역 예방주사 접종, 44만명 어린이 영양공급 프로그램 집행, 의료요원 전문교육 및 훈련실시 등

② 주요 기간산업 구축

- 울레레port 복구사업 착수(05.7.28/호주정부 지원)
- 반다아체 - 물라보간 도로 복구 프로젝트 착공 (05.8.25/USAID, JICA)
- 말라하야티port 복구사업 합의(05.8.22/네덜란드정부와 MOU 체결)
- 물라보부두 복구사업 진행중(06.2월 완공예정/싱가폴 지원)

③ 교육분야

- 366개 학교 재건 · 복구 계획수립(119개교 완료)
  - 55개 유치원(12개 완료), 221개 초등학교(74개 완료), 56개 중학교(21개 완료), 34개 고등학교 (34개 완료) 등

④ 아체 · 니아스 주민 생계 지원사업

- 31만 헥터 쌀 경작지 복구
- 영세사업자금 4,951건 지원
- 생계형 기술교육 7,000명 수료
- 4,357척의 소형보트 건조 및 7,234척 추가 건조, 지원계획 수립
- 600헥터 양어장 복구 계획지원, 129개 어판장 건립 등

⑤ 주택건설

- 국제기구, NGO 등과 협조해 76,039채 주택건립 계획수립
  - 현재 10,119 채 완공 및 19,796 채 복구 진행중

⑥ 종교시설 재건

- 총 581개 종교시설 복구계획(141개소 완료)

2) 원조 공여국 및 참가기관(업체) 반응 및 의견

□ BRR 설립후 어려운 현지 여건하에서 지난 6개월간 이룬 다양한 사업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

□ 그러나 아직 BRR의 사업수행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고 지방정부와 중앙 정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하며 원조국, 원조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

□ 현재 긴급구조활동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재건 복구 사업추진이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BRR의 주도적인 사업계획 조정 및 총괄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

□ 재건 · 복구사업도 지역별, 분야별 편차가 심해 일부 중심지역은 필요에 비해 지나친 지원이 집중되고 일부 원거리 벽지 지역은 지원이 일체되지 않

는 양극화 현상 문제점 지적

□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료적, 수동적 자세와 정부기관간의 비효율적인 사업수행체계 개선 필요

Ⅱ.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는 인도네시아 아체 · 니아스 재건복구 전담기구인 BRR이 기관설립 6개월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사업실적을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조국(기관)과 사업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을 도출, 문제점 해결을 통해 향후 효율적인 사업수행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회의였음.

□ 특히 동 회의는 아체 · 니아스 지역에서 현재 직접 사업수행을 하고있는 현장 참여자 중심으로 진행되었는 바 초기 긴급 구호활동 전개시부터 현재의 재건 복구사업에 이르기까지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소규모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NGO들의 의견제시가 많았음.(구호활동인력 비자 연장 불편 및 제도상 문제점, 기관과의 협조체제 미흡 등)

□ 그러나 회의 참석자의 다양성 (원조공여국, 원조기관, 국제기구, NGO, 민간부문 사업 참여자 등)에 따라 관심분야와 견해가 상이하여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의견 도출보다는 각층의 의견을 파악하는 정도로 회의가 마무리된 바 BRR은 제시된 의견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여 향후 공지하기로 하였으며 매 6개월마다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재건 · 복구사업 참여자들의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기로 협의하였음.

[자료 : 주인도네시아 KOICA사무소]

인도네시아 원조공여국(CGI) 중간점검회의 개최 보고

Ⅰ. 핵심요지

□ 금년도 CGI mid-term review 회의가 10월 3일(월) 한국을 포함, 대인도네시아 공여국 대표 및 세계은행, IMF, ADB, UNDP 등 국제기구 대표들 참석하여 인도네시아 보르부도르 호텔에서 개최되어 현인도네시아 경제상황, 2005~2006년도 정부 예산안 및 MDGS에 따른 인도네시아 빈곤 퇴치정책에 대한 설명 및 협의가 있었음.

- 공여국 대표로는 우리나라 대사 및 미 · 일 · 독 · 불 대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측에서는 경제조정장관, 복지조정장관, 재무장관 및 국가개발계획청장이 참석

□ 인도네시아 정부측의 최근 유가인상 단행에 대해 대부분의 공여국 및 국제기구 대표들은 동조치가 인도네시아 거시경제 및 균형 재정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용단을 평가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유가인상을 통해 절약된 정부 재원 중 상당부분을 15.5백만명의 빈민층에게 직접현금지원(5조 Rp), 학교운영지원(6.3조 Rp), 기초보건지원(3.9조 Rp), 시골지역기간산업지원(3.3조 Rp) 등에 사용 예정임을 발표하였으며, CGI 멤버들은 동조치가 투명하게 추진될 것을 주문함.

□ 차기 CGI 연례회의는 2006년 3~4월경 개최키로 합의함.

Ⅱ. 바크리 경제조정장관의 현인도네시아 경제상황 설명

1. 10.1 발리 폭탄 테러 영향

□ 금번 테러가(2002년 발리 1차테러에 비교시, 인도네시아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 발리는 인도네시아 전체 GDP의 1.8%

차지)하고, 주재국 정부가 테러범들을 발본색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함.

- 금년 말까지 관광객이 20% 줄어들 경우, 이는 인도네시아 GDP에 -0.3% 영향을 줄 것임(인도네시아 전체 관광 수입은 GDP의 5% 차지).
- 인도네시아 경찰청 부청장이 발리 폭탄 테러 현황 브리핑 실시

2. 10.1 국내유가인상 단행 자체 평가 및 대책

□국내유가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지속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금번 유가인상은 국민들에게는 비인기 정책이지만, 결국 국민들을 위한 정치적 부담을 각오한 어려운 선택이었음.

- 보완책 : 서민들에 대한 직접현금 지불제도 도입(1가정당 분기별 300,000Rp를 내년말까지 지원), 기업들에 대해 규제철폐 및 세제혜택 등 부여 방안 검토중
- 인플레 대책 : 유가인상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인플레가 예견되나, 정부로서는 이자율 추가 인상 등 연말까지 한자리수 범위내에서 인플레 억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 예정

3. 투자유치 및 개혁정책

□투자유치

- 유도요노 대통령은 외국투자유치를 위해 세일즈 외교를 강력 전개하고 있으며, 동 노력의 결과로 금년 1~7월간 대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가 전년대비 79% 증가한 바, 향후에도 CGI 멤버들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확대를 당부

□개혁정책(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

- 신투자법안 : 조만간 국회에 제출 예정
- 5개 세제 개정안 : 9월초에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06년 초까지 국회 통과 전망

□인도네시아 항만에서의 하역비용(Terminal Handling charge : THC)을 20피트 컨테이너당 150미불에서 90미불로 인하 예정임을 발표

4. 기간산업 현황

□금년 1월 개최된 제1차 인프라 서미트에서 발표된 91개 프로젝트의 입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총연장 104㎞ 고속도로 사업자를 선정중 및 13개 고속도로 프로젝트(693㎞)가 재입찰 중이며 가스 파이프 라인 프로젝트(깔리만탄-자바 연결), 발전소 건설 등이 진행되고 있음.

□기간산업의 효율적 투자유치를 위해 부지 강제 매입관련, 대통령령 발표 등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중임을 소개

III. 안와르 재무장관의 2005, 2006년도 예산안 설명

□2005년 예산안이 국제고유가, Rp화 환율 불안정, 아체 쓰나미 복구비 지불, 석유보조금 삭감, 지방선거 실시 등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2005년 중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안 중에서 최초로 2차례나 수정하게 됨.

구분	2005년도 초안	2005년도 1차 수정 예산	2005년도(9.27) 2차 수정 예산의회 통과	2006년도예산안 (미확정)
GDP 성장율	5.4%	6%	6%	6.1%
환율(1미불)	8,600	9,300	9,800	9,900
인플레율	5.5%	7.5%	8.6%	8.0%
3개월 이자율	6.5%	8.0%	8.4%	9.5%
유가(배럴)	$24	$45	$54	$57
GDP (명목)	2,560.9조 Rp	2,624.3조 Rp	2,651.2조 Rp	3,021조 Rp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0.7%	0.8%	0.9%	0.7%

□2005년도 1, 2차 수정 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검토중)에 반영된 주요 거시경제 지표

□2006년도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

- 석유 보조금 절약으로 인한 재원의 개발재원으로의 전용, 공무원 보수인상, 지방교부금 증액 등

3. 인도네시아 대외채무

(단위:US$)

2004	2005.6월	증감율
1,370억불	1,363억불	-0.73%

4. CGI 멤버들에 대한 요청사항

□아체 쓰나미로 인한 각국의 인도네시아 채무유예 결정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향후 좋은 조건의 대인도네시아 차관(softloan) 제공을 요청(40년간 무이자 차관 제공 등)

IV. 복지조정장관 및 국가개발계획청장의 주재국 빈곤퇴치 전략 소개 (MDGS 목표 달성과 연계)

1. 빈곤퇴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기 국가개발계획(2005~2009년)의 핵심 목표로 2009년까지 빈민층을 8.2%로 낮출 예정

□중앙 정부차원에서 작성한 빈곤퇴치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lan)에 따라 33개주 및 이하 소행정단위까지 모든 하위 레벨의 자체 빈곤퇴치 전략이 완성

- 8개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
- SMES에 대한 지원 강화, 서민들에 대한 micro credit 지원 강화

□중앙 각부처의 정책에 빈곤퇴치가 주요 정책 사안으로 반영(main streaming process)

2. 빈곤퇴치 과정에서 부패방지 노력 설명

□중앙정부의 서민지원 자금 지원방식의 변경

- 유가인상 보상책으로 지급되는 현금, 학교운영

지원비 및 건강 치료비 등이 과거처럼 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수혜 대상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 우체국, 학교장 및 의료보험회사 등에 송금하는 제도 운영을 통해 중간에서 자금이 유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

3. 10.1자 국내유가인상으로 절약된 정부예산을 직접 서민들 지원비로 전용

□ 빈민층 가정(15.5백만 가구)에게 1개월 100,000Rp (약 10미불)씩 약 1년간 지원(5조 Rp), 이후 지원여부는 추가 검토 예정

□ 기타 학교운영지원(6.3조 Rp), 기초보건지원(3.9조 Rp), 시골지역 기간산업지원(3.3조 Rp) 예정

Ⅴ. CGI 멤버들의 언급내용

1. 일본대사

□ 유류인상 조치 환영

□ 금년 말까지 쓰나미관련 채무이행 모라토리엄이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균형재정 유지가 어려워 질 것이며, 일본 정부는 세계은행, ADB 등과 협조, 인도네시아 정부 지원 예정

□ 빈곤퇴치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기간산업프로젝트에 집중된 기존의 일본 ODA 중 일부를 빈곤층 보호프로젝트로 전환을 검토할 예정

□ 현재 국회가 검토 중인 세제개혁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

- 세리공무원과 납세자의 동등 대우 문제(세리공무원의 월권 가능성)
- 납세자가 납세액을 스스로 산정하는 문제

2. 한국대사

□ 10.1자 유가인상 내용 중 서민들이 사용하는 가정용 kerosine이 가장 많이 인상(185.7%) 되었는 바, 향후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실시되는 직접현금지불제도가 장기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기대

□ 대폭적인 유가인상으로 인해 주로 기업인으로 구성된 한국인 커뮤니티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1차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해 달라는 입장임을 전달

3. IMF

□ 인도네시아 정부의 균형 예산안을 평가하나, 내년부터 대외채무 지불유예가 종료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성 지적

□ 공정한 재원 분배, 부패방지가 복지예산 집행의 관건임을 언급

□ 2006년부터 도입 예정인 조세사면제도(tax amnesty)가 정부 재정수입에는 기여하겠지만,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바, 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 지적

4. 세계은행 및 UNDP

□ 금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서민들에 대한 직접 현금 교부는 최근 수년 기간중 최초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복지 비용을 직접 집행한 사례로서 높게 평가하며, 향후 서민들에 대한 복지개선(의료, 교육)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를 요망

□ 인도네시아 정부가 향후 절약된 재원을 어떻게 지혜롭고, 투명하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임을 언급

Ⅵ. 관찰 및 평가

□ CGI 중간 점검회의는 매년 당초 7-8월 개최되나, 금년도에는 지연 개최 되었으며, 10.1자 국내유가인상 단행 및 발리 폭탄테러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인도네시아 원조공여국들에 대한 신뢰 확보 및 국내유가인상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도출을 위해 개최한 것으로 보이며, 회의를 통해 대부분의 CGI 멤버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정부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금번 발리 테러에도 불구,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10.4일 0.4 퍼센트 주가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환율도 안정세를 유지

□ CGI 멤버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유가인상으로 절약된 재원을 서민복지에 전용하는 과정이 투명해야 할 것임을 언급한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부패척결, 규제철폐, 개혁법안(신투자법, 세법 개정안 등)의 조속 국회 통과 등의 가시적인 조치가 이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함.

□ 한편, 바크리경제조정장관은 회의 말미에 향후 CGI의 운영방식, CGI의 역할 등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내년도 CGI 연례회의(3~4월경) 이전에 동건을 실무차원에서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함.

[자료: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태국 최초로 ODA 공여관련 보고서 발표

1. 태국은 9.14 UN 세계정상회의에 즈음하여 OECD 국가들과 함께 UN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자국의 기여도에 대한 보고서를 최초로 발표한 바, 이에 따르면 태국은 2003년도에 GNI의 0.13%에 달하는 1.67억불의 유·무상원조(ODA)를 인근 라오스, 몰디브,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공여한 것으로 나타남.

2. 태국 외무부 보도자료(별첨) 및 당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국의 전체 ODA중 93%는 최빈개도국(LDC)에 지원되었고, 그 중의 대부분(전체의 73%)은 이른바 Baht화 경제권에 속하는 태국 인근의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 대한 도로, 교량, 철도, 공항 등 인프라 건설지원에 사용됨.

3. 태국은 현재 원조의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2004. 10. 18. 외교부 국제경제기술국(DTEC)를 태국 국제협력단(TICA : Thail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으로 개편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옵서버 가입을 신청하는 등 OECD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 중임.

[자료 : 주태국 대사관]

對스리랑카, 몰디브 8월 원조동향

선진원조국 및 국제기구 등의 8월중 스리랑카, 몰디브 원조동향은 아래와 같음.

1. 스리랑카

1) 미국

□ USAID는 인도양 연안 국가들이 쓰나미 등과 같은 해양재해에 대하여 탐지 및 대비를 가능케 하는 인도양 쓰나미 경보시스템(IOTWS; Indian Ocean Tsunami Warning System)을 구축 예정임.

- 동 구축 사업은 16.6백만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 및 몰디브 등 지역에서 국가 및 지역 수준의 통합적 조기경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임.
- USAID는 동 프로그램을 UNESCO 산하 IOC(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U.S. Geological Survey, US Trade & Development Agency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2) 일본

□ 일본 정부는 JICA를 통해 쓰나미 피해지역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동부해안 4개 지역(코마리, 페리야칼라, 코다라칼라, 판치찬키니)에 약 9백만불 상당의 도로 및 교량을 건설키로 하고 8.25 준공식을 개최하였음.

- 2005. 9월부터 2006. 11월까지 4개 지역에 총 연장 1,440m 도로 및 87m 규모의 교량 건설 예정임.

□ 일본 정부는 JICA를 통해 3.7백만불 규모의 교육개발 사업(Improving School Management to Enhance Quality of Educ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Science and Mathematics)을 추진키로 함.

- 쿠르네갈라, 웰라와야, 반다라웨라, 트린코말리 및 자프나 등 5개 지역을 중점 지원지역으로 선

정하고, 2005년 10월부터 향후 3년간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함.

- 동 프로그램은 일본(도요타)식의 KAIZEN(개선)을 교육의 전 영역에 도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교육담당 기관 및 일선학교 조직에서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영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육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사마기푸라 및 라트나푸라 지역에 73천불 규모의 식수공급 사업을 착수함.

- 기층민에 대한 인간안보 프로젝트(Grassroots Human Security Projects) 차원의 무상원조로 실시되는 금번 사업은 단순히 안전식수만을 공급하는데서 나아가 위생환경 개선을 통한 질병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사업을 통해 약 5천여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안전식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일본은 쓰나미 피해 복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FAO를 통해 130여명의 어민들에게 13.5만불 상당의 어망 900개 및 엔진 67대 등을 지원함.

□ 일본 정부는 스리랑카 관광산업 부흥을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간 총 32백만불 규모의 무상원조를 실시할 예정임.

- 아누라다푸라, 누와라엘리야, 시기리야, 캔디 및 네곰보 등 유적지를 중심으로 관광시설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확장 사업, 기간시설 확충, 환경친화적인 신규 관광시설 마련, 호텔학교 설립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3) 중국

□ 중국은 쓰나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WFP를 통해 270톤 상당의 생선통조림을 기증하였음. 금번 지원을 계기로 중국정부는 스리랑카 내에서 다자간 원조 부문에서도 주요 공여국의 지위에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중국은 이외에도 쓰나미 피해지역 복구를 위하여 32만불 상당의 고등어 16 컨테이너분을 지원한 바 있으며, WEP의 food-for-work 프로그램(36,500여명의 노동자에게 도로공사 등의 일자리 제공/실수혜인원은 약 182,000명)에 1백만불을 지원하였음.

ㅇ 중국 하이난성은 스리랑카 남부 골(Galle)시와 영구 자매결연을 맺고 향후 경제 및 문화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1차 사업으로 쓰나미 피해지역 복구를 위하여 휴양공원 및 수로시설을 지원키로 함.

4) ADB

□ ADB는 2006년부터 5년간 스리랑카 기술교육 부문 개발 프로젝트에 27백만불을 무상 지원키로 함.

- 초급 학력자들에 대한 대안적인 형태의 고급교육 기회 제공 및 중간 기술수준 기능 인력들에 대한 숙련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직업기술훈련 대학 " 설립
- 각 지역별 기능대학 중 1개를 선정하여 선진기술 교육훈련이 가능한 최고 훈련기관으로 육성
  - 동 공과대학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설예정인 공과는 생물의학(bio-medical), 세라믹, 점토, 건축, 전기, 제조, 전자인쇄, 메카트로 닉스, 식품가공, 해양공학, 보석디자인 등임.
  - KOICA(자프나 기능대학), JICA(마라다나 기능대학), German Technical Cooperation Agency가 추진 중인 사업 등이 유사사례로 소개됨.

□ ADB는 일본 JBIC과 공동으로 플랜테이션 사업부문 지원을 위한 " Plantation Development Project "를 추진키로 함.

- 총 600만불이 투입되는 금번 사업은 2단계에 걸쳐 진행 예정인바, 플랜테이션 산업인프라 개발과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의 영역으로 나뉘어짐.
  - 플랜테이션 산업인프라 개발 : 공장선진화, 도로확충, 작업환경 개선 및 마을회관 건립 등
  - 지역사회 개발 : 노동자 주택협동조합 조성, 양성개발(gender development), 노동자 소득증대 활동 및 알콜중독 퇴치 프로그램 등
- 플랜테이션 산업부(Ministry of Plantation Industries)는 여타 공여국으로부터의 추가 자금 지원이 확보될 경우, 동 프로그램을 장기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5) EU

□ EU는 쓰나미 피해 직후 긴급구호의 일환으로 30백만 유로를 지원한 데 이어, 재건복구 패키지로 45백만 유로를 추가 지원함.

- 동 자금은 쓰나미 집중 피해 지역인 스리랑카 동북부에 해안도로(270km) 건설, 마타라-바티깔로아간 도로 건설, 지역사회 기초 인프라 구축, 피해주민 대상 기술훈련 교육 등이 투입될 예정임.
- 동 사업은 UNDP 및 ADB 재정지원을 통해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EU측은 금번 건설 사업 등을 통해 최대 약 5천여 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한편, 스리랑카 정부는 도로 복구 및 건설 사업이 쓰나미 피해복구를 위한 전략적 최우선 과제이며, 동시에 남동부 지역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임을 강조하고 있음.

6) IMF

□ IMF는 쓰나미 피해복구를 위한 대규모 해외자금의 유입이 인플레이션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함.

- 2004년도 평균의 두 배 가까운 14%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쓰나미 재건복구 지원사업이 병목현상을 보일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이에 IMF는 효율적인 재건복구사업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스리랑카 정부의 공적원조자금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 및 민간자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을 제언함.

7) UNDP

□ UNDP는 스리랑카 경찰과 공동으로 " 정의구현사업(Equal Access to Justice Project) "을 실시키로 함.

- 동 사업의 주요목적은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범죄없는 사회를 위하여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

는 것임.

- 특히, 약물 및 알콜 중독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은 주로 지역사회 청소년 및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없는 사회 :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미래 ”라는 문구가 부착된 포스터, 간판, 차량 부착물 등을 통한 캠페인 및 영상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임.

8) 기타

□ 스리랑카 정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 Ministerial Regional Meeting on MDGs ”에서 국제사회에 스리랑카에 대한 장기 채무 상환기일의 연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하였음.

- 쓰나미 피해 이후 개발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이 긴요함을 강조
- 스리랑카는 MDGs 과제 달성과 관련, 초등교육, 영아/모성 사망률, 교육에서의 양성평등 등의 영역에서는 비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인간개발지수 면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빈곤계층의 소득증대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서 스리랑카 인근의 아시아 국가의 소득수준과 비교할 때, 상당히 뒤쳐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스리랑카 정부는 전체 인구의 23%를 빈곤계층으로 구분하고 있음).

□ NGO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쓰나미 원조사업에 대한 스리랑카 내부적인 불신 및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임.

- 일부 국제 NGO들의 경우, 쓰나미 피해지역에서의 주택복구 사업 관련, 토지 및 자금을 선수령한후 사업착수 시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은행이자를 불리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이들 NGO가 고급 숙박시설 및 차량 이용 등에 원조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신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

2. 몰디브

1) ADB

□ ADB는 쓰나미 피해복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분야 개선을 위하여 40만불 규모의 기술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함.

- 관광과 어업이 주산업인 몰디브의 경우, 생태환경의 취약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바, 정상적인 국가개발을 위하여는 환경분야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함.

-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 등의 자금이 투입되는 금번 사업은 식수 및 위생부문 복구, 정부의 환경평가 역량 강화, 환경보호 캠페인 및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및 쓰레기 처리 관리증력 증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 주스리랑카 KOICA사무소]

스리랑카 9월 원조동향

선진원조국 및 국제기구 등의 9월중 스리랑카 원조동향은 아래와 같음.

1. 일본

□ JICA의 IT 분야 교육훈련 사업

- IT 산업 분야의 인적자원 역량개발 지원 및 청년층 고용기회 창출을 위하여 US$57백만 규모의 IT 분야 교육훈련 사업을 향후 5개년간 실시 예정
- 스리랑카 정부는 1998년을 “ 정보통신의 해 (Year of Information Technology)로 선포하고 IT 분야의 통합적 인력개발 계획 추진
  - 동 사업의 일환으로 JICA 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콜롬보대학 컴퓨터 학과(UCSC)에 웹기반 훈련과정 개설(02 04)
- 상기 사업성과를 제고코자 USCS에 e-learning 기술교육을 위한 일련의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JICA와 USCS간 5개년 협정 체결
- 향후 5년간 매년 개설되는 훈련과정을 통해 스리랑카 내국인 160명과 외국인 80명 등 총 240명의 IT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In-country Training Programmes(ICTP) : 스리랑카 국적의 IT 분야 종사자 대상
  - Third-country Training Programmes(TCTP) :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몰디브, 부탄, 네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이란, 아프가니스탄, 케냐, 우간다 및 탄자니아 등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16개국 IT 인력

□ JBIC의 지뢰제거 사업

- 스리랑카 북부 자프나, 킬리노츠치, 바부니야 및 마나 지역과 동부 바티깔로아 지역을 대상으로 지뢰제거 활동 지원, 관련 장비 지원 등 지뢰제거 사업 추진
- 총 US$1,845,721이 투입되는 금번 사업은 Denish Demining Group, HALO Trust,

Mines Advisory Group, Norweign People's Aid, Swiss Foundation for Mine Action 등 5개 국제 NGO에 의해 추진되며, 지뢰제거 현장에의 원활한 전기 공급을 위한 전선망 구축사업(electricity power line project)도 별도 지원

□ Puttlam 지역 Grass Roots Human Security Project

- 지속가능한 인적자원 개발 및 농업을 통한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푸트람 지역에서 추진해 온 US$66,233 규모의 "Human Security Project"가 성공적으로 종료됨.
- 물탱크 지원을 통한 관개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농로(農路) 개선 등을 통해 수확량 증대 및 물류 여건을 향상시켰으며, 이는 곧 1,700여 농가의 수익증대로 이어짐.
- 일본은 지난 3년간 US$8백만 규모의 상기와 같은 "Human Security Project"를 스리랑카 전역에서 추진해 옴.

2. 중국

□ 화력발전소 설비이전을 위한 차관 지원

- 화력발전소(300MW 규모) 설계 및 건설(design-build-transfer)을 위한 양국간 MoU 체결
- 2005년 10월~2009년간 추진 예정인 동 사업은 단일규모로는 역대 최고로 총 US$380백만 투입 예정(20년 거치 상환)

3. 미국

□ USAID의 Tsunami Reconstruction Programme (TRP)

- 총 US$33백만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
- Arugam Bay에 700m 길이의 최신공법 교량 건설
- Pottuvil 지역에 식수 및 위생시설 개선 지원
- 관광산업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컨설팅 제공
- 14개 직업훈련 시설 복구
  - 2개의 모델학교 지원, 직훈 관련 기자재 지원 및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포함
- Hikkaduwa, Mirissa, Dondra 지역 어촌마을 개선 및 지역 주민 참여 확산을 통한 해안지역 관리 사업 등

4. UNDP

□ UNDP's Transition Programme

- UNDP는 분쟁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스리랑카 동북부 지역에 대한 인도적, 재건복구 지원을 통해 평화정착을 도모코자 스리랑카 농어촌지역의 전통적 경제 부문인 농업, 축산 및 어업부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일환으로 Vavuniya 지역 가축육종협동조합에 우유가공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오토바이, 트레일러, 우유포장용 캔 등을 CIDA의 재정지원으로 지원함.

□ 부패방지 노력 지원

- UNDP는 스리랑카 CIABOC(Commission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Bribery or Corruption)를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및 부패방지 노력을 지원하고 있음.
- 공공부문 watchdog 그룹 운영, 시민 대상 의식화 교육 및 CIABOC의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총 US$125,000이 투입될 예정임.

5. IOM

□ 쓰나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산 D/B 센터 구축

- 쓰나미 피해 지역 주민들의 개별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구호물품 전달 및 재건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신속성 강화 및 중복지원 지양 등을 목적으로 전산 D/B 센터 구축
- 총 US$1.2백만이 투입되는 금번 사업은 ECHO(European Commission Humanitarian Aid Office)에서 재정 지원
- 동 전산 시스템 구축은 재건복구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쓰나미 피해지역 청년 대상 워크숍 개최

- IOM은 USAID와 일본 정부의 후원으로 쓰나미 피해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와 인신매매, HIV/AIDS, 불법이민 및 여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는 워크숍 개최

□ 쓰나미 피해지역 임시 주택 지원

- 일본, 그리스, 중국 및 ECHO 등의 재정지원으로 암파라, 마타라, 트린코말리, 콜롬보, 감파하, 칼루타라 및 바티깔로아 지역에 총 3천채의 임시주택(약 2년 수명) 지원
- 금번 지원으로 약 86천 세대 가족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IOM은 지역사회의 결속력 강화 및 쓰나미 피해지역 주민들의 정서함양등을 위하여 임시주택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로 유치원, 청소년 클럽, 티센터, 봉제센터, 도서관 및 운동장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음.

6. 쓰나미 피해복구 임시주택 지원사업 중간 점검

□ UN 기구 및 많은 NGO들의 지원을 통해 50,000여채의 임시 주택이 건축되었으며, 4,050채의 주택이 건축중임.

□ 5만여채 임시주택 지원으로 많은 가구들이 난민촌 생활에서 벗어나 기초위생시설, 전기, 수도, 인접도로, 여가시설 등이 마련된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에서의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아이들은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상당수 가구의 가장들이 일자리를 찾게 되었음.

- 쓰나미피해 직후, 773개 이재민 캠프에 232,000 세대 552,000명이 거주하였으나, 2005년 8월 15일 현재 42개 캠프에 1,589 세대 7,250명으로 감소
- 5만여 임시주택 중, 트린코말리 · 바티깔로아 · 암파라 · 자프나 · 킬리노츠치 · 물라티보 등 동북부 지역에 약 38,600채가 지원되었으며, 골 · 칼루타라 · 함반토타 및 마타라 등 남부 지역에 약 12,260채가 지원됨.

<2005. 9월 국/기관별 원조 총괄표>

국/기관명	지원액	사업내용	대상지역	비 고
일 본	US$57백만	IT 분야 5개년 교육훈련 사업	콜롬보(콜롬보 대학)	- 사업수행 : JICA
	US$66,233	Human Security Project -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사업	푸트람	- 사업수행 : 스리랑카 CTF (Community Trust Fund)
	US$1,845,721	동북부 지뢰제거 사업 - 지뢰제거, 장비지원 및 대상지역에 대한 전선 연결 등	자프나, 킬리노츠치, 바부니야, 마나, 바티깔로아	- 사업수행 : DDG, MAG 등 5개 INGO
중 국	US$10백만	중-스 우정촌 조성 - 500sq 규모의 침실 2, 거실, 화장실, 부엌 등의 시설을 갖춘 주택 건축	골	- 사업수행 : China Charity Federation
	US$380백만	화력발전소 설비이전 차관사업 - 2005년 10월~2009/300MW 규모/20년 거치 상환	노로츠초라이	- 사업수행 : 중국-China National Machinery & Equipment Import & Export Corporation 스리랑카-Ceylon Electricity Board
미 국	US$33백만	쓰나미 재건 프로그램 - 교량, 식수/위생 설비, 직훈원, 해안 개발 등 대규모 Infrastructure 지원사업	포뚜빌, 히까두와, 미리사, 돈드라 등 지역	- 사업수행 : USAID
	US$422,800	국제공항 개선 사업	네곰보	- 사업수행 : USTDA (US Trade & Development Agency)
	US$356,000	태양열 이용 지역사회 용수공급 시범사업	함반토타	
	US$475,000	콜롬보-외곽간 교통망 개선을 위한 개발조사 사업	콜롬보 및 외곽	
	US$375,000	재난관리센터(DMC) ICT 시스템 구축 사업	-	
	US$398,000	자연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	-	
노르웨이	Rs. 450백만	쓰나미 피해지역 학교 건축, 보수, 위생시설 등 개선	마타라, 암파라, 함반토타, 바티깔로아, 트린코말리	- 사업수행 : 노르웨이난민위원회 (NRC; Norwegian Refugee Council)
몰 타	US$334,800	소규모 Malta Villge 조성 - 침실 2, 거실, 화장실, 부엌 등 시설을 갖춘주택 62채 건축	함반토타	- 사업수행 : 몰타적십자사 (Malta Red Cross Society)
헝가리	Rs.300백만	Hungarian Village 조성 - 600 sq.ft.의 주택 180채 건축 - 유치원 2개소, 마을 회관, 고아원, 메디칼 센터(기자재 포함), 운동장 및 놀이터 각 1개소 건축	골	- 사업수행 : 헝가리적십자사 (Hungarian Red Cross)
UNDP	US$125,000	부패방지 노력 지원 - watchdog 그룹 운영, 시민대상 의식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전국	- 사업수행기관 : CIABOC
IOM	US$1.2백만	쓰나미 피해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전국	- ECHO에서 재정 지원
	-	쓰나미 피해지역 임시주택 지원(3천채)	암파라, 마타라, 트린코말리, 콜롬보, 감파하, 칼루타라 등	- 일본, 그리스, 중국, ECHO의 재정 지원

7. US$50억 규모 원조사업 현재진행중

□건당 Rs.500백만 규모의 100개 이상의 개발사업, 약 Rs.4,000억 규모의 원조사업이 진행중임.

□도로, 에너지, 식수, 상/하수, 농업, 플랜테이션 경작, 어업 등 사회 각 부문에서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며, 국가 전역에 걸친 기간산업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음.

□동 프로젝트들은 원조자금으로 추진중이나, 실상 그 대부분은 장기 차관 사업인바, 동 개발사업들의 사업진행 상황이나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재정기획부(Ministry of Finance and Planning) 산하에 " Foreign Aid and Budget Monitoring Department "가 조직되어 관련 업무를 진행중에 있음.

- 현재 US$5백만 이상의 프로젝트들에 대하여는 웹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영중에 있으며, 각 사업별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일정과 월별 사업추진 현황이 기록되어 있음.

[자료 : 주스리랑카 KOICA사무소]

□2007 교육개혁 추진 : IT 부문 교육 활성화가 중점 과제

- 초등교육 부문
  - 수학 등 일부 과목에 대하여 영어진행 수업 도입
  - 싱할라 및 타밀 2개 언어 교육(싱할라인에게는 타밀어 별도 교육, 타밀인에게는 싱할라어 별도 교육)
  - 현재 국제학교 및 일부 사립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IT 교육 확산
- 중등교육 부문
  - 화학, 물리 및 생물 과목 도입(영어 또는 싱할라어로 교육)
  - CD 및 S/W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읽기 수업 등 도입
- 고등교육 부문
  - 컴퓨터 사용 장려를 위하여 모든 교과과정 및 교과활동과 관련한 CD 등 SOFT 카피 형태의 교육자료 제공
- 학교 기반 관리
  - 교장 1인의 정책결정에 의존하던 과거의 학교경영에서 나아가 동문, 학부모, 선임교사 및 지역사회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학교위원회를 조직하고, 동 조직을 통한 학교경영 추진
- 학교환경 미화
  - 학교 기간시설 개선은 물론, 현대화된 인테리어 및 신가구 등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 배정.

III. 기타

에티오피아 개발 파트너십

(Development Partnership in Ethiopia)

이 동 구 / 주에티오피아 KOICA사무소장

1. 머리말

유엔개발계획(UNDP)은 에티오피아에서의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경과에 대해 개발협력보고서(DCR)를 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 새천년개발목표 ’ (MDG)와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 에티오피아의 지속적인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 ’(빈곤 감소전략문서; PRSP)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 수요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에 제공되어 온 공적개발원조(ODA)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한다.

동 보고서는 공적개발원조(ODA) 경향, 지원 주체(국제원조기구, 원조국, 비정부기구<NGO>) 구성도, 증여(grant)와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주요 지역 및 분야별 수혜자와 에티오피아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찰한다. 동 보고서는 또한 에티오피아의 요구사항인 인도주의적 구호 원조에 대한 공식적인 경과와 동 경과들이 전체적인 국가 발전과 빈곤 감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고찰한다.

회고 기간 동안 에티오피아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에 영향을 준 주요 사건들은

① 1998년 에리트리아와의 분쟁 : 일시적인 외부원조의 감소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정부의 국방비 증가로 사회 경제 발전에 큰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휴전후 대외원조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감소 계획을 위해 복구, 복원, 재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사용토록 전환되었음.

② 끊임없는 가뭄 : 농산물 산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실질적인 외부 원조 경향을 굴절시켰음.

③ 긴급재난구호와 장기적인 관점의 발전요구 실종 : 결과적으로 빈곤 악화와 전략적 빈곤 대책 감소를 수반함(인구의 20%인 약 1000만명이 끊임없는 식량수급 불안정상태에 놓여 있음).

1990년대 전반기동안 국내총생산(GDP)율은 연평균 7.3% 하락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2년까지는 약 5.6% 하락했으나, 동 기간은 중요한 발전 가능성도 목격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몇몇 주목할 만

한 가치가 있는 것은

①주요 종합 정책개혁의 마련은 보건, 도로, 수도, 식량 안보, 농업, HIV/AIDS 등 광범위한 분야에 지역별, 분야별 개발 프로그램과 전략의 밑그림을 그렸고, 그 과정에서 원조 제휴자들의 많은 도움이 수반됨.

②에티오피아 정부는 첫 번째 빈곤감소전략문서(PRSP) 즉 지속가능한 발전 및 빈곤감소계획(SDPRP)을 마련하였고, 동 문서는 장기 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DG)에 통합됨.

③정부-원조자간 Partnership 논의와 효율적인 원조 및 빈곤감소 실행에 대한 논의가 에티오피아 정부와 개발원조단체 등 원조자 사이에 깊어짐.

회고 기간 동안, 공적개발원조(ODA) 지급액(disbursement)은 1997년의 6억 달러에서 2002년 14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1억 1,334만 달러가 되었으며, 2003년에는 1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적으로 전체 공적개발원조(ODA)의 66.03%인 6억 9,700만 달러는 증여(grant)였고, 비록 2003년 증여율은 63.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고 기간 동안 증여율은 전체 공적개발원조(ODA)의 81%에서 2001년 51%로 감소하였다. 공적개발원조(ODA)의 차관(loan)비율은 1997년 19%에서 2002년 46%로 높아졌고, 이는 브레튼우즈협회(BWI)와 아프리카 개발 은행그룹(AfDB) 지급액의 증가를 반영했다.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 계획(SDPRP)의 국가차원의 완성과 2년간의 에리트리아와의 국경분쟁 종결에 대한 긍정적 대응에 따른 것이다. 인도주의적 구호 원조의 비율은 비록 2003년에는 전체 증여의 45.3%로 감소하지만 1997년 36.86%에서 2001년 53.37%로 꾸준히 증가했다. 인도주의적 구호 원조는 올바른 발전에 대한 시각을 키워주는 장기적 관점의 개발 방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1997년~2003년의 공적개발원조(ODA)에서 양자간 원조는 연평균 4억 7,680만 달러를 차지했고, 다자간 원조는 5억 7,900만 달러, 즉 매년 평균 약 55%를 지급해 에티오피아 외부 원조의 주요 공여자가 되었다. 브레튼우즈협회(BWI)를 제외한 UN단체는 연간 다자간 흐름의 19%인 평균 1억 900만 달러를 제공,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비 UN단체의 다자간 원조는 심하게 변동했으며, 이는 주요 원조단체인 유럽연합(EU)(전체 20%를 담당)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전체 11%를 담당)의 원조유입 변화가 그 이유였다.

사회경제 분야에서의 할당량은 2002년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지급금이 같은 기간동안 증여율 63.12%에서 50.9%로 감소했음을 보여주었다. 운송과 경제, 경영 분야는 각각 10% 정도로 많은 양이 할당되었고, 농업 8%, 보건 7%, 교육 6%, 사회 개발에 6%가 할당되었으며, 나머지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에 할당되었다.

에티오피아의 공적개발원조(ODA) 추이는 단순히 사하라사막 남부 아프리카 국가를 선택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정책(SDPRP)과 새천년개발목표(MDG)가 추구하는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에티오피아의 1인당 공적 개발원조(ODA)가 여타의 아프리카 국가(예를 들어 말리 28.60달러, 모잠비크 51.30달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 16.07 달러라고 결론 내렸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감소정책(SDPRP)/새천년개발목표(MDG)의 일관성은 에티오피아 공적개발원조(ODA) 구조와 규모, 특별히 인도주의적 구호 원조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 비율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추가증여가 에티오피아 빈곤감소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2. 에티오피아의 공적개발흐름에 영향을 준 주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

1) 배경

에티오피아는 인구가 6,720만명(2002년 기준)으로 사하라사막 남부 아프리카국가(SSA: Sub-Saharan Africa)중 두 번째로 큰 국가이다. 그 중 약 3천만에 가까운 에티오피아인들이 절대빈곤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의 UNDP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에티오피아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175개국 중 169위였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00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 하나이기도 하다. 주기적인 가뭄, 낮은 농업생산성과 황무지의 증가 등으로 만성적인 식량불안을 겪고 있고 HIV/AIDS의 확산으로 인간적인 삶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게다가 1990년대 초반의 긍정적인 경제 동향도 1998년의 에티오피아-에리트리아 분쟁을 포함한 여러 사태들로 인해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에티오피아의 빈곤상태 해결에는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 비록 빈곤문제를 해결할 1차적인 책임이 에티오피아 정부에게 있지만 국제사회의 지원요청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하지만 국경분쟁 종결과 함께 인간적인 삶에 대한 위협이 많이 해결되었지만, 동 기간(1997~2003)동안의 공적원조흐름은 에티오피아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들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2002년 에티오피아 정부는 빈곤감소전략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SDPRP: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Programme) 완성과 함께 2002년 12월의 자문단체(CG: Consultative Group)회의 전후의 관련 대화들은 전략을 뒷받침할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시사하였다. 더 중요한 것은 원조의 조화를 위한 논의가 몇몇 주요 원조국들의 직접예산지원(DBS : Direct Budget)과 증여(Grant)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2) 1998년의 에티오피아-에리트리아 분쟁

1990년대 초반 에티오피아에서 진행중이던 개발은 1998년 5월에 발생한 에리트리아와의 국경분쟁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국방비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국가재정과 통화상황이 나빠졌으며 외화보유액도 고갈되었다. 2000년 6월 교전 중지 이후에야 에티오피아 정부는 다시 국방비를 줄이고 자금들을 다시 개발과 빈곤감소 활동에 사용할 수 있었다. 2000년 12월의 평화협정은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 군대가 전선에서 철수하고, 2001년 4월 25km에 달하는 UN 감시하의 임시안전구역(Temporary Security Zone) 설치와 6만 명의 병력을 해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원조자들의 도움으로 에티오피아 정부는 전쟁 이

전의 상태로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둔 복구, 재건, 군대 해산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브레튼우즈협회(BWI), 유럽연합(E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경제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았다. 국방비 지출은 2000년 GDP대비 13.2%에서 2001년에는 6.4%로, 2002년에는 5.9%까지 급격히 줄어들었다. 2000년에 GDP대비 8.4%까지 떨어졌던 교육, 건강, 농업, 도로 분야에 대한 지출은 2002년에 16.7%로 증가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평화시기에 경제를 복구시킨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으며, 평화와 빈곤감소에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던 약속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3) 만성적인 가뭄 및 식량불안

농업은 GDP의 43%를 차지하며, 수출의 90% 이상, 전체고용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에티오피아는 본질적으로 농업 국가이지만, 동 기간 중에는 예측치 못한 기상이변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나라이기도 하다.

1995/96년 식량생산 최고기록이 경신된 직후인, 1997/98년에 주요작물 재배지역이 가뭄과 엘니뇨의 영향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GDP 성장률은 1996/97년의 5.1%에서 1997/98년에는 1.4%로 떨어졌다. 최근 몇년간의 GDP 성장률은 2000/01년의 7.8%에서 2001/02년의 1.23%까지 크게 요동쳤고, 2002/03년의 GDP성장률을 6%로 예측했다. 중앙통계청(CSA: the Central Statistical Authority)에서는 최근 몇년중 가장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2002년에 생산량이 22.8%로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에티오피아의 농업이 비에 의존하고 있고(관개시설 토지 3% 미만) 개인의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997년 이후 점점 짧은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는 가뭄은 식량불안을 더욱 악화시켰다. 결과적으로 많은 가정의 재산이 음식을 사는데 소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이로 인해 매번 가뭄이 있을 때마다 식량생산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로 인해 인도주의적 구호 원조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때로는 장기적 관점의 개발 계획에 필요한 비용도 인도주의적 구호 원조에 사용되었다. 2002년말 정부/국제연합 공동 긴급호소(the Joint Government/United Nations Emergency Appeal)는 113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총 1억 4600만톤 가량의 긴급식량구호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3백만 명의 사람이 언제 식량구호가 필요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추정했다.

현재 상황에서 긍정적인 점 중 하나는 에티오피아 정부와 원조공동체들이 상기 문제에 대한 경보태세를 발령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이다. 조기 대처는 주로 음식, 물, 보건, 영양, 가축에 관련된 것들과 단기재배 작물의 재경작을 위한 씨앗의 공급 등에 집중되었다. 이를 통해 원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또 현장의 상황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를 통해 적시에 원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원하는 원조 및 감시기관들과 지역정부, 중앙정부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 현장에 상주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에티오피아 정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원조단체, UN은 그들의 조정 노력을 향상하고 재난방지 준비위원회(DPPC: Disaster Prevention and Preparedness Commission)의 지역정부와 인도주의 공동체 관계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다루거나 분석하는 능력을 강화했다.

에티오피아의 식량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SDPRP: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Programme)에는 식량불안 상태에 있는 지방주민의 수를 줄이고 이들이 식량구호를 받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당분간 에티오피아는 식량구호에 의존해야만 할 것이다. 장기적인 해결방안은 사회경제발전, 즉 가뭄지역이나 지방의 농업성장 등을 포함한 발전 계획으로 저비용 관개시설과 우물개발사업을 통한 물의 가용성, 토지보존 측량, 신용 대출의 보증범위와 유효성, 농장을 벗어난 마케팅, 저장기술과 농가공, 정부의 농업지원서비스 능력 증대, 농업 외의 고용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식량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을 개발하는 일에는 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환경에 관련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는 1995년에 환경보호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을 설치하여 1997년에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을 마련하였고,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사막화를 막기 위한 계획들이 준비되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의 환경관리를 위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계획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물자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정부와 원조자간의 능동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4) 사회분야의 발전

1990년대 중반에 사회 부문에서 국방비로 지출이 전환된 것과 인도주의적 구호작업에 대한 요구의 증가는 기간 시설, 특히 교육과 건강부분에서의 기본적인 사회복지에 악영향을 미쳤다. 2000년 이후의 국방비 지출 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SDPRP)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 제시 등에서 나타난 정부의 약속이행 노력은 서서히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모든 영역에 걸쳐 발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정책이 다루는 범위가 너무 확대되면서 그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시스템은 아직도 여성에게 불평등하며, 여학생들의 입학률은 남학생들의 입학률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으로 에티오피아 정부는 (i) 초등학교의 유급률을 1999/2000년의 9%에서 7%로 감소시키고 (ii)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의 입학률을 1999/2000년의 44%에서 2001/02년 61.6%로 증가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분야에서는 널리 퍼져있는 예방가능 기생충 및 감염성 질병들, 모자보건문제, 영양부족 등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있다. 에티오피아의 대략적인 사망률은 1000명당 15명 정도이며 5세 이하의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187.8명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국가 차원의 보건정책은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과 모든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르게 분포된 보건시설

을 건립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조자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1996년 수립되고 현재 추진중인 보건분야개발 프로그램(HSDP: the Health Sector Developmnet Programme)은 좀 더 효율적으로 자금을 사용해 보건복지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그 강조점은 구체적으로 건강관리, 전염성 있는 질병, 일반적인 영양 불균형, 위생적인 환경조성,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 성적인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전염병(특히, HIV/AIDS)의 통제 등이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으며 HIV/AIDS는 그 취약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인도 다음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에이즈 환자가 많은 나라이다. 감염자 중 약 90%정도가 경제활동인구인 20~49세 사이에 속해 있다. 만약 HIV/AIDS의 확산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에티오피아의 개발목표나 새천년개발목표(MDGs : Millenium Development Goals)는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국립 에이즈회의(National AIDS Council)를 출범시켰고 원조기금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 다각도 에이즈 프로젝트(Ethiopia Multi-sector AIDS project)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계획은 에이즈 문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접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 기반의 자생적인 활동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다. 이 계획이 반드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수준에서의 제한 조건과, 구체적인 행동방침이 밝혀져야 한다. 또한 부족한 산업기반들이 확충되어야 하고, 감염자와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에이즈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 대한 지원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지수에서 성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다(예를 들면 수입, 교육기간, 건강수준, 노동 강도, HIV 감염 민감도, 전문직 고용률 등). 에티오피아 헌법은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그를 위한 행동을 허용하지만, 여성을 위한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몇몇 부분에서의 노력과 더 큰 역량이 필요하다.

5) 지방분권 및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

1994년에 에티오피아 정부는 에티오피아를 9개의 지역과 2개의 특별시로 나누는 연방구조에 관한 헌법을 발표했고, 동 헌법은 주요 자원들과 책임을 각 지역에 이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분권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좀 더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양한 에티오피아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고 자원 할당과 재정 분리 등의 권리를 가지며 행정서비스와 관리의 중요한 책임을 맡게 할 수 있다.

이제 에티오피아 정부는 각 워레다(지역)에 권력을 양도함으로써 지방 분권화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권력양도의 목표는 지역공동체를 정책결정에 포함시키는 한편 자원(resource) 사용을 감시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 계획(SDPRP)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수준에서 광범위한 회의를 실행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완벽한 지방분권화는 야심찬 시작이 될 것이고 각 지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체계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 몸으로 배우는 '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정부와 많은 원조단체들이 바라는 지방 분권화가 쉽게 실현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에티오피아는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하는 일에 대해 상대적으로 짧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리적 크기뿐 아니라 인구수에서도 거대한 나라이며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적절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시도들을 거쳐야 한다. 또한 충분한 지원과 이해를 통한 에티오피아 정부와 원조자들 간의 협력관계 형성 역시 필요하다.

6)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

가. 개략

2002년 6월 에티오피아는 각 지역수준까지 내려가는 광범위한 논의 과정을 마친 후 첫 번째 빈곤감소전략문서(PRSP :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인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SDPRP :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Programme)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02/03년에서 2004/05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SDPRP) 목표는 빈곤을 감소시키고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MDG1)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빠르고 광범위하며 지속적인 GDP성장을 실현시킬 것이다. 주요 목표중 하나는 1999/2000년에 44%였던 빈민 비율을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SDPRP)이 끝날 때에는 10%까지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년의 GDP 실질성장률을 최소한 7%이상으로 유지시키고, 물가성장율을 가능하면 5% 이하나 최소한 한자리수 이하로 억제하며 세입을 GDP의 17.7%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제도적인 강화와 개혁을 위해 빈곤에 관련된 주요 의제들을 선정한 에티오피아 정부의 초기작업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SDPRP)은 에티오피아와 개발 동반자 관계에 있는 단체 또는 국가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2002년 겨울에 있었던 자문단체회의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SDPRP)의 실행을 위해 36억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SDPRP)을 진행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전체 인구중 80% 이상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이다. 또한 농업분야는 다른 영역으로 그 생산결과가 전파됨으로써 다른 경제부문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소규모 개간사업, 수자원개발사업, 우물개발사업, 농업에 대한 연구 등에 대한 관심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식량불안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SDPRP)의 또 다른 특징은 민간경제활동의 중요한 역할이다. 특별히 농업외의 고용, 성장, 수출의 증가 등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기 위해 공공 서비스의 향상, 민간경제 활동의 성장과 개발을 촉진시키는 환경조성 등이 준비되고 있다. 특히 민간경제활동의 성장과 개발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수행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의 파악, 지방분권화의 강화, 일반대중에게 의견결정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통한 통치체계의 향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SDPRP) 전략

의 핵심이 되는 네 개의 주요한 기둥은 다음과 같다.

①농업개발주도 산업화(ADLI : Agricultural Development Led Industrialization)와 식량안보

농업개발주도 산업화(ADLI)는 1992년에 채택되었으며 노동집약적 기술, 생산성의 향상, 토지이용의 증가, 상품화의 발전, 농업 마케팅과 공정,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산업기반의 공급 등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농업부문에서의 변화와 성장은 빈곤계층에게 수입을 제공하고 산업부문에 기초원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산업화와 수출부문의 원동력이 된다는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

②사법체계와 공공서비스 개혁

에티오피아 정부는 1996년에 포괄적인 공공서비스 개혁 프로그램(CSRP : Civil Service Reform Programme)을 시작했다. 그 목적은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이고 윤리적인 공공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2세대 개혁에서는 각 지역과 워레다(지역)수준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옴부즈맨 사무실과 인권센터의 설치,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법안이 2001년에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지배 체계의 투명성, 책임감의 질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③통치체계, 지방분권화와 권력위임

에티오피아 정부는 1990년대 중반에 지방분권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각 지방 및 지역 단위로 행정적, 재정적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민주주의 체계를 강화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에서 시작되었다. 지방분권화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입법, 기술적 역량, 세입과 지출에 대한 권한까지 위임하게 하는 것이다. 또이 과정은 각 지역공동체와 민간사회기관(CSO : Civil Society Organization)을 의견결정과 자금활용의 감시에 참여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세 번째 과제의 일부로서, 에티오피아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정책(SDPRP)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수준까지 내려가는 광범위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④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역량 강화

1998년 12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그 개요는 공공부문이 사설기업과 민간사회기관(CSO)에서의 인력자원의 개발을 위한 노력의 조정, 제도의 설립 및 강화, 좀 더 효과적인 업무 경험의 설립 등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개발부(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지방개발부(Minitstry of Rural Development), 산업기반부(Ministry of Infrastructure), 연방개발부(Ministry of Federal Development), 역량강화부(Ministry of Capacity Building) 등 5개의 상급 조정부가 설립되었다. 현재 이들 부서의 초점은 공공서비스, 사법 및 조세 개혁, 교육체계 강화, 지방 개발 및 IT등에 맞추어져 있다.

나. 새천년개발목표와의 연계

새천년개발목표에 맞추어진 개발성장 시나리오들에 더해서, 에티오피아는 2002년 6월 중동부 아프리카 하위지역자원설비(CEA-SURF : Central and Eastern Africa-Sub Regional Resource Facility)에 의해 개최된 새천년개발목표 행동 포럼에서 캠페인과 주의환기를 통해 대략적인 행동계획의 밑그림을 알림으로써 스스로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새천년개발목표(MDG) 보고서의 준비를 주도해왔다. 보고서의 준비는 각 정부 및 유엔 국가팀의 대표로 구성된 새천년개발목표(MDG) 태스크포스팀이 같이 이끌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정책(SDPRP)이 새천년개발목표(MDG)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계획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새천년 개발목표(MDG) 보고서, 감시, 원가계산 등은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정책(SDPRP)의 평가와 보조를 맞추어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 정책(SDPRP)에 드는 비용

새천년 개발목표(MDG)와 일치하는 많은 행동지표에 더해서,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정책(SDPRP)은 빈곤에 관련된 많은 영역에 대해서 높은 비용과 낮은 비용의 시나리오를 세웠다. 3년 동안의 비용은 47억 달러에서 62억 달러 사이로 계산되었다. 이 비용과 다른 여러 가지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은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한 국내 재정관리의 향상(세입), 과세표준의 확대와 세무시스템의 향상 등을 통해 충당될 계획이다. 그에 따라 세입은 2000/01년 GDP대비 14.3%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 정책(SDPRP)기간이 끝날 때에는 GDP 대비 17.7%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의 자체적인 노력에 더해서, 증가되었으며, 잘 조정되고, 조화를 이룬 외부자금의 유입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정책(SDPRP)과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정부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 더 추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에티오피아가 받고 있는 1인당 공적개발원조가 사하라사막 남부 아프리카국가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에티오피아 정부는 원조자금의 전달 방식이 정부의 예산체계에 잘 맞을 수 있도록 전달 방식에 유연성과 조화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직접예산지원에 대한 강한 선호를 표현했다.

그와 함께, 2002년 12월의 자문단체회의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정책(SDPRP)에 36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2003년에 11억 6천만 달러, 2004년에 12억 달러, 2005년에 13억 달러 정도의 비율로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36억 달러의 지원 약속은 이제까지의 성과의 결과물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정책(SDPRP)은 또한 고채무빈국(HIPC : 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에게 2억 6천만 달러의 채무변제 제안으로 연방 및 지역 정부의 사회분야 예산전환이 더 촉진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사회분야 예산전환에는 교육, 보건, 도로, 농업 및 천연자원으로 예산전환이 포함된다. 향후 몇 년 동안의 공공기관의 역량강화 노력에 더해 고채무빈국(HIPC)의 제안에 연관된 공공

분야에서의 지출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한 노력들이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고채무빈국(HIPC) 기금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정책(SDPRP)과 새천년개발목표(M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기금이 많이 부족하며 여전히 국내 및 외부에서 조성된 재원의 효율과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3. 에티오피아 정부개발원조, 1997~2003

1) 정부개발원조 추세, 1997~2003

공적개발원조(ODA)는 1997년 미화 6억 달러에서 2002년 약 14억 달러로 양적인 면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2003년에는 1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표1>, <그림1> 참조).

공적개발원조(ODA)의 대부분은 통상 개발원조의 형식으로 받았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구호원조는 1997~2002년 전체 공적개발원조(ODA)구성중 평균 31%로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며, 2000년 인도주의적 구호원조는 전체 원조의 거의 절반에 달했다. 이러한 경향은 에티오피아의 잦은 긴급재난 상황의 원인에 대한 절박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SDPRP)에서 벗어나는 실제적인 위협이나 잠재적인 가능성을 쉽게 지나치도록 만든다. 이 기간 동안 공적개발원조(ODA) 증여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세계은행을 필두로 다자간 원조자의 역할 증가가 크게 반영되었다. 그렇지만 공적개발원조(ODA)의 증여 비율은 2002년 여전히 전체의 50% 이상, 2003년에는 6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기준 공적개발원조(ODA)는 1997년 미화 10.41 달러에서 1999년 11.85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2000년에는 14.57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와 비슷하게 2002년에는 1인당 인도주의적 구호원조와 1인당 차관이 늘어난 결과, 20.54 달러로 비약적인 증가를 했다. 이러한 추이에 따라 2003년에는 27.67 달러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표2> 참조).

공적개발원조(ODA)에서 1인당 차관의 추이는 1997년 1.96달러에서 2001년 7.95달러로의 증가를 보여주었고 2002년 9.31달러로 오를 것으로 추정되며, 2003년 1인당 9.6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공적개발원조(ODA) 증여는 10.73 달러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2003년 17.49달러로 급격히 증가했다. 1인당 인도주의적 구호 원조와 관련하여 이는 2003년까지 6년 동안 심하게 변동하여 최고점은 7.92 달러이지만 평균 4.89달러의 수렴한다(<표2> 참조). 최고점은 2002년 12월 에티오피아 정부의 긴급 원조에 대한 호소에 응답한 것이다.

2) 공적개발원조 출처와 약정에 대한 분석

가. 정부개발원조 출처 추이, 1997~2003

1997년부터 2003년 동안 실제 공적개발원조(ODA) 수치는 연평균 10억 5,600만 달러였다. 전체의 약 45%는 양자간 원조자에 의해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다자간 원조자가 지급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회고 기간 동안 다자간 원조자로부터의 지급금은 양자간 출처보다 적어도 10%정도 앞섰다(<표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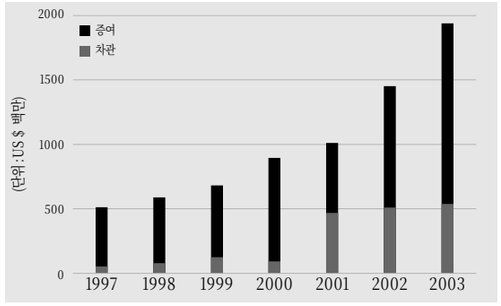
에티오피아 정부의 식량원조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미국을 필두로 하여 인도주의적 구호 원조의 커다란 유입 때문에 1997년과 2000년, 2년만 양자간 원조가 다자간 흐름을 앞섰다. 2001년에 세계은행

<표1. 공적개발원조추이, 1997~2003>

(단위:US $ 백만)

연도	전체 ODA	차관형태의 ODA	전체 증여	인도주의적/ 구호 원조 증여	통상 사회 경제 부문 증여
1997	605	114	491	181	310
1998	675	149	526	152	374
1999	730	202	528	232	296
2000	925	142	783	448	335
2001	1081	532	549	293	256
2002	1436	656	780	383	397
2003	1937	713	1224	554	670
평균	1056	358	697	321	377

<그림1. 공적개발원조추이, 1997~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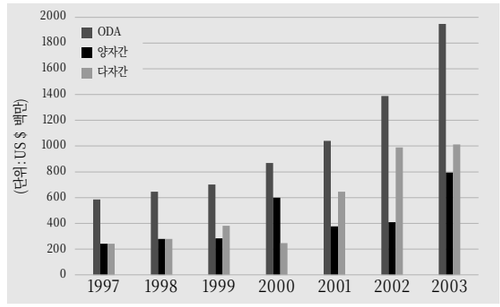


<표2. 1997~2003, 1인당 공적개발원조 분류>

(단위:US $)

기간	1인당 ODA	1인당 차관	1인당 증여	1인당 인도주의적/ 구제 원조
1997	10.41	1.96	8.45	3.12
1998	11.27	2.49	8.78	2.54
1999	11.85	3.28	8.57	3.77
2000	14.57	2.24	12.33	7.06
2001	16.19	7.95	8.24	4.38
2002	20.54	9.31	11.24	5.43
2003	27.67	9.60	17.49	7.92
평균	16.07	5.26	10.73	4.89

<그림2. 공적개발원조 출처 추세, 1997~2003>



<표3. 공적개발원조 출처 추세, 1997~2003>

(단위:US $ 백만)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ODA중 비율
공적개발원조	605	675	730	925	1081	1436	1937	1056	100%
양자간	308	332	336	626	419	456	861	477	45%
다자간	297	343	395	299	662	980	1076	579	55%
UN 시스템	94	84	108	129	125	123	97	109	10%
WB와 IMF	58	93	149	105	322	583	662	282	27%
비 UN 시스템	144	166	138	65	215	275	316	188	18%

(WB)과 국제통화기금(IMF)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원조자가 양자간 원조자의 두 배에 가깝게 기부한 뒤에야 본래 추이로 돌아왔다. 2002년에 다자간 원조자가 양자간 원조자가 제공한 원조액의 두 배 이상인 9억 8,000만 달러를 기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세는 2003년 양자간 원조가 8억 6,100만 달러, 다자간 원조가 10억 7,600만 달러가 되면서 약간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 양자간 원조자로부터의 개발원조

1997~2003동안 양자간 원조자의 공적개발원조(ODA) 기부는 연평균 4억 7,700만 달러였다. 양자간 원조는 1998년과 1999년의 에티오피아 - 에리트리아 분쟁이 끝난, 평화의 시기였던 2000년에 최고점에 달해 6억 2,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01년 양자간 흐름의 총합이 감소하지만, 2002년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2003년에는 전년 대비 89%로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8억 6,100만 달러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3> 참조).

<그림4>는 10개의 주요 에티오피아 양자간 원조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997년부터 2003년 동안 미국은 가장 큰 양자간 원조자였고 평균적으로 연간 2억 3,063만 달러로 전체의 49%를 지출했으며, 일본은 격차를 두고 2위가 되었고 평균 4,377만 달러, 양자간 공적 개발원조(ODA)의 9%를 지급했다. 이탈리아는 2003년에 실질 비율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평균 2,653만 달러, 양자 원조의 6%를 기부해 3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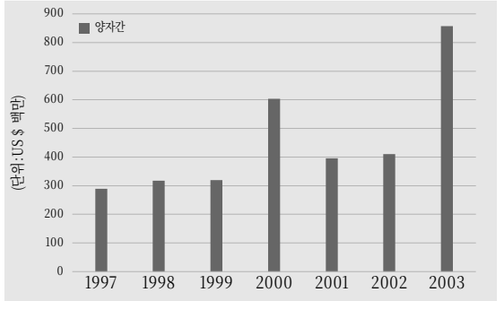
독일은 양자간 원조의 5%를 제공해 4위에 올랐으며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은 각각 양자간 공적개발원조(ODA)의 약 4%를 기부했다. 다음은 스웨덴으로 양자간 원조의 3%를 담당했다.

에티오피아 양자간 원조에 관하여 중요한 점은 영국의 공적개발원조(ODA)흐름이 가장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는 것이다. 영국의 원조는 1997년에서 2003년 사이 2,133만 달러에서 2002년에는 약 3,033만 달러로 증가했고 2003년에는 5,733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괄목할 만한 부분은 이탈리아의 지원으로, 1997년의 2,033만 달러에서 2002년에는 2,745만 달러로 증가했고, 2003년에는 6,141만 달러로 증가해서 주요 양자간 원조자들 중에서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주목할 만한 나라는 아일랜드로, 1997년에서 2003년 사이에 원조를 약 두배로 늘렸다. 2002년의 추정치나 2003년의 전망치를 통해 볼 때, 미국이 계속해서 에티오피아의 주요 양자간 원조자의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표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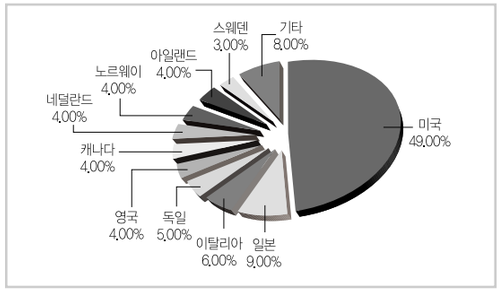
다. 다자간 원조자로부터의 개발원조

다자간 원조자는 1997년부터 2003년 동안 에티오피아에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중에서 평균 55%를 기부한 가장 큰 기증 단체이다. 브레튼우즈협

<그림3. 양자간 개발원조, 1997~2003>



<그림4. 상위 10개 양자간 원조자의 공적개발원조 평균 분담, 1997~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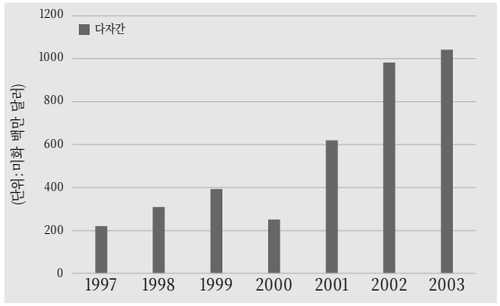
<표4. 원조자의 양자간 개발원조, 1997~2003[1]>

(단위: US $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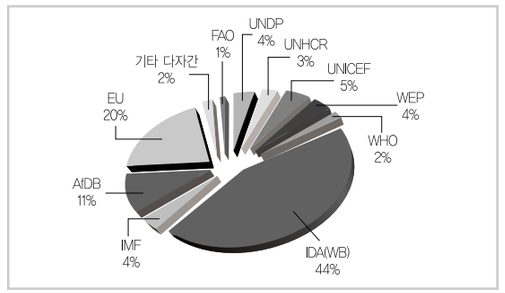
Donor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평균비율
오스트리아	2.43	2.90	3.53	2.17	3.82	3.22	3.54	3.09	0.72%
벨기에	3.55	6.52	2.32	8.17	13.21	7.41	9.00	7.17	1.67%
캐나다	17.34	23.26	30.29	17.74	16.88	20.64	19.84	20.86	4.37%
중국	0.10	14.13	1.92	0.56	13.62	2.42	0.43	4.74	0.99%
핀란드	6.75	6.99	5.91	5.66	5.05	4.10	4.95	5.63	1.18%
프랑스	7.35	11.27	9.90	1.44	1.74	4.75	5.93	6.05	1.27%
독일	37.28	17.88	21.11	26.14	17.47	17.25	17.92	22.15	4.65%
그리스	1.36	1.36	0.06	0.10	0.11	0.04	0.01	0.43	0.09%
인도	0.00	0.00	0.00	0.31	0.09	0.03	3.07	0.50	0.10%
아일랜드	13.25	15.30	14.47	16.23	18.61	22.03	32.19	18.87	3.96%
이스라엘	0.38	0.27	0.44	0.68	0.27	0.11	0.04	0.31	0.07%
이탈리아	20.33	7.77	25.85	36.53	6.36	27.45	61.41	26.53	5.56%
일본	41.20	38.51	37.50	43.00	45.57	45.75	54.84	43.77	9.18%
한국	0.52	0.55	0.63	0.48	0.51	0.79	0.90	0.62	0.13%
쿠웨이트	0.00	0.00	0.00	25.33	10.35	0.00		5.10	1.07%
리비아	0.00	0.00	0.00	1.01	1.32	1.70	2.20	0.89	0.19%
네덜란드	18.97	24.48	26.74	5.56	16.76	21.09	23.36	19.57	4.10%
노르웨이	25.56	26.72	12.16	13.42	15.65	21.66	20.99	19.45	4.08%
스페인	0.30	0.36	0.72	0.15	0.37	0.05	1.70	0.52	0.11%
스웨덴	15.84	24.56	11.02	2.60	16.04	18.14	24.14	16.05	3.37%
스위스	4.74	4.39	1.86	2.81	1.33	0.63	3.59	2.76	0.58%
영국	5.24	7.27	13.24	13.72	22.18	30.33	57.33	21.33	4.47%
미국	86.22	97.94	116.66	401.40	191.12	207.69	513.39	230.63	48.37%
계	308.19	331.88	335.70	625.60	418.88	456.49	860.96	477.02	100.00%

1) 2000년에서 2003년까지 기간의 수치를 제공하지 않은 원조자들에 대해서는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그림5. 다자간 개발원조, 1997~2003>



<그림6. 상위 10개 다자간 원조자 공적개발원조 평균 분담, 1997~2003(%)>



회(BWI)를 제외한 UN단체는 연평균 1억 880만 달러를 제공했다. 이것은 다자간 흐름의 19%를 차지한다(<표5>, <그림6> 참조).

UN단체 중, UNICEF(4.51%), WFP(3.86%), UNDP(3.60%), UNHCR(3.03%)는 UN의 다자간 원조 주요 제공자였다. 이 원조는 WFP와 UNHCR로부터 인도주의적 구호 원조형식, UNICEF와 WHO에 의한 보건분야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 그리고 UNDP에 의한 개발정책과 역량강화가 주를 이루었다.

비 UN단체의 지급금은 1997년과 2003년 사이 크게 변동하였다. 주요 원조자는 유럽연합(EU ; 전체의 20.49%를 담당)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11.18%)이었다(<표5>참조).

<그림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은행(World Bank)은 5년 동안 에티오피아의 가장 큰 국제 원조기구였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다자간 공적개발원조(ODA)의 48.7%를 기부했다. 1997년, 1999년, 2000년의 3년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급금이 없었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주로 경제, 경영, 농업(임업, 수산업 포함), 운송, 에너지,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공헌하였다. 2002년과 2003년에는 브레튼우즈협회(BWI)의 큰 공적 개발원조(ODA) 증가가 예상된다.

1997년 5,803만 달러에서 2001년 1억 7,827만 달러로 증가했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단체의 지급금은 2003년에 7,635만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리트리아와 국경분쟁동안 유럽연합(EU)으로부터 원조는 1997년 8,597만 달러의 높은 수치에서 2001년 3,204만 달러의 낮은 수치를 기록해 대폭적인 감소를 보여준다. 그러나 일반적인 추이는 2002년 1억 9,694만 달러의 지급 추정치와 함께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유럽연합(EU)이 주축이 되는 비 UN단체 원조는 농업(임업, 수산업 포함), 운송, 지역개발, 경제 경영, 인도주의적 구호 원조 분야가 주요 경로가 되었다.

라. 비정부기구(NGO)의 개발원조

NGO의 공적개발원조(ODA)는 2002년의 추정치와 2003년의 전망치 없이, 1997년에서 2001년의 기간이 다루어진다. 국제, 국내 비정부기구(NGO)의 평균 지급금은 1997년부터 2001년 동안 전체 공적개발원조(ODA)의 약 9.47%인 연간 7,607만 달러에 달했고 총액은 2000년 9,291만 달러로 최고점에 달했다(<표6> 참조). 평균적으로 국제 비정부기구가 국내 비정부기구보다 8배 많은 자금의 경로였다.

비정부기구는 공적개발원조 흐름증대와 공적개발원조(ODA) 지급금의 추가 경로를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구호원조의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표5. 다자간 원조자 개발원조, 1997~2003[2)]>

(단위: US $ 백만)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평균비율
FAO	2.17	3.03	5.03	3.20	5.00	4.81	5.00	4.03	0.70%
IAEA	0.51	0.92	0.66	0.66	0.66	0.66	0.66	0.68	0.12%
IFAD	1.48	0.52	0.00	2.42	1.15	0.55	2.42	1.22	0.21%
ILO	0.24	3.16	1.67	1.15	1.11	0.87	1.82	1.43	0.25%
ILRI	..	..	..	..	..	..	..	0.00	0.00%
IOM	0.15	0.15	0.15	0.02	0.12	0.25	0.18	0.15	0.03%
ITU	..	..	..	..	..	..	..	0.00	0.00%
UNAIDS0.34	0.32	0.36	..	1.05	0.62	..	0.38	0.07%	
UNEP	..	..	..	..	..	..	..	0.00	0.00%
UNDP	25.43	19.37	13.35	25.64	23.44	19.17	19.57	20.85	3.60%
UNECA	1.16	0.60	0.69	0.12	0.58	0.06	..	0.46	0.08%
UNESCO	0.05	0.13	0.48	0.14	0.09	0.18	0.42	0.21	0.04%
UNFPA	7.36	1.87	4.04	2.82	5.21	4.88	..	3.74	0.65%
UNHCR	19.95	20.08	18.66	16.44	15.80	16.08	15.96	17.57	3.03%
UNICEF	10.49	12.60	29.12	34.42	37.77	32.31	26.00	26.10	4.51%
UNIDO	0.06	0.13	0.33	0.84	2.13	1.63	1.25	0.91	0.16%
WFP	19.07	13.37	24.00	27.94	25.45	24.36	22.30	22.36	3.86%
WHO	5.91	7.82	9.29	13.61	5.85	16.58	1.88	8.71	1.50%
계	94.37	84.07	107.83	129.42	125.41	123.01	97.46	108.80	18.79%
World Bank와 IMF									
IDA(WB)	58.38	72.29	148.77	105.2	270.5	531.93	610.05	256.73	44.34%
IMF	..	20.8	..	..	51.31	50.63	52.3	25.01	4.32%
계	58.38	93.09	148.77	105.20	321.81	582.56	662.35	281.74	48.66%
AfDB	58.03	36.01	30.00	0.92	178.27	73.68	76.35	64.75	11.18%
BADEA			2.42	2.42	2.42	2.42	2.42	1.73	0.30%
EU	85.97	128.30	103.21	57.90	32.04	196.94	226.15	118.64	20.49%
OPEC	0.17	1.75	2.42	3.35	2.42	1.75	11.51	3.34	0.58%
계	144.17	166.06	138.05	64.59	215.15	274.79	316.43	188.46	32.55%
총계	296.92	343.22	394.65	299.21	662.37	980.36	1076.24	578.99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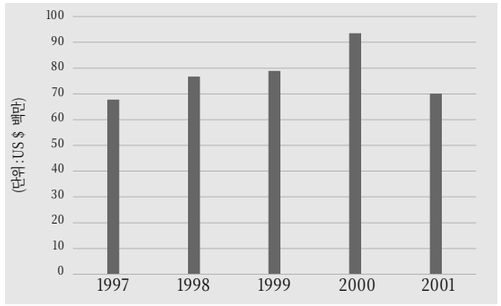
2) 2000년에서 2003년까지 기간의 수치를 제공하지 않은 원조자들에 대해서는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표6. 비정부기구의 개발원조, 1997~2001>[3]

(단위:US$ 백만)

연도	현지 NGO	국제 NGO	계	총ODA중 비율
1997	7.03	59.26	66.29	10.95
1998	10.92	64.02	74.94	11.10
1999	12.11	65.15	77.26	10.57
2000	10.80	82.11	92.91	10.04
2001	8.33	60.66	68.99	6.35
평균	9.84	66.24	76.07	9.47

<그림7. 비정부기구의 공적개발원조 지급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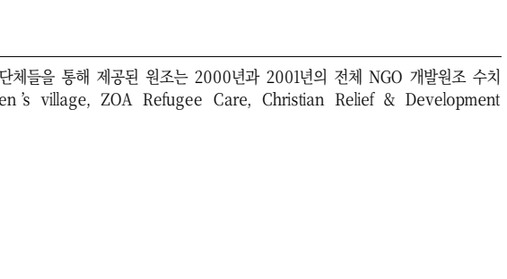


<표7. 협정에 의한 공적개발원조 추이, 1997~2003>

(단위:US$ 백만)

	총 증여	ODA중 증여 비율	총 차관	ODA중 차관비율	총 ODA
1997	490.58	81.07%	114.53	18.93%	605.11
1998	525.72	77.87%	149.38	22.13%	675.1
1999	527.98	77.29%	202.37	27.71%	730.35
2000	782.67	84.63%	142.14	15.37%	924.81
2001	548.85	50.76%	532.4	49.24%	1081.25
2002	780.29	54.31%	656.56	45.69%	1436.85
2003	1224.2	63.19%	713	36.81%	1937.2
평균	697.18	66.03%	358.63	33.97%	1055.81

<그림8. 협정에 의한 공적개발원조개발원조, 1997~2003>



마. 협정에 의한 공적개발원조: 증여와 차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연간 6억 9,718만 달러 전체 공적개발원조(ODA)의 69.01%가 증여로 이루어졌다. 공적개발원조(ODA)의 증여율은 1997년 81.07%에서 2001년 50.76 %로 하락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증여율 최고치는 2000년에 84.63%이다 (<표7>, <그림8> 참조).

2001년 49.24%로 공적개발원조(ODA)의 차관부분의 증가는 2년간의 에리트리아와의 국경분쟁의 종결과 빈곤감소 전략문서(PRSP)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브레튼우즈협회(BWI)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커다란 지급금 증가를 반영한다. 2002년에는 조금 감소해 공적개발원조의 차관부분이 45.69%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추이는 2003년에 36.81%로 더욱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간 원조자중 벨기에, 중국, 쿠웨이트는 차관형식 공적개발원조(ODA)의 주요 출처이다. 비 UN 단체, 석유수출국기구(OPEC), 아프리카개발은행(AfDB)[4], 유럽연합(EU)은 차관기금의 제공자였다. 이들 원조 단체들은 1997년에서 2001년 동안 전체 차관의 약 35%를 지급했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전체의 65%를 지급하여 차관 기금의 주요 출처가 되었지만 상당수가 양허적 성격이었다.

3) 사회경제 개발원조

가. 주 사회경제개발 분야 분배, 1997~2002

일반사회경제 원조(<표8>, <그림9> 참조)에 대하여 경제 경영[5]과 운송 부문은 1997년부터 2002년 동안 각각 약 10%로 가장 큰 몫이 할당되었다. 농업, 임업, 수산업(8%), 보건(7%) 교육(6%), 사회개발(6%)[6], 에너지(5%), 천연 자원(2%)이 그 뒤를 이었다.

<표8. 주요 지역별 / 분야별 공적개발원조, 1997~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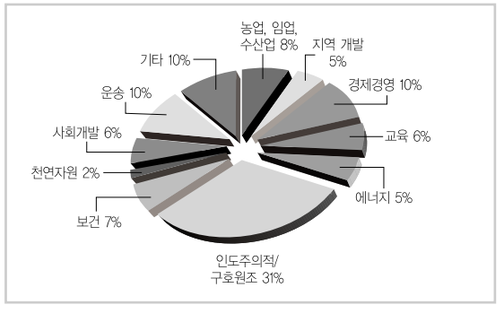
(단위:US$ 백만)

부문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평균	비율(%)
농업, 임업, 수산업	79.32	59.85	68.93	70.86	54.16	77.40	68.35	7.52
지역 개발	50.02	53.21	47.78	36.38	34.12	35.26	42.79	4.71
통신	16.46	11.55	10.59	0.01	0.53	0.97	6.66	0.73
개발 관리	11.53	16.04	13.56	21.08	15.87	28.83	17.82	1.96
재난 준비	14.30	12.66	2.62	3.82	8.53	12.37	9.05	0.99
재화 용역국내거래	2.35	9.38	8.78	1.20	2.26	0.07	4.00	0.004
경제 경영	6.11	70.06	5.67	46.03	147.67	291.67	94.54	10.40
교육	49.33	58.12	43.31	50.18	55.81	75.33	55.35	6.09
에너지	34.04	23.77	39.52	17.42	95.43	56.77	44.49	4.89
인도주의적/구제 원조	181.25	152.00	232.32	448.82	293.48	383.33	281.87	31.01
보건	45.32	53.97	52.05	56.50	76.15	110.16	65.69	7.22
공업	4.35	2.44	3.17	0.37	0.24	3.20	2.30	0.25
다부문	18.44	12.78	12.86	18.96	35.73	82.54	30.22	3.33
천연자원	25.44	22.05	26.36	13.48	5.44	7.27	16.67	1.84
사회개발	37.70	50.27	61.99	42.00	55.57	72.66	53.36	5.87
운송	27.24	66.17	99.39	65.68	140.52	151.74	91.79	10.10
기타	1.91	1.18	1.45	32.02	59.74	47.28	23.93	2.63
총계	605.11	675.10	730.35	924.81	1081.25	1436.85	908.91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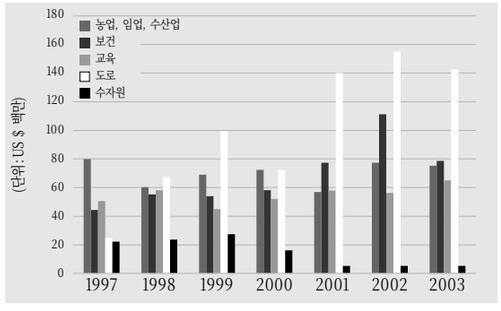
3) 44개의 국제 NGO와 36개의 국내 NGO중 75%가 자료를 제공했다. 다음의 단체들을 통해 제공된 원조는 2000년과 2001년의 전체 NGO 개발원조 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 Concern Ethiopia, DKT Ethiopia, SOS Children's village, ZOA Refugee Care, Christian Relief & Development Association, Action Aid-Ethiopia, OXFAM GB

4) AfDB의 2000년과 2001년 수치의 출처는 AfDB의 웹사이트이다.
5) 경제 경영에는 거시경제정책 및 계획, 재정정책, 통화정책 및 고용정책이 포함된다.
6) 사회개발에는 사회 입법 및 행정, 지방개발, 식수 및 하수도, 주거, 문화, 약물오용 및 범죄 방지가 포함된다.

<그림9. 공적개발원조 우선분야의 분배>



<그림10. 빈곤지향분야 원조지급금>



나. 우선 빈곤지향분야 분배

에티오피아 정부는 농업(식량안보 포함), 보건, 교육, 도로, 수자원을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SDPRP)의 5개 우선 빈곤지향분야로 지정했다.

요약하면, 현재 실행중인 농업개발주도 산업화(ADLI) 전략은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SDPRP)의 모든 분야에서의 성장과 빈곤감소의 주요 기반으로 농업을 선정했다. 원조자는 이 분야에 1997년부터 2002년 동안 평균 6,700만 달러의 상당한 자금 공급을 하고 있다(<표9>, <그림10> 참조). 이 분야의 원조 유입은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날씨의 변덕으로 생산이 계속 영향을 받았고 식량 부족이 흔하게 발생하였다.

보건분야 개발프로그램(HSDP)은 1997/98년에 착수하였고 첫 단계는 질병예방에 중요성을 두고 1997/98년부터 2001/02년 동안 실행되었다. 보건분야 개발프로그램-2(HSDP-II)는 2004/05에 전염병에 다시 초점을 맞출 것이다. 1997년부터 2002년 동안 원조자들은 평균 5,680만 달러를 보건분야에 기부해 이 분야를 일반개발 분야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원조수혜분야로 만들었다.

보건분야와 유사하게 1997/98에 시작된 교육분야 개발프로그램(ESDP)의 첫 단계는 2015년까지 보편적인 초등교육 달성의 장기 목표를 가지고 원조 공동체로부터 실질적인 원조를 받았다. 2002/03 이전까지 교육분야는 공적개발원조(ODA)에서 연평균 5,140만 달러를 얻었다. 교육 분야는 6.3%의 지원하에 일반개발분야 중에서 다섯번째로 큰 원조 수혜분야가 되었다.

도로분야 개발프로그램(RSDP)은 1997년 착수하여 두 단계로 실행되었다. 이 프로그램(1997~2002)의 첫 번째 단계는 원조 공동체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으며, 관심이 주로 몇몇 미리 연결되어 있는 도로의 복구와 개선에 집중되었다(<표8>, <그림10> 참조).

도로분야 개발프로그램-2(RSDP-II; 2002-2007)는 기초도로 산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여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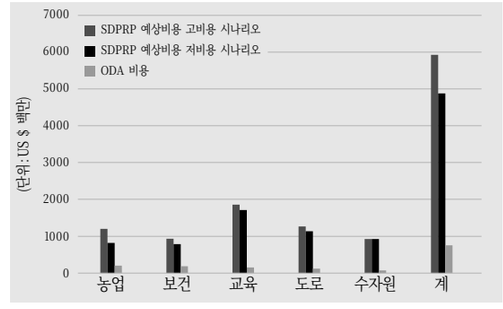
2002년 에티오피아에서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디스아바바에 72%, 지방에 24%였다. 수자원 분야 프로그램을 통한 정부의 노력으로 2004/2005년까지 이 비율이 각각 82%와 39%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9. 비교분석, 지속가능한발전 및 빈곤감소계획 요구와 공적개발원조 전망>

(단위: US $ 백만)

부문	SDPRP 예상비용		ODA 비용
	고비용 시나리오	저비용 시나리오	
농업	1160.00	769.00	199.00
보건	796.00	583.00	154.00
교육	1765.00	1375.00	170.00
도로	1310.00	1184.00	239.00
물	796.00	796.00	56.00
계	5827.00	4707.00	818.00

<그림11. 비교분석,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 계획 요구와 공적개발원조 전망, 2002/03~2004/05>



4) 에티오피아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 재정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SDPRP)은 에티오피아의 예산자금을 농업, 수자원, 도로, 교육, 보건, 빈곤감소우선 부문으로 투입되도록 재조정하였다.

각 부문의 책임부서에서 작성하고 전체 프로그램에 맞게 재조정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활동계획에 기초한 개발비용추정치가 <표9>에 나와 있고, 두 가지 지출 시나리오가 고려되었는데 고비용과 저비용의 경우이다. 자금흐름 전망[7]과 비교한 요구 분석에서는 저비용 시나리오가 고려되었다.

<표9>과 <그림11>로부터 아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에티오피아에 대한 개발원조의 증가, 특히 증여 부문의 증가가 매우 필요하다.
- 우선 빈곤지향분야에 맞추어서 공적개발원조(ODA)를 재배열하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실질적인 재할당이 필요하다.
-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정부내에서의 일치와, 원조절차의 일치를 통해 기금의 흐름이 보완되어야만 한다.
- 원조자의 신뢰 유지를 위해, 에리트리아와의 평화와 안보 지속이 요구된다.
- 에티오피아는 민간분야개발을 계속 육성할 필요가 있고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 에티오피아가 여전히 가뭄에 상당히 취약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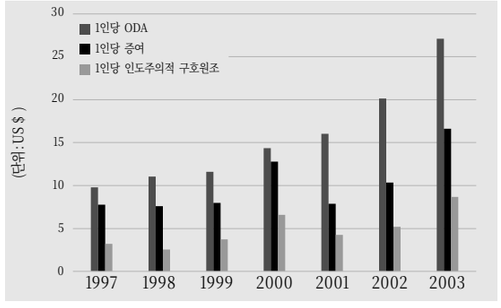
7) 1997년에서 2002년까지의 ODA평균치에 SDPRP기간인 3년을 곱한 값.

<표10. 1인당 증여 분류, 1997~2003>

(단위: US $)

기간	1인당 증여	1인당 인도주의적 구호원조	1인당 일반 사회경제부문	1인당 ODA
1997	8.45	3.12	5.33	10.41
1998	8.78	2.54	6.24	11.27
1999	8.57	3.77	4.80	11.85
2000	12.33	7.06	5.27	14.57
2001	8.24	4.38	3.86	16.19
2002	11.24	5.43	5.81	20.54
2003	17.49	7.92	9.57	27.67
평균	10.73	4.89	5.86	16.07

<그림12. 1인당 공적개발원조, 1997~2003>



때문에, 개발과 빈곤감소 착수에 주어진 지원에 더 역효과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인도주의적 구호 원조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

게다가 개발과정에 구호를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전략을 통해 만성적인 식량불안에 처한 사람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긴급계획조정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인도주의적 구호원조

이 보고서에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도주의적 구호원조는 에티오피아 공적개발원조 흐름의 가장 큰 부분이었다. 1997년부터 2002년 동안 평균 2억 8,200만 달러 전체 공적개발원조의 31%를 차지했다 (<표8> 참조). 2000년에는 사실상 에티오피아 전체 원조자 원조의 거의 절반(49.54%)을 차지했다. 인도주의적 구호와 일반사회 경제개발분야를 비교하는 것은 최근 공적개발원조 추이를 한눈에 보는데 편리하다. 각 보고년도 마다 인도주의적 원조 흐름은 농업, 임업, 수산업에 투자된 비용의 몇배였다. 비슷한 상황을 보건분야나 교육분야에 비교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0>과 <그림12>이 잘 설명한 바와 같이 인도주의적 구호는 증여 형식으로 에티오피아에 전해져 공적개발원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1997년에서 2003년 동안 에티오피아가 받은 1인당 공적개발원조의 평균(16.07달러)중에 10.73달러가 증여의 형식이었다. 고채무빈국(HIPC)이 됨에 따라, 에티오피아의 부채가 지속되어, 증여 형식의 공적개발원조가 더 증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증여 1달러당 46센트가 인도주의적 구호원조에 사용되고 있고, 이는 일반개발 활동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7~1999년 3년간의 순조로운 강우 이후, 2000년에 식량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었다. 이 때 1인당 증여와 1인당 인도주의적 구호가 각각 12.33달러와 7.06달러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02년에 시작된 현재의 가뭄에 관련한 급박한 상황은 가까운 미래에 증여 흐름의 확대에 의해 공적개발원조중 더 많은 부분이 일반개발 분야에서 구호의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2003년 국제식량계획(WFP)은 에티오피아의 주요 실제 식량원조가 601달러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게다가 긴급상황에 대한 관심이 지속됨에 따라서 원조가 직접적인 형식으로 바뀌어 재난 준비 활동(조기경보시스템, 구제계획 등)을 꾸준히 감소시켰다. 1997년에서 2002년 사이에 재난 준비를 위해 지원된 원조자 흐름은 높게는 1997년 1,430만 달러에서 낮게는 1999년 262만 달러로 변동하였다. 2002년에는 1,240만 달러를 받았다.

6) 에티오피아 정부개발원조 비교 분석

사하라사막 남부 아프리카국가(SSA) 전체 및 다른 저개발국(LDC)과 에티오피아의 공적개발원조 비교는 <표11>에 나와 있다. 표는 다음을 보여준다.

- 거시적 수준에서 에티오피아 외부원조는 1997년에서 2001년의 기간동안 연평균 13.16%를 나타냈다. 이것은 같은 기간 동안 사하라사막 남부 아프리카국가(SSA)가 GDP대비 5.96% 저개발국가(LDC)가 GDP대비 8.40%인 것에 비교해 보면 높은 수치이다.
- 1997년에서 2002년의 기간 동안 에티오피아 1인당 원조가 평균 12.8 달러인 동시에 SSA와 다른 저개발국들의 평균 22.60달러와 21.30달러에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수치이다.

<표11. 사하라사막 남부 아프리카국가와 저개발국의 공적 개발원조 수준, 1997~2003>

기간	GDP중 공적개발원조 비율			일인당 공적개발원조(미화 달러)		
	에티오피아	사하라사막 남부아프리카	저개발국가	에티오피아	사하라사막 남부아프리카	저개발국가
1997	1.10	6.70	11.10	10.40	33.50	29.10
1998	10.00	4.40	8.40	11.30	21.40	20.20
1999	11.30	5.30	7.00	11.80	18.30	17.80
2000	15.50	6.20	7.60	14.50	19.40	19.10
2001	18.90	7.20	8.20	16.10	20.60	20.50
1997~2001 평균	13.16	5.96	8.40	12.80	22.60	21.30
2002	21.40		20.54			
2003	25.15		27.67			

- GDP대비 ODA의 높은 비율과 2002년과 2003년의 성장추세는 에티오피아 공적개발원조 증여가 GDP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GDP성장, SDPRP, MDG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인도주의적 구호 원조의 양이 많기 때문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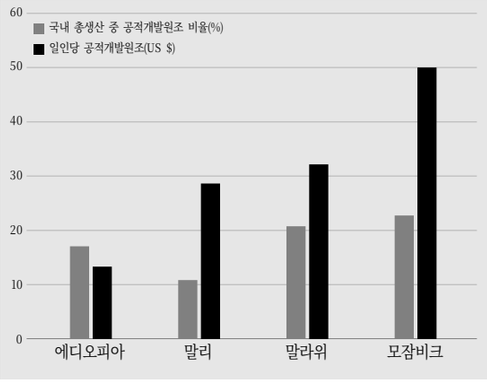
2003년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8] 순위가 비슷한 사하라사막 남부 아프리카국가(SSA)를 선택해

<표12. 국내총생산 대비 공적개발원조와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의 1인당 공적개발원조 비교, 2001>

나라	국내총생산 중 공적개발원조 비율	일인당 공적개발원조 (US $)
에티오피아	18.90	16.07
말리	13.20	28.60
말라위	23.00	34.50
모잠비크	25.90	51.30

8) 인적개발보고서, 2003. 에티오피아는 175개국 중 169위를 차지했다. 말리는 172위, 말라위는 162위, 모잠비크는 170위이다.

<그림13. 국내총생산 대비 공적개발원조와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의 1인당 공적개발원조 비교, 2001>



서 비교해보면 에티오피아는 1인당 공적개발원조와 GDP대비 관계가 주변국들에 비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표12>, <그림13> 참조).

이것은 외국의 원조를 유치할 능력과 공적개발원조 수용 능력을 키우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체제의 강화와 포괄적인 전략 형성으로 인해 외부 자원 동원에 대한 관심의 증가가 촉진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앞서 논의된 개발은 에티오피아가 새천년개발목표(MDG)와 중기 빈곤감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전된 원조 계획을 제공하는 데에 긍정적인 토대가 된다.

분쟁의 종결로 인해 에티오피아 정부는 막대한 양의 공공지출을 군사지출로부터 개발과 빈곤경감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동시에 1990년대 초의 첫 번째 개혁의 장을 마치면서, 에티오피아 정부는 워레다 수준까지의 의사결정 지방분권화, 경제 개혁의 지속, 에티오피아 정부의 개발안들의 국가개발전략으로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실질적인 두 번째 개혁의 장을 시작하였다.

지난 몇년간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SDPRP)의 일반 대중과의 자문 과정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서 정부와 개발원조단체(DAG)간의 활발한 대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SDPRP)에 대한 접근을 조정하고, 정부가 활발하고 긍정적인 대화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에티오피아 원조 공동체의 체계적인 노력이 있었다. 원조수행과정에서 국내 대표의 활발한 참여가 있었다.

에티오피아 정부에서는 빈곤감소전략 개발과 실질적인 개혁의 지속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 개혁의 지속은 원조 공동체로부터의 구체적인 반응을 끌어내어 앞으로 3년간 약 50%의 원조 흐름의 증가로 에티오피아가 사하라사막 남부 아프리카국가의 1인당 평균치에 더욱 가까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융통성의 증가, 빈곤감소에 초점을 둔 개발활동으로의 원조 잔액 이동, 실질적인 증여율의 증가 등을 통해 원조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에리트리아의 분쟁 이전과 비슷한 비율로 양자간 증여의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원조계획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원조국간 Partnership 양측은 지역공동체를 빈곤감소의 관리와 자기 지역개발에 참여시키며 지방의 필요에 기초해서 세워진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SDPRP)의 실행을 약속했다. 지방 통치와 민주주의 강화가 주요난제이다.

이미 Partnership 개념은 주로 상황 요약과 정보 공유 위주였던 단순 원조 조정으로부터 수용 능력 억제를 제거하고 혁신적인 개발 접근들과 함께 정부-원조자가 서로 투명성과 의무 및 책임을 지우는 것을 가능케 하며 체계화된 원조 조정 방법을 통합한 효과적인 개발 원조의 조달을 위한 Partnership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민간사회와 민간분야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Partnership 관계의 균형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빈곤에 관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장기 새천년개발목표(MDG)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공유 의제를 얻어내는 데 필요한 다양한 관점과 경험들을 얻을 수 있다.

과정이 더 투명하고 더 많은 자문아래에서 진행될수록 정부는 다른 개발 활동자의 지원을 얻어내기가 쉽다. 진행이 좀 더 총괄적일수록, 원조자가 지원을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SDPRP)에 포함된 활동에 집중해 주도록 요청하기가 쉽다.

빈곤감소전략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실행되어야만 한다. 빈곤감소는 수용능력 확대와 제도 변화를 위한 장기간의 노력과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과정의 지속을 요구한다. 이것은 지속적인 감시, 조정, 경신을 필요로 한다. 감시체계의 발전은 실행 단계에 우선이 되어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사회에 밀접하게 참여하며 원조자들도 개발 과정뿐만 아니라 미래의 실행단계에 밀접히 참여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원조자간 대화과정의 성공은 빈곤감소와 새천년개발목표(MDG)를 달성하기 위한 더 강화되고 열린 업무 Partnership 관계를 세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소계획(SDPRP)은 정부, 원조자, 민간사회 및 민간분야에 공통 의제 및 상호의무와 책임에 기반을 둔 새 Partnership 관계를 세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내 최초로 유치된 국제기구 세계본부 IVI[1)]

– 최빈국 전염병 예방백신 개발과 도입촉진으로 국제사회 가교역할

손 미 향 / 홍보개발부장(IVI Head of Fundraising)



경구용 백신 접종장면

" Infectious diseases do not know national boundaries.
It is the nature of epidemics to be unpredictable "
Economics of Vaccines: Lessons from SARS
By Professor Barry Bloom
(IVI 전 이사장,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장)

신종 바이러스의 침공과 백신의 개발

인플루엔자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의 공포도 기억에 생생하다. 염려스럽게도 한때 통제가능 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질병들이 다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결핵은 지난해에만 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디프테리아나 황열 같은 질병들도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염병의 속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몇몇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대하고 있다. 그 질문들은 얼마나 심각한가? 이는 통제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얼마나 광범위하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전염 될 것인가? 세계는 앞으로 발생할 신종 전염병을 막고 통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등이다. 백신접종, 또는 예방접종은 이러한 ' 감염성 질환에 대한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공중보건 수단 '으로 인식되고 있다. 백신은 지구상에서 천연두를 박멸하였고, 소아마비를 거의 퇴치시켰다. 유전학을 포함한 생명공학의 발달은 백신의 개발 부분에서도 새로운 장를 열고 있다. 그렇다면 첨단의 백신 과학은 인류가 당면한 이러한 지구적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존 클레멘스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이하 IVI) 사무총장은" 아시아 전역에 조류독감이 퍼져 매우 걱정스럽다. 조류독감은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사망률이 50%에 달하는 치명적 바이러스이다. 현재로서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이 바이러스가 지리적, 시간상으로 더 많이 노출될수록 더 많은 돌연변이 기회를 얻는 것도 사실이다.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인간 바이러스와 재결합하면 커다란 재앙이 될 수 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류독감 백신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전 세계 인구가 사용하기에는 백신이 부족해 개도국에서는 충분한 백신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빈국과 부국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 IVI는" 생명, 희망, 그리고 미래 '를 의미한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 공중보건 대비책은, 백신이다.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감염성 질환은 5세 이하 어린이 500만 명을 포함해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 세계 전체 사망 원인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90퍼센트가 가난한 개발도상국 국민이다. 그러나 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매년 "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계적 개발 경제학자인 제프리 삭스 교수는 가난한 나라들에 주로 피해를 준 쓰나미에 빗대어 이를' 침묵의 쓰나미 '라고 표현한 바 있다.


방글라데시 : 설사병으로 치료중인 어린이

필자는 현재 근무 중인 국제기구 IVI 세계본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국제기구 근무를 통해 얻게 된 세계 질서에 부응하는 업무 활동 및 자긍심을 포함하여 자원 개발 (Resource Mobilisation)을 담당하는 Head of Fundraising으로서 캠페인을 포함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어린 생명을 살리는 미션을 나누고자 한다.

한국에 세계 본부를 둔 정부간 협력기구 IVI

- 세계 백신 안보 노력 - 개도국 빈곤층에 값싸고 안전한 백신 도입에 총력

IVI는 백신과학이 빈국과 부국의 보건상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신념하에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1990년대 초에 시작되었으며,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독립적인 국제연구기관으로 1997년 공식 설립되었다. IVI는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백신의 개발과 도입의 촉진사업에 전념하는 세계 유일의 연구기관이다. 2005년 현재 36개국과 세계보건기구(WHO)가 IVI의 설립협정서에 서명하였다. 연구소는 서울대 연구공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17개국 출신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향후

1) IVI 세계본부의 과학자와 연구진은 특유의 사명감과 꺾이지않는 의지에 ' 전문성 ' 이라는 숨결을 불어넣어 현지조사와 질병예방 등을 통해 생명안전망을 구축, 발병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전세계 보건원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200명까지 충원될 예정이다.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도 매년 1000만 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백신이 부족하여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약 300만 명은 세균성이질 등 설사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IVI는 백신과학을 통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가난한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구하고 있다. 현재 IVI는 세계의 최빈국에서 매년 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각종 질병들에 대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 도입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IVI의 향후 목표는 연구와 기술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고, 신세대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적정한 가격에 도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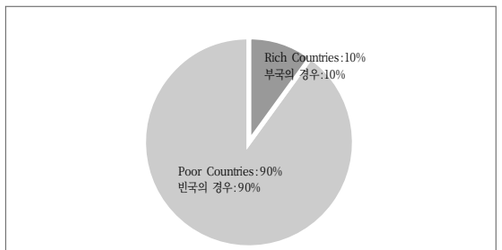
IVI의 연구는 설사병, 중추신경계의 세균감염, 모기로 인한 바이러스성 감염 등에 대한 새로운 백신에 촛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연구사업들은 서울에 위치한 연구소 세계본부의 실험실 외에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디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모잠비크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등에서 수행되고 있다. 앞으로 IVI는 연구대상 질병을 결핵, 호흡기 바이러스 등으로 확대하고, 연구 지역을 사하라 사막 이남지역과 북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IVI의 주요 연구개발 성과로는 빌게이츠재단의 지원으로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등 최빈국형 질병에 대한 백신 개발 및 도입사업을 들 수 있다. 존 클레멘스 IVI 사무총장은 2000년에 예산이 4,000만 달러에 달하는 최빈국질병 프로그램(DOMI)을 빌게이츠 재단으로부터 유치하였으며 또 뎅기백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한 연합체인 소아뎅기백신연구단(PDVI)를 설립하였다. 이 연합체로 2004년 빌게이츠 재단으로부터 5,5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추가로 유치하였다. 또한 클레멘스 사무총장은 특히 각국의 국제회의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홍보대사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별 백신격차 해소가 IVI 설립 목적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는 심각한 ' 백신 격차(Vaccine gap) '가 존재한다. 주로 개도국을 괴롭히는 질병들은 소홀히 취급된다. 유럽과 미국에 새로운 백신이 도입되고 그 백신이 개도국에서 사용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효능이 입증된 백신이 개도국에 도입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개도국에서 오히려 더 절실히 필요한 백신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무수한 인명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3000만 명 이상의 개도국 어린이가 선진국에서는 당연시되는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으며, 때문에 연간 2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고귀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그림1. 부국과 빈국의 감염성 질환에 따른 사망율>
(Infectious Disease Mortality in Rich vs. Poor Countries)



※출처 : 세계 보건 현황 보고서, 2003 (World Health Report, 2003)
※Equity Through Vaccine : 백신을 통한 인류평등

제약회사들은 이윤이 적은 개도국용 백신 개발과 공급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부국들은 빈국의 전염병 확산을 막으려고 할 뿐 백신 개발에는 소홀하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1975년에서 1999년 사이 승인된 1400여 개의 신약 중 단 1%만이 빈국의 질병 치료를 위해 개발되었다고 한다. IVI와 같은 비영리 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에 세계본부를 두고 있는 IVI는 새로운 백신의 개발과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이러한 백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유일의 ' 백신개발 국제기구 '이다. 현재 IVI는 20여 개국에서 특정 질병이 얼마나 심각하며, 개발된 백신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등을 조사함으로써 개도국의 백신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즉, IVI는 개발도상국이 새로운 백신을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들은 백신 도입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IVI는 특정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질병 부담과, 감염경로 등의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한다. 특정 백신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백신 임상평가, 백신이 효과적으로 도입되기 위해 필요한 경제, 사회적 연구 등을 실시함으로써 백신 도입 촉진에 노력한다. 선진국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이라고 해도 개도국에 직접 도입할 수는 없다. 개도국에 안전한 백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직접 백신의 임상 및 효과성 시험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행히 IVI의 백신 테스트를 반기는 나라가 늘고 있다. IVI의 프로그램을 통하는 것이 유일하게 백신을 얻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난 8년간 IVI는 외형적으로 10배가 넘는 규모로 발전하였고 내실화도 이루어졌다. 아시아 빈곤층 공중 보건을 위한 신종 뎅기열 백신개발, 신종 장관독원성 대장균 백신효능 평가, 개발도상국에서 사용되는 백신의 안전도 평가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연구성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연간 15만명이 희생되는 콜레라의 경우, IVI는 경구용 콜레라 사백신에 대한 효과성을 시험중이며, 사하라 이남 (모잠비크) 에이즈 만연 지역에서 실시된 경구용 콜레라 백신의 안전성 및 효능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세계적 의학 전문지인 ' 뉴잉글랜드 저널오브 메디신 (NEJM) 에 게재 되었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한국정부는 쓰나미, 홍수 등 재난에 대비한 범세계적 경구용 콜레라 백신 비축 기금을 지원했다. 또한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실시된 연구의 재분석을 통해 경구용 콜레라 백신의 접종자외 피접종자도 예방효과를 얻는' 집단면역 '효과를 확인했다.

IVI는 또한 연간 20여만명을 앗아가고 있는 장티푸스를 예방하기 위한 Vi 다당류 백신에 대한 개발을 완료했고 Vi 단백결합백신 개발을 진행 중이다. 특히, 연간 120여만명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질을 예방하기 위한 리보좀 백신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이질균의 인체내 면역억제 메커니즘 발견하였고, 연구결과는 미 국립과학원 회보 (PNAS)에 게재되었다.

현재 IVI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위시한 신종 전염병에 대한 연구를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다. IVI라는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전후 어려웠던 시절 국제사회에서 받은 도움을 이제 개도국 어린이를 위한 인도적 백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보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백신 관련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의도 있다.

Ⅰ. 국제백신연구소 개요(www.ivi.int 참조)

□ 설립 목적 및 근거

- UNDP는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빈발하는 질병의 퇴치를 위해 백신연구 및 보급을 담당할 연구소를 국제기구로 설립하기로 함(1993. 1).
- 한국정부는 6개국간의 경쟁을 거쳐 IVI를 유치함(1994. 6).

□ 설립협정 서명 국가

: 36개국 정부 및 세계보건기구(WHO)

- WHO 방글라데시 카자크스탄 네팔 세네갈 부탄 쿠웨이트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브라질 키르지즈스탄 오만 스리랑카 중국 대한민국 파키스탄 스웨덴 에콰도르 레바논 파나마 타지키스탄 이집트 라이베리아 파푸아뉴기니 태국 인도네시아 말타 페루 터키 이스라엘 몽골리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자메이카 미얀마 루마니아 베트남

□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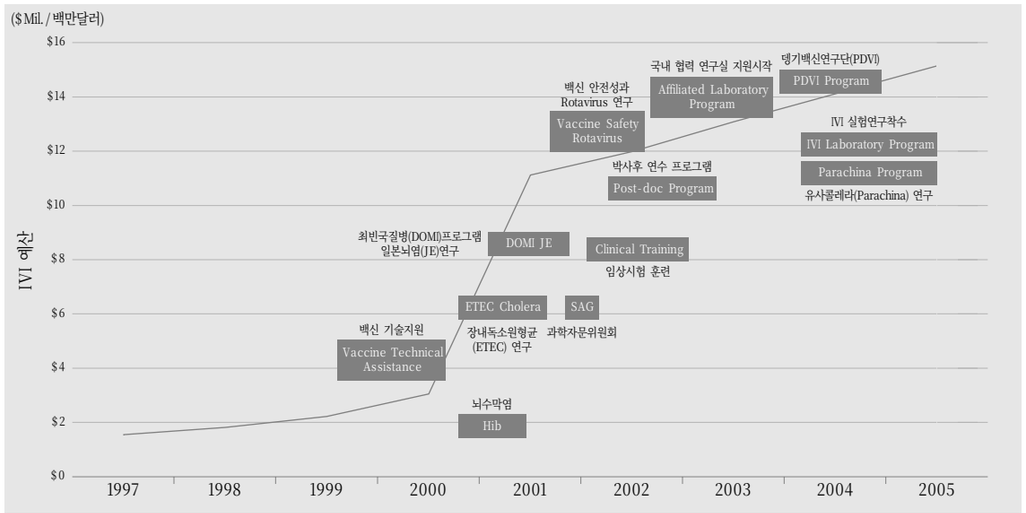
- 신규 백신의 연구개발과 기존 백신의 개량
- 백신 제조업체, 감독기관에게 백신 연구 · 생산 기술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백신제조업체에 신규백신 기술을 이전함.
- 신규 백신의 임상실험 · 평가 및 각국 도입 관련 연구 실시

□ 연구소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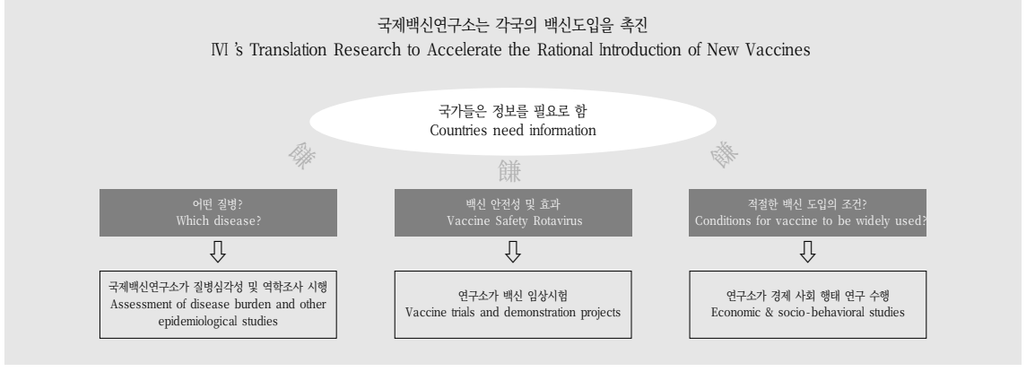
- 소재지 및 시설 규모
  - 서울대학교 연구공원내 본부건물(지하 1층, 지상 5층) 1동 및 실험생산공장 1동(대지 5,000평, 연건평 5,120평)
- 연구소 직원 : 2005년 10월 현재 104명(외국인 31명 포함)

※ 2005년 내용은 2005년 8월 기준임.

<그림2. IVI의 발전과정(Evolution of IVI)>



<그림2. 백신개발 국제기구 IVI의 역할 및 필요성>



Ⅱ. 국제백신연구소 체제

□ 이사회

- 이사회 현황(총 21명, 임기 2년)

□ 기관장 : 존 클레멘스 사무총장

(Dr. John David Clemens)

<표1. 이사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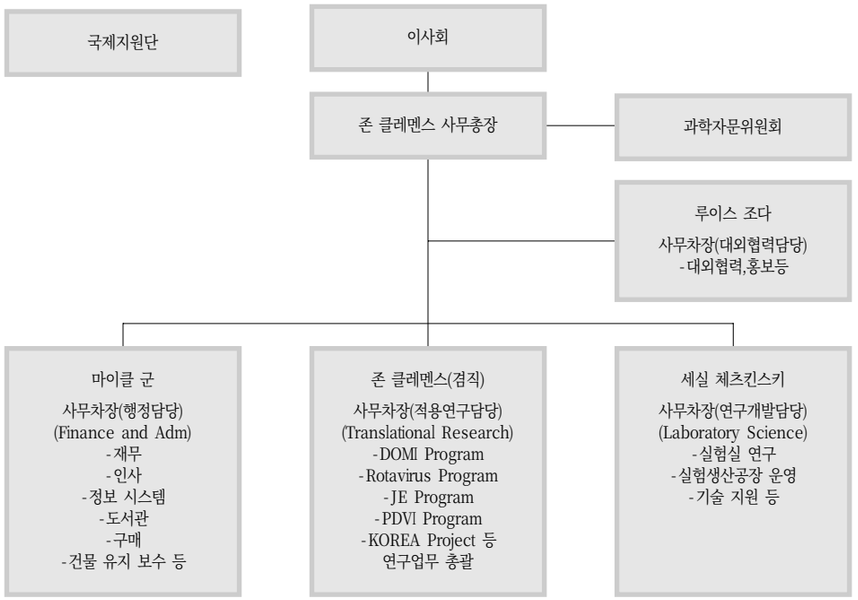
(05. 10 현재)

이사명	현직	비고
Dr. Barry R. Bloom	명예 이사장,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장명예	명예 이사장
1. Prof. Samuel Katz Chairman	미국 듀크 대학교 의학센터 소아과 명예교수	이사장
2. Dr. John D. Clemens	국제백신연구소 소장(당연직)	이사
3. Dr. Shigeru Omi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사무소 사무처장	〃
4. 강경화 국장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정책관	〃
5. 이호인 부총장	서울대학교 부총장	〃
6. Prof. Philip K. Russell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보건대학 명예교수	이사
7. Dr. Ian David Gust	호주 멜버른 대학교 명예교수	〃
8. Prof. Jan Holmgren	스웨덴 고덴버그대 의대 미생물학 및 면역학과 교수	〃
9. Prof. Paul-Henri Lambert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병리학과 교수	〃
10. Dr. Samlee Plianbangchang	세계 보건기구 동남아시아 사무처장	〃
11. Dr. Hanna Maria Nohynek	핀란드 국립보건연구소 백신과	〃
12. Prof. Maharaj Krishnan Bhan	인도 의학연구소 소아과	〃
13. Dr. George Poste	미국 보건 기술 네트워크	〃
14. Prof. Gordon Dougan	영국 임페리얼 컬리지 생물학과 교수	〃
15. Dr. Michel Greco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리용)	〃
16. Prof. Nay Htun	IVI 국제후원단 의장, 유엔 평화대학교 교수	〃
17. Prof. Hui Zhuang	중국 베이징대 보건과학센터 교수	서명국 지명
18. Prof. Ragnar Norrby	스웨덴 감염성질환통제연구소 소장	〃
19. Professor Nguyen Thu Van	베트남 바바이오텍 이사	〃
20. Prof. Umar Fahmi Achmadi	인도네시아 보건부 질병통제국 국장	〃
21. Prof. Bernardus A. M. VAN DER ZEIJST	네덜란드, 네덜란드백신연구소 소장	〃

※당연직 이사:한국정부 지명인사 2인(강경희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 이호인 서울대 부총장) 및 WHO 지명인사 2인, 설립협정 서명국 지명 5인

□국제백신연구소 조직도

<그림3. 국제백신연구소 기구표 (2005.10)>



III.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후원회 현황

IVI 한국후원회는 국제백신연구소(IVI)의 설립·운영을 후원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을 통한 인류복지 증진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되었다. 사단법인 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Korea Support committee for the IVI, 이하 KSC)는 국제기구 IVI를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예방을 통한 인류복지 증진과 국내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8년 12월 설립된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비영리 기관이다. IVI 한국후원회는 IVI 에 연구비 지원, 연구소와 국제 연구기관 및 후원단체와의 교류 협력 증진을 통해 IVI의 인도적 사업을 돕고 있다.

KSC의 명예회장은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맡고 있으며, 회장은 이호왕 박사가 맡고 있다. 특히, 허영섭 한국후원회 이사장(현 녹십자 회장), 조완규 상임고문(전 서울대 총장, 현 생물산업협회 회장), 박상대 총괄이사(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황우석 이사, 조안 리 이사(현 스타커뮤니케이션 회장, 현 땡큐코리아 모금홍보 집행위원장) 등 다수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KSC는 연구소를 위한 재원확보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2. 주요 연혁>

(www.ivi.int 발췌)

날짜	내용
2005. 2.19	총회 개최로 이호왕 회장, 김병수 이사장 선임, 조완규 전이사장 상임고문으로 추대
2004. 11. 30	‘ IVI 후원인의 밤 ’ 개최
2004. 10. 28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참석한 가운데 한국정부 주관으로 IVI 본부 건물제공식 거행
2004. 10. 4	‘ IVI 후원의 밤 ’ 개최
2004. 9. 3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여사 후원회 명예회장으로 추대
2003. 10. 28.	모금 캠페인 착수 보고 및 진행상황 설명
2002. 3. 13.	김재순회장, 조완규이사장, 박상대 상임이사와 서울에서 개최된 IVI이사회(3. 13 ~ 15)에 참석한 이사진 대통령 예방
2001. 10. 18.	조완규 이사장, 박상대 상임이사, 클레멘스 소장, 이희호 명예회장 예방, 운영현황 및 계획 설명
2001. 2. 22.	2001년 제 1차 총회개최, 임기만료 임원(이사4명, 감사 2명) 연임, 상임이사 신설, 정관 변경 등을 의결, 2000년 결산과 2001년 예산승인
2000. 10. 6.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 공고 (재정경제부 장관)
2000. 3. 15.	후원회 조완규 이사장, Barry Bloom IVI이사장 등 국무총리 예방
1999. 8. 18.	국제백신연구소 신축기공식 개최, 명예회장 이희호 여사 후원회 회원 및 IVI 이사 청와대 초청다과회 개최
1999. 5. 18.	연구소 행정, 재정 지원 및 활동계획 심의
1999. 4. 8.	영부인 이희호 여사 후원회 명예회장 추대식 및 축하오찬회
1998. 12. 24.	후원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교육부장관, 제 37호)
1998. 10. 8.	후원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울시 동작교육구청)
1998. 7.	백신연구소 뉴스지 창간호 발간
1998. 6. 29.	창립이사회 개최, 초대 이사장에 조완규 전 교육부장관 선임
1998. 5. 20.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창립총회 및 김종필 국무총리 초청 만찬회 개최, 초대회장에 김재순 서울대 총동창회장 추대

※친선대사 위촉- 알리야 무사(04. 5 쿠웨이트 대사부인)
홍보대사 위촉- 최불암(04. 2), 양희은 (04. 4),
앙드레김(04. 10), 타블로(05. 8)

□회원 현황(2005. 10. 현재 총 78명)

- 명예회장 : 1명, 고문 : 11명
- 회원 : 66명(회장 1명,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20명, 감사 2명 포함)

□주요 업무(2005. 1.~ 10. 현재)

- 2004년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 제출(행정자치부)
- 신입회원 영입 : 김동기 명예교수(고려대), 김정룡 이사장(한국간연구재단), 문국현 회장 유한킴벌리), 박재갑 원장(국립암센터), 성노현 교수(서울대), 이경호 원장(보건산업진흥원) 등

<표3.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임원 및 이사명단>

이사명	현직	비고
이호왕	전 학술원 회장	회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	이사장
박상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총괄이사
조안 리	스타커뮤니케이션스 사장	이사(홍보모금집행위원장)
곽수일	서울대 경영대 교수	이사
구삼열	아리랑 TV 사장	〃
김동기	고대 명예교수	〃
김병수	포천중문의과대학 총장	〃
김정룡	서울대 간연구소 이사장	〃
문국현	유한킴벌리 회장	〃
민병준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
박상철	서울대 의대 교수	〃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	〃
성노현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
양규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이경호	보건산업진흥원 원장	〃
임덕규	영문월간 외교사 회장	〃
장흥순	벤쳐기업협회 회장	〃
허갑범	허내과의원 원장	〃
허운나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총장	〃
황우석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감사
최상태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감사

IV. 국제기구 IVI 모금 홍보 활동

- 어린생명 살리기 범국민 캠페인“ 땡큐 코리아 ”

“ 땡큐 코리아! ”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을 향해‘ 고마워요 ’라고 외치는 소리를 의미한다.

한국은 전후 어려울 때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제 그 동안 받은 도움에 보답하는 뜻에서 국제기구 IVI를 통하여 어려운 나라의 어린 생명을 구할 첨단의 백신 개발과 도입을 위해 범세계적 연구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VI한국후원회는 IVI와 협력하여“ 전 세계 어린이들이 외치는 소리 ”어린생명 살리기 범국민 캠페인 Thank, you Korea! ’(고마워요 한국!)를 국내외에서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다. IVI를 통한 한국인의 국제적 기부는 국가마케팅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IVI의 연구지역(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은 한국의 21세기 유망시장으로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매년 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일본뇌염, 뎅기열 등)으로 인해 소리없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어린생명들을 구하기 위한 IVI의 노력에 동참함으로서 숭고한 인류애를 실천할 수 있다.

‘ Korean Pride! ’- 이젠, 사랑을 수출할 때입니다!

□ 2004년 홍보개발 활동 : 1월에 장애우 바리톤 김동언 콘서트 현장 홍보, 2월에 IVI 사무총장 전염병 특별 세미나 홍보, 8월에 서울국제여성협회 행사 중 캠페인 홍보, 11월에 월간지 마담피가로 주



최 행사, 12월에 문화방송 TV 스팟 광고, 기타 연말에 CBS 라디오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10월 4일에『Thank you, Korea!』후원의 밤을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신일그룹 등의 후원으로 각계 사회지도급 인사 250여 명을 초청하여 개최하여‘ 04 땡큐 코리아 ’캠페인의 공식적인 시작 및 선포하였고, 11월 30일에 두산 중공업, S-Oil / 쿠웨이트대사관 후원으로「IVI 후원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 2005년 상반기 활동 : 2004년 말부터 진행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On-Line 공동캠페인, 5월에 여성마라톤 참여 현장 홍보와 대학생 축제기간동안 홍보 및 자선활동을 성균관대, 연세대, 경희대 학생들의 참여로 함께 했다. 특히, 4월 14일 타니넥스트도어(기빙클럽 2호점)에서 IVI 한국후원회(KSC) 주최로‘ 05 땡큐 코리아 캠페인 킥오프의 밤 ’을 개최하여 후원회 내부 임원 및 잠재후원자인 각계 인사의 참여기회 마련하고 2005 캠페인의 시작을 선포하였다. 8월에는 기빙클럽 5호점이자 메디칼컨설팅 회사인 가이아앤시 주관 자선파티에 캠페인 소개를 하였으며 가이아애씨의 회원병의원을 대상으로 자선파티 개최 및 후원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24일(수)부터 2005년 8월 27일(일)까지 4일간 총 관객 7만 명이 관람한 2005 기독교 사회복지 EXPO에‘ 말씀으로 영혼을, 백신으로 육체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참여, 한국교회의 해외의료선교의 채널로서 IVI를 소개하고 참여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는 래퍼인 타블로를 청년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온라인 세대의 주목을 받았다.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월간지 우먼센스는 IVI 백신개발기금마련 바자를 통해 건강한 어머니들에게 어린생명 살리기 바자를 함께 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IVI의 선한 사명에 동참하는 의미로 수많은 이들의 행사 주관의 도움을 받았다. 지난 10월에는 IVI와 함께하는 이상희 바이올린 독주회를 통해 홍보를, 서울대 학생들 주관으로 대동제 축제기간에 IVI를 위해 바자를, 그리고 IVI 창립 8주년 기념행사 중에 2005 월드미스유니버시티 26명의 평화사절단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전 세계에 IVI를 알리려는 노력중이며 2006년에는 미생물 전시회, IVI 백신개발기금 마련 콘서트 개최 등을 계획 중이다. IVI의 모금 상품으로는 협약식이 체결되는 후원(Funding partnership), 광고 등 매체 협력(Communication partnership), 상품 판매 수익을 후원하는 License partnership, 그리고 단체회원으로 가입 후 연간 만 불씩을 후원하는 GIVING CLUB 등이 있다.

아이들의 작은 손가락 하나만한 투명한 병 안에 담긴 백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간단한 예방 접종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콜레라, 말라리아, 이질 등으로 하루에 16,000명씩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생명 담은 백신 ’이다. 백신접종은 이미 사멸했거나 거의 무기력해진 병원균을 생명체 내에 투여하는 것으로, 백신은“ 가짜 ”질병을 야기해 인체의 면역시스템이 질병과 싸우도록 유도하고 질병의 감염 자체를 막는 것이다.‘ 백신 ’은 가장 효과적이고 저렴한‘ 생명 지킴이 ’이자‘ 사랑 ’이다. 면역이 약한 어린 영아들에게는 치료약보다 오히려 백신이라는 예방책이 더 큰 무기이다.

백신하나 개발하는데 최소한 15년 이상 오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 제약회사 입장에서 오로지 빈국의 아이만을 돕기 위해 비영리 사업에만 전념할 수는 없다. 빈국의 보건당국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선진국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이라고 해도 각기 다른 풍토와 기후를 감안해서 나라마다 체질에 적합한 백신이 도입되어야 하므로‘ 사명감을 가진 전문가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IVI 연구원들은 빈국에‘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낚는 법 ’을 전하고자 한다. 누구나 만들어진 백신을 나누어 줄 수는 있다. 하지만 현지에 적합한 백신을 연구개발하고 연구원을 파견,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제기구 IVI 세계본부 전경, 서울

전염병의 종류와 원인,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해 긴급 지원하고 신종 백신을 보급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등의 연구에 전념하는 기관은 전세계에서 IVI 뿐이다.

백신개발은 세계와 우리이웃을 지키는 길

인류는 새로운 전염병의 위협에 항상 직면하고 극복해왔다.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은 전염병에 대한 인류의 도전과 응전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이 전염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백신은 천연두를 지구상에서 박멸했고 소아마비를 거의 퇴치했다. 신종 전염병 발생시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우선 고려되는 대응책은 바로 백신이다. 백신은 보건복지뿐 아니라 생명공학에서 차지하는 의의도 크다. 인류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사는 개인의 질병을 치료하고 공중보건사업은 지역 공동체를 돌본다. 그런데 백신과 예방접종사업은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사업이며 범세계적 사업이다. 특히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이제 암, 당뇨병 등 난치성 질환을 예방하기위한 첨단백신의 개발노력도 가속되고 있으며, 그만큼 백신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도 크다.

식량이나 석유의 경우와 같이 백신이 심각한 국가경제, 안보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자체의 백신연구개발과 생산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세계 유일의 백신개발을 위한 국제기구 IVI의 본부가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다행한 일이다.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유일한 국제기구 IVI 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첨단 연구시설에서 국내외 과학자들이 긴밀한 협력아래 각종 전염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백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조류독감의 위협이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가운데, 아시아의 어떤 국가도 지역 독감 대유행의 대비에 주도적 역할을 취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웃국가들에 대한 지원노력을 통해 독감 발생 등을 초기에 발견하여 독감 대유행을 통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국민을 독감 대재앙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보건분야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유능한 젊은 과학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한국민을 보호할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한국을 아시아 생명공학 허브로 확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독감 백신의 자체공급과 백신산업의 부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세계 유일의 백신개발 국제기구 IVI를 십분 활용한다면 최고 수준의 백신개발 및 생산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한국 정부는 궁극적으로 발생하게 될 독감 대유행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유형의 독감 백신 개발에 대한 지원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모잠비크 어린이들

대한민국 정부가 IVI를 통해 ODA를 지원하는 것은 또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 IVI가 국제기구이기에 우리나라가 IVI를 통해 다른 나라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 기업들도 IVI를 통해 록펠러, 빌게이츠처럼 도울 수 있다. IVI는 개도국의 백신 도입 및 촉진을 위해 필요한 다정부간 협력 기구로서 한국정부의 ODA 사업 대상 국제기구이다. IVI의 국내과학자들은 세계 공중보건 뿐만 아니라 국내백신 과학과 기초기술의 발전을 함께 이뤄 ODA를 통해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및 SARS 등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백신 과학기술의 기술축적은 국제사회에서의 안정성을 대표하며 국가신뢰도를 높여 ODA를 통해 국가신뢰도까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정부가 유치하고 지원하고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IVI의 유치국으로서 큰 혜택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IVI에 지원하는 ODA는 국제기구 유치국으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명백한 기회인 것이다.



IVI 홈페이지 백신개발 동참하기

생명, 희망, 그리고 미래!!

백신 접종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차원의 문제이며 백신은 평등을 실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대비책이다.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 생명지킴이 ’ 역할을 선도할 때다.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정부간 국제기구 IVI를 통해 세계의 어린이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할 플랫폼이 마련될 수 있다. 백신으로 세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이다. 개도국 빈곤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해 사랑을 전해야 한다. 새천년 개발계획(Millennium Development Goal)의 통로가 될 IVI(‘ Door opener ’) 가 글로벌 연합을 도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인류 공여를 위해 진정한 사랑의 원천인 IVI를 통해 백신개발에 동참하길 바란다.

(문의 : 02-881-1180 / e-mail jsohn@ivi.int / 홈페이지 www.ivi.int)

지구촌나눔운동

(GCS : Global Civic Sharing)

한 재 광 / 지구촌나눔운동 사업부장

1. 개요

지난 1990년대 이후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경제적 위상의 향상과 각종 분쟁, 재해로 인한 난민사태, 2000년대 들어 발생한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전쟁 또 최근의 쓰나미사태와, 파키스탄지진을 거치며 점차 한국사회에서 국제 개발과 구호문제에 대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한국 개발 NGO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이렇듯 90년대 이후 증대되고 있는 전지구적 문제들 특히 그 중심이 되고 있는 빈곤 문제에 대한 시민적인 관심의 부족과 한국시민사회의 제 3 세계에서의 개발활동 경험의 부족 그리고 한국 개발 NGO의 바람직한 모델의 필요라는 시대적인 배경 하에 1998년 12월 10일 창립되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특정 종교의 특성을 띄지 않은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출범한 개발 NGO로써, 지구촌의 빈곤문제해결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에서부터 그 활동을 시작하여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이라크, 이란을 거쳐 동티모르와 스리랑카까지 그리고 국내의 여러 분야에서 그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2. 지구촌나눔운동의 비전과 사명

지구촌나눔운동은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을 돕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구촌 건설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한다.

□<지구촌나눔운동>은 빈곤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가난한 나라에서 직업훈련, 농촌개발, 문맹퇴치 등의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자립을 위한 능력배양을 지원한다.

□<지구촌나눔운동>은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에 대한 원조사업을 포함하여, 그 나라의 시민사회의 발전을 지원하며, 나아가 지구촌이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동반자가 되고자한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세계각지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재난과 전쟁 희생자들에 대하여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자활사업을 지원한다.

□<지구촌나눔운동>은 가난한 나라의 개발과 환경문제, 세계의 남북빈부격차문제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구공동체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 <지구촌나눔운동>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에 참여 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이들을 장차 국내외에서 환경위기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지도력으로 육성한다.

□<지구촌나눔운동>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봉사활동에 참여 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이들을 장차 국내외에서 환경위기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젊은 지도력으로 육성한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정부의 원조정책과 그 내용이 지구촌의 빈곤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실질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민간차원에서의 연구와 정책캠페인을 전개한다.

□<지구촌나눔운동>은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학자, 전문가, 종교인, 기업인 및 일반시민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그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3. 연혁

날짜	내용
1998.12.10	지구촌나눔운동 창립대회 개최
1998.12.17	베트남“한-베트남협력센터”준공식 개최 베트남사업시작
1999.2.18	지구촌나눔운동 사단법인 등록(외교통상부: 제338호)
1999.2.	한국국제협력단 NGO 등록
1999.2.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가입
1999.4.26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
1999.7.20	계간“지구촌나눔운동”소식지 창간
1999.7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대학생해외봉사단 파견
1999.10	“99서울NGO세계대회 '참가“NGO의 활성화”워크숍주관
2000.5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제122호)
2000.5.	지구촌의지 · 보조기지원사업 시작
2000.10.	지구촌시민학교 개강 명예교사교육과정 시작
2000.10	아셈2000민간포럼“ 빈곤과 개발 '분과 주관
2001.2.	몽골유목민돕기캠페인 출범식
2001.4.	필리핀 지역개발사업 시작
2001.12	지구촌 대학생연합회 출범
2002.2	외교통상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제25호)
2002.4	제 1회 한일시민사회포럼 개최
2003.4	이라크난민돕기캠페인 시작
2003.5	이라크긴급구호사업 시작
2003.7	중국 장애인컴퓨터교육사업 시작
2004.1	이란 지진피해주민돕기사업 시작
2005.1	한-베트남장애인재활센터사업 시작
2005.5	동티모르 지역개발사업시작
2005.6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정책분과 주관
2005.8	제 3회 한일시민사회포럼 개최
2005.10	스리랑카 쓰나미피해지역개발사업시작

4. 조직현황

지구촌나눔운동은 강문규 이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사회의 존경받는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이끌어가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사업위원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뒷받침하고, 열정과 성실함

으로 준비된 사무국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구촌 빈곤의 현장인 베트남의 지구촌나눔운동 사업장인 한-베트남협력센터에서는 최의교 소장을 중심으로 4명의 KOICA-NGO봉사단원과 16명의 베트남직원들이, 몽골의 GCS-자르갈란트센터에서는 조현주소장과 2명의 KOICA-NGO봉사단원과 5명의 몽골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또 동티모르와 스리랑카, 인도에서도 현지에서 수고하는 현지 한국인 전문가들과 파트너로써의 협력 관계를 가지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개발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시민그룹과 협력하여 해나가고 있다. 주부명예교사 프로그램인 지구촌시민학교를 ‘ 지구촌시민학교운영위원회 와 지구촌대학생프로그램을 ‘ 지구촌대학생연합회 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5. 사업방향

1) 개발협력사업(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교육, 직업훈련, 농촌개발, 보건의료활동 등 빈곤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업 실시

- 베트남, 몽골, 필리핀, 중국, 동티모르, 스리랑카, 장애인재활사업

2)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

: 빈곤개발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구촌이해와 나눔교육을 실시

- 지구촌시민학교
- 지구촌 대학생 프로그램 (지구촌대학생 캠프, 대학생 탐방단, 대학생 봉사단, 대학생포럼)

3) 조사연구와 정책제언(Advocacy)

: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민간차원의 조사연구와 정책제언

-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연구 및 정책개선활동

4) 긴급구호(Emergency Relief)

: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인한 재난지역의 사람들에게 의약품, 식량, 피난처, 식수, 보건위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긴급한 필요를 공급하는 사업 실시

- 이라크 긴급구호
- 이란지진피해난민돕기

6. 사업내용

1) 개발협력사업

가. 베트남 하떠이성개발사업

①개요

지구촌나눔운동은 지난 1998년 베트남 북부 하떠이성에 한-베트남협력센터를 설립하고 베트남 빈곤퇴치를 위한 개발협력사업을 다음의 3가지 사업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직업기술교육을 통해 베트남 실업청년들에게 보다 폭넓은 취업기회 제공

□베트남 하떠이 지역의 가난한 주민, 장애우, 어린이들의 삶의 질 향상

□민간교류를 통한 한국과 베트남의 선린우호관계 증진

② 내용

□직업훈련 - 목공, 봉제, 컴퓨터 과정 운영

□농촌개발 -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협동사업, 학교 및 보건소 건립, 도로포장, 둑 건설, 암소은행 운영

□베트남 꿈나무교실 만들기 -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조사, 선별 하여 새로운 책 걸상을 제작 지원하고 사후 방문 수리서비스를 실시

□주민문화센터 -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도서관 운영

□대학생봉사단의 활동 - 대학생들이 한-베트남협력센터를 방문, 현지 봉사활동 전개

나. 몽골 축산시범마을사업

①개요

지구촌나눔운동은 2002년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50Km 떨어진 자르갈란트 마을에 GCS-자르갈란트센터를 설치하고“ 소득 높고 살기 좋은 축산마을 ”의 모델을 개발하여 몽골 각지에 보급함으로써, 몽골유목민들이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피하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주민들의 자원인 축산경험과 노동력을 기반으로 축산기반시설 필요자금을 지원하여 소득증대를 꾀한다.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동정신을 고취하며, 스스로 지역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조능력을 키운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기에 위생적이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여 정착생활에 만족하도록 한다.

② 내용

□주민교육사업 -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동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주민학교, 주민워크숍, 농축산기술지도, 이동도서관 등을 운영

□소득증대사업 - 소득증대를 위한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가축은행, 사료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을 운영

□환경개선사업 - 보건의료개선, 교육환경개선,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진행

다. 중국장애인컴퓨터교육사업

①개요 및 내용

지구촌나눔운동은 2003년부터 중국 동북부의 연길, 용정 ,대련에서 중국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 및 결손가정의 자녀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및 사회적 통합을 지원한다.

라. 동티모르 지역개발사업

①개요

지구촌나눔운동은 2005년부터 21세기 최초의 독립국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티모르의 라우템주에서 다음의 세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한다.

② 내용

□동티모르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사업실시 및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

□동티모르의 여성들을 위한 문자교육 및 간단한 경영교육 등을 실시하여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시설정비, 문화교육지원 등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도록 함.

□동티모르의 타 지역에 비해 교육을 통한 소득이 높고, 주민들이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인근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높임.

마. 베트남장애인재활사업

①개요

지구촌나눔운동은 2005년 베트남 하떠이성에서 ‘ 한-베트남장애인재활센터 ’사업을 시작하여 베트남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베트남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전쟁 피해의 고통을 공유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베트남장애인재활센터 ’사업의 목표

- 베트남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베트남 장애인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선진재활 및 지식을 전수한다.
- 베트남 장애인가족들을 대상으로 재활교육을 실시한다.
- 베트남 장애인 재활정책에 모델을 제시한다.
- 한국과 베트남의 민간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한다

② 내용

□한-베트남장애인재활센터 건립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재활 프로그램 진행 : 재활치료, 교육재활, 직업재활(2002년 종료)

□지역중심재활(CBR :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프로그램 진행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전문가 재교육 프로그램 진행

□장애인가족 교육 프로그램 진행

□한국인 민간교류 진행

바. 스리랑카 쓰나미피해지역개발사업

①개요

지구촌나눔운동은 2004년 쓰나미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있는 스리랑카의 피해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개발지원을 통해 재해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② 내용

□소득증대프로그램 : 쓰나미피해 지역주민들을 소규모 그룹화하여 소득증대원을 제공하여 협력하여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사. 필리핀아리엔다지역교육사업

①개요

지구촌나눔운동은 2000년 빈곤으로 인해 기초교육의 기회를 잃어가는 필리핀 도시빈민 어린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들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 개발교육사업

가. 지구촌시민학교

①개요

지구촌시민학교는 2000년부터 시작된 개발교육 프로그램으로써, 어머니들이 베트남과 몽골 등의 이웃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고 초등학교 명예교사로 활동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베트남, 몽골 등 이웃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며 지구촌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하도록 시작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구촌이웃을 사랑하는 학부모운동이다.

② 내용

□국제이해교육 명예교사양성 : 10주 기간의 베트남/몽골이해하기 명예교사교육과정 진행.

□베트남-몽골 스터디투어 :“ 엄마와 함께 가는 베트남/몽골탐방 ”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참가자와 자녀들이 함께 진행 5박 6일 동안 현지초등학교 수업참관, 현지 가정방문, 지구촌나눔운동 사업지 방문, 문화체험.

□명예교사 활동 : 명예교사 교육과정을 마친 학부모들이 초중등학교에서 베트남/몽골 이해하기 명예교사로 파견되어 활동

□방학특별프로그램 : 매년 여름방학“ 몽골친구들과 함께 가는 몽골문화촌 탐방 ”행사를 개최

□인터넷시민학교 운영 : 인터넷시민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베트남과 몽골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

□한일 국제이해교육 워크숍지구촌시민학교는 2002년부터 연 1회 일본국제볼런티어센터(JVC),

* 현장의 소리

베트남 한-베트남협력센터에서 봉제직업훈련을 배우는 학생의 글

저는 봉제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저는 봉제를 배우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아버지의 오토바이뒤에 타고 한-베협력센터에 들어 왔을 때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센터 계신 모든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쉽게 적응을 했습니다. 특히 봉제 선생님 두 분께서 아주 잘 지도해 주셔서 이제는 공업용 미싱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실습 중에 자주 들어오셔서, 수업에 대해 많이 물어 보십니다. 교사가 교육을 잘 하느냐, 이런 시설에 만족하느냐 등등…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제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질문도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까지 다 준비가 된 터라 제게는 완벽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센터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은 센터에서 약 25km 떨어져 있어서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로 월요일 아침 일찍 데려다 주시고 금요일 저녁에 센터까지 데리러 오신답니다. 월요일 봉제를 배우러 오는 이른 아침의 찬 바람이 그렇게 좋은지 전에는 몰랐습니다.

센터에 아주 좋은 것이 또 있습니다. 도서실이 있어서 시간만 나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책 읽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센터에 오면 저녁시간에 무엇을 할까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저녁시간이 책 읽는 것 때문에 매우 빨리 지나 갑니다. 또 미싱 기계도 사용하고 싶지만 아직은 미숙하여 하지 못하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저녁에 연습할 수 있도록 요청하려 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희망하는 사람은 옆에 한국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기술을 확실히 익히기 위하여 전 과정을 끝까지 배우려 합니다.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집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신 한-베트남 협력센터에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에서 충티뚜엣(Trung Thi Tuyet)드림

지구의나무 등의 단체들과 함께 국제이해교육 워크숍을 진행

나. 지구촌대학생프로그램

① 개요

지구촌나눔운동은 2001년부터 젊은이들에게 인류가 직면한 빈곤, 환경위기, 인권과 평화문제에 대한 학습과 대화의 장을 제공하여, 대학생들이 보다 넓은 세계를 내다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안목을 가진 ‘ 지구촌시민 ’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대학생들을 인류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글로벌리더십으로 양성하고자 지구촌대학생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② 내용

□ 지구촌대학생캠프 : 대학생들에게 지구촌의 주요 이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와 경험담을 들음으로써, 인류가 당면한 전 지구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시민사회의 대응에 대해 학습. 또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워크숍을 통해 인류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여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나가는 프로그램.

□ 지구촌대학생탐방단 : 국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이슈에 대한 안목을 넓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구촌해외봉사단과 지구촌대학생탐방단을 모집하고 제3세계로 파견. 이들 대학생들은 개발도상국에 나가 봉사활동을 펼치게 되며, 현지 젊은이들과의 교류, 현지사회/역사/문화에 대한 조사의 기회를 얻음. 또한 지구촌시민교육과 문화탐방을 통해 개도국의 현실을 이해하며 협력과 우호의 대상으로서의 지구촌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임.

□ 지구촌대학생포럼 : 대학생캠프와 해외봉사활동 및 탐방활동을 통해 지구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대학생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구촌을 바꾸어나가기 위하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대학생 스스로의 활동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

3) 조사연구와 정책제언사업

① 개요

지구촌나눔운동은 개발 NGO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인 정책제언 활동(Advocacy)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제언 활동은 개발NGO가 정부나 정부간 기구 등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주장과 제안을 하는 것을 말하며 지구촌나눔운동은 공적개발원조 관련활동을 전개하고있다.

② 내용

공적개발원조(ODA)정책 개선 및 제언활동지구촌나눔운동은 정책제언활동으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정책에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구촌나눔운동은 2002년 16대 대선에서 주요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에게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정책제언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자랑스런나라 만들기 ’운동을 진행하였으며, 2005년 20개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를 결성하여 한국 ODA정책의 개선에 대한 워크숍 개최 및 대외원조법제정 등 구체적인 정책제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지구촌대학생프로그램참가자글

오연금(고려대 노어노문학과 4학년, 지구촌대학생연합회 회원)

지구촌대학생캠프는 학생들이 빈곤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체라 할 수 있는 국제 기구(IGO), 정부 기구(GO), 비정부기구(NGO)의 역할과 한계, 발전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핵심이 되었다. 6월 24일부터26일까지 2박 3일간 초청된 연사님들의 강의를 경청하고,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각각 20명으로 나뉘어진 6개 분과에서는 빈곤 문제에 대한 일반인 및 학생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갖가지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IGO분과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을 이용하여 빈곤 문제를 알리는 사진을 전시하고 동영상을 상영하면서, 안 쓰는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그 모금액을 UNDP와 같은 국제기구에 보내어 그들의 행동을 고무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단순한 모금이 아니라 10원은 식수 한 컵, 50원은 빵 하나, 100원은 밥 한 공기, 500원은 백신과 같이 동전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것이 눈에 뜨였다.

GO분과에서는 KOICA와의 협력하에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았다. KOICA가 지원하고 학생들이 기획, 개최하는 지구촌 시민 페스티벌을 열어 시민들에게 빈곤 현실을 알림과 동시에 KOICA의 대외원조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한다거나, 교과서 내 국제 협력 관련 부분을 늘리고, 정당의 ODA관련 공약 실천 여부에 대해서 학생들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자는것 등이다. 한편, NGO분과에서는 NGO의 활동을 알리고 학생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빈곤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교양 과목을 대학 내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거나, 학점 교류의 방식으로 NGO활동에 대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 외에도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무역게임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한 무역 현실을 체감하고, 지구촌 대학생 연합회와 Oxfam Youth Action의 활동을 알아보며, 지구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한 학생들은 국제적 빈곤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과 함께 적극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학생들의 열정과 참신한 생각들이 현실을 바꾸는 작은 힘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4) 긴급구호

가. 이라크긴급구호

① 개요

지구촌나눔운동은 2003년 전화로 고통받는 이라크인들에게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키고 복구를 앞당기기 위해 이라크 긴급구호 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라크 긴급구호 사업을 통하여 한국과 이라크의 우호를 증진하고, 세계 평화에 대한 한국인의 염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② 내용

□ 바그다드지원 : 2003년 8월부터 9월까지 40ft 컨테이너 3대분의 의약품/의료용품/구호용품을 바그다드시내 사두르시 지역의 추와디르병원, 하비비에병원, 이븐발라디 병원, 까디시에 병원 및 바그다드 남부 도라지역의 병원에 배분하고, 구호물품 및 신발류는 츄와디르 국민학교에서 사두르시 빈민가정, 고아 및 편부/편모 가정에 지원

□ 나시리야지원 : 2003년 9월부터 12월까지 20ft 컨테이너 3대분의 의약품/수술복/의료기기 등 구호

물자를 나시리야 보건당국을 통해 5개 병원에 배분지원

- 2003년 11월 바그다드에서 한-이라크우호친선 세미나 개최
- 2004년 1월 이라크 정치지도자 초청세미나개최

나. 이란지진피해주민지원

①개요 및 내용

지구촌나눔운동은 2003년 11월 이란 밤시 지진피해자들을 위한 모금활전개하여 이란 밤시 와흐다트 지역의 지진피해주민들에게 반영구주택을 지원하는‘ 희망의 집 ’사업을 진행하였다.

5) 기타 :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지구촌나눔운동은 병설기관으로서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을 통해 시민사회활성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은 아시아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연구 및 지도력 개발을 위해 1996년 설립되었으며, 국가와 시민사회에 관한 심포지엄, Asia Pacific Civil Society Forum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은 현재, 일본의 시민입법기구 등과 함께 2002년부터 연 1회 한일시민사회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5년 제 3회 한일시민사회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하였다.

7. 향후계획

1) 개발협력사업의 확대

지구촌나눔운동은 향후 신규 개발협력사업인 베트남장애인재활사업(한-베트남장애인재활센터), 동티모르개발사업, 스리랑카 쓰나미피해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본격적인 사업 수행의 틀을 잡아나가도록 할 것이며, 더불어 기존의 베트남 하떠이성개발사업과 몽골 축산시범마을사업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개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것이다. 베트남과 몽골에서의 사업은 한국과 해당국간의 성공적인 민간개발협력사업의 모델이 될 것을 목표로 전문화해 나갈 것이다.

2) 개발교육사업의 전문화

지구촌나눔운동은 지난 5~6년간 진행해온 지구촌시민학교와 지구촌대학생프로그램을 좀 더 이론적으로 보완하여 전문화해 나갈 것이다. 일반시민인 주부와 학생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시민운동으로서의 개발교육프로그램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또한 일본의 개발교육협회 등 개발교육에 경험이 있는 외국 및 국내의 타단체와 교류 협력하여 실질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협력정책 2005-2-12>

국제협력 동향

발 행	2005년 11월
편집·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전 화	(02)740-5114
팩 스	(02)744-1092
홈 페 이 지	www.koica.go.kr
인 쇄	신라애드/(02)3444-0223

KOICA
한국국제협력단
110-782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Tel. 740-5114 Fax. 744-1092 http://www.koica.go.kr